

일시

2018

12.07 FRI
—
13:00-17:00

장소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01호



2018년 한국이민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이주분야의 국제협력과 한국의 이민자 가족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2018 하반기 한국이민학회 학술대회

2018. 12. 07. FRI. |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01호



PROGRAM

13:00 – 13:20	참가자 등록	
13:20 – 14:20	기획세션	사회: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과 MIMC	
	발표 이병하 (서울시립대학교)	
	토론 문경희 (창원대학교), 한준성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14:20 – 14:30	Coffee Break	
14:30 – 15:45	일반세션 1	사회: 이혜경 (배재대학교)
	가족 동반 가능 외국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시론적 고찰	
	발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신지원 (전남대학교)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유승희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토론 박민정 (IOM이민정책연구원)	
	Korean Children of a Migrant Background in Korea, Chin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발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김현미 (연세대학교)	
15:45 – 16:00	Coffee Break	
16:00 – 17:20	일반세션 2	사회: 설동훈 (전북대학교)
	국제이주 브로커와 한국의 이주 인프라: 노동자, 조선족 및 결혼이주자를 사례로	
	발표 백일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고민경 (이화여자대학교)	
	토론 최서리 (한국이민학회)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차별인식과 우울: 차별대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송영호 (IOM이민정책연구원)	
	토론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이민에 관한 인식 상의 공통점: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발표 신소희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석사졸업)	
	토론 손인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7:20 – 18:00	한국이민학회 정기총회	



기획세션 | 사회: 정기선(IOM이민정책연구원)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과 MIMC	3
발표 이병하(서울시립대학교)	
토론 문경희(창원대학교), 한준성(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일반세션 1 | 사회: 이해경(배재대학교)

가족 동반 가능 외국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시론적 고찰	29
발표 김이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신지원(전남대학교)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51
- 자아존중감,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유승희(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토론 박민정(IOM이민정책연구원)	
Korean Children of a Migrant Background in Korea, Chin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73
발표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김현미(연세대학교)	



일반세션 2 | 사회: 설동훈(전북대학교)

국제이주 브로커와 한국의 이주 인프라:

노동자, 조선족 및 결혼이주자를 사례로 85

발표 백일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고민경(이화여자대학교)

토론 최서리(한국이민학회)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차별인식과 우울:

차별대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97

발표 최영미(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송영호(IOM이민정책연구원)

토론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이민에 관한 인식 상의 공통점: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121

발표 신소희(독일 빌레펠트대학교 석사졸업)

토론 손인서(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사회 / 정기선 |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과 MIMC

발표 이병하 | 서울시립대학교

토론 문경희 | 창원대학교

한준성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과 MIMC¹⁾

이병하 | 서울시립대학교

01 | 서론

전 지구화(globalization) 현상은 상품, 자본, 정보의 교환을 통한 지역 간의 상호의존도 심화는 물론 국경을 넘는 인구의 이동 역시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2015년 현재 유엔 통계를 토대로 추산한 전 세계 이주민 규모는 약 2억 4,400만 명으로 이는 전 세계인구의 약 3.3%에 해당한다²⁾. 이주민의 수적인 증가는 물론 지리적으로도 국제이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이 더 이상 유럽과 북미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은 여타 다른 국제적인 현상과 결합되면서 국제 이주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 사태는 난민 할당을 둘러싸고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갈등을 낳고 있으며, 난민의 급증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경제적 이주민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국가들이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보호로부터 후퇴하고 있다. 국제 이주와 테러리즘이 결합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민정책이 안보화(securitization)하고 있다³⁾. 이처럼 국제이주의 증가로 인한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 혹은 정부와 비정부 기구 간 다차원적인 협력 즉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냉전 시기 국제사회의 관심은 안보, 군사 문제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그 초점이 환경, 문화, 인권 등 보다 다양한 이슈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의 확산은 세계화라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협력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보다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세계화로 인해 주권국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슈가 많아지면서 국민국가는 물론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형의 문제 해결방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해결방식은 환경,

1) 본 원고는 초고 단계로 아직 보완할 사항이 많습니다. 인용을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orld Migration Report 2018*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7), p.2.

3) 송영훈,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4권 1호(2014), pp.195-230.

인권, 국제개발협력 등 새로운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초국가적 이슈영역 중 유독 국제이주 분야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있다⁴⁾.

초국가적 인적 이동이 세계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주요 이민 수용국들도 단독으로는 국제이주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이주는 국민 국가 수준에서 통제, 관리되고 있다. 국가 간의 노동이주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쌍무 노동 협정(bilateral labor agreement)이며, 이에 비해 지역수준의 협력체제는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여전히 미약하고, UN 산하에 국제이주를 담당하는 기구가 없다는 사실이 보여주듯 글로벌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제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이동, 상품의 이동과 더불어 세계화의 중요한 요소인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이동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국제이주는 UN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유엔난민 기구(UNHCR)은 난민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제이주를 결합함으로써 관할 대상과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4년 국제이주를 정기총회의 주요 의제로 채택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에서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인적이동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이처럼 기존 국제기구가 국제이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GCIM), 이주와 발전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FMD)과 같이 '이주와 발전(migration and development)' 분야에서 글로벌한 수준의 대화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19일 유엔 총회는 난민과 이민자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주최하고, 1유엔 전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뉴욕 선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⁵⁾ 이어서 유엔은 2018년 7월 13일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상적인 이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의 초안을 마련하고 후속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한 수준의 협의체들이 제도화된 국제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중요한 점은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흐름은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교수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이하 MIMC) 프로젝트이다. MIMC는 이주, 인권, 안보, 노동경제학, 난민법 등의 학자,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국제이주에 관한 총체적이고 인권 기반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존에 국제이주를 규율하는 국제법 체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의 유형들 모두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권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의 현황을 평가하고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MIMC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쓰여 졌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4) 이선미, “국제이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차원 간 균형의 함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1호 (2008), p.38.

5) <http://www.unhcr.org/584689257.pdf>

2장에서는 왜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이주 분야의 국제 협력에 관한 국제 사례를 글로벌 수준과 지역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4장에서는 MIMC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5장에서는 MIMC의 기여와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MIMC 프로젝트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02 | 이주 분야 국제협력의 저발전

국제이주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연관 지어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왜 국제이주분야에서는 UN 수준의 다자적 거버넌스 체제가 부재한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⁶⁾. 그러나 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국제이주 분야에서 취약한지 왜 다자적 거버넌스 체제가 부재한지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다자적 거버넌스 체제의 부재에는 공감하고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이를 분석하기 보다는 국제이주 분야의 거버넌스 체제를 양자(bilateral), 지역(regional), 다자적(multilateral) 수준에서 그 현황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⁷⁾.

국제이주에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이주의 문제가 이민 송출국과 수용국 양자 관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은 이민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중간 기착지(transit point)에서 수용국으로 이동하기도 하며, 국제이주에 관계된 국가들은 글로벌 인적 자원의 경쟁, 조직적 범죄나 테러리즘, 송금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체제 등으로 인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이주가 내재하고 있는 복잡성은 한 나라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 또한 국가 이외에 비국가 행위자들도 국제이주 관리에 관여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 인도주의적 원조기관, 노조 등이 국가와 상호작용하면서 국제이주의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이주에서 국가 행위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비국가 행위자들의 연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이주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⁸⁾.

이처럼 이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은 잘 일어나지 않는가? 우선 국제이주는 국가의 주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이다. 국제이주는 일반적으로 국민국가에 어떻게 국경을 통제,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던져주기도 하고, 어떻게 이미 유입된 외국인, 이민자들을 주류 사회에 통합시켜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한 사회의 멤버십과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국제 이주로 인한 국민국가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기존 구성원에게 ‘어디까지가 우리인가’ 하는 물음을, 또한 유입된 이민자들에게는 ‘우리는

6) Katheleen Newland,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Migration: Mechanisms, Processes, and Institutions," *Global Governance*, 16(2010), p.331; Khalid Koser, "Introducti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Glob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16(2010), p.302.

7) Alan Gamlen and Katharine Marsh eds., *Migration and Global Governanc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p.xiii.

8) Susan Mart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Global Governance," *Global Summitry*, Vol. 1, No. 1(2015), pp.66-67.

그들에게도 우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⁹⁾. 이처럼 국제이주는 국민국가의 국경통제, 사회통합, 정체성 형성 등 주권의 핵심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거버넌스 체제 형성을 위한 협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민 수용국은 이주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할 동기가 적다. 국제이주는 국내 정치에 있어 민감한 사안이다. 대중들은 국제이주가 공동체에 문제를 동반하는지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익집단들은 국제이주가 동반할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민 정책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정책의 축소를 주장하기도 한다¹⁰⁾. 이주 노동자의 유입으로 노동비용이 감소하여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이주 노동자로 인한 임금 감소, 일자리 경쟁은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동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민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이민 수용국의 사회안보와 같은 비경제적 비용으로 상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인과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국제이주 문제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국제이주를 위한 국제협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국제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국제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이익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국제이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국가들은 많은 경우 이민 송출국이며 동시에 수용국이며, 중간기착지이다. 국제이주에 있어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모호할 경우, 국제협력으로부터 도출되는 합의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다.

국제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국가들 간 힘의 불균형이 심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주요 이민 수용국은 전 세계 정치, 경제 분야에서 일종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민 송출국은 남반구에 속한 저개발국가들이다.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견해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¹¹⁾. 무역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호호혜성이 잘 발견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온 이주 노동자들은 선진국에서 일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개발도상국에 가서 일할 유인이 없다. 즉, 보다 많은 힘과 자원을 가진 선진국이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저개발국가들이 현상 유지의 변화를 원하는 한,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넷 모니(Jeannette Money)와 사라 록하트(Sarah P. Lockhart)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s)에 의해 선진국들이 현상 유지에 드는 비용이 증가할 경우이다. 둘째는 저개발 국가들이 연합하여 국제제도 내에서 숫자를 늘려 선진국을 압박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상호적인 이주의 흐름으로 인해 협력에 드는 비용이 변화하는 경우이다.¹²⁾

9) 이병하, "환대 개념과 이민정책: 이론적 모색," 『문화와 정치』 제4권 제2호(2017), p.7.

10) Gary P. Freeman,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9, No. 4(1995), pp. 881-902.

11) 국제이주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일종의 '설득게임(suasion game)'이다. 협력에 참여하는 두 행위자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 힘이 약한 행위자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반면, 힘이 강한 행위자는 협력할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2) Jeannette Money and Sarah P. Lockhart, "The Paucity of International Protections: Global Migration Governance in the Contemporary Era," *Global Summitry*, Vol.3, No.1(2017).

외생적 충격은 선진국으로 하여금 현상 유지에 드는 비용을 변화시키고 선진국의 선호를 바꿀 수 있다. 외생적 충격은 여러 경로로 발생할 수 있다. 반 이민 세력의 성장은 정부로 하여금 정권 유지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민자 옹호 단체와 미디어 등도 정부의 선호를 바꿀 수 있다. 또한 경제 상황의 변화 역시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계산을 변화시킬 수 있다. 모니와 록하트는 유럽 난민 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터키와의 협상에 나선 것을 예로 들고 있다¹³⁾.

저개발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수적인 우위를 이용한 제도적 힘을 구사할 수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책에 합의하고, 제도적 힘을 가진 국제적 포럼을 결성한 후, 협상을 지속시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이다. 모니와 록하트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선진국들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선진국들은 협약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이주의 흐름들이 비상호적이지만, 간혹 상호적인 흐름을 보일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경제수준, 임금 수준, 더 나아가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은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을 상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걸프 국가들 사이의 인구 이동은 상호적 흐름의 사례로 이러한 국가들 사이에는 이주를 위한 국제협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모니와 록하트는 주장한다¹⁴⁾.

그러나 모니와 록하트가 주장하는 이주 분야 국제협력의 가능성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에는 여전히 국가 주권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국가 주권의 논리를 양보하고 협력에 나서도록 국가들을 유인하는 국제제도와 국제법 체제는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기존 선행 연구들은 국제이주 분야에서 다자적 거버넌스 체제는 없지만, 앞서 서술한 GCIM이나 GFMD와 같은 비공식적 대화체들이 등장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부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로 이주와 발전(migration and development) 분야의 거버넌스 체제 발전을 들고 있다. 또한 글로벌한 수준이외에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체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⁵⁾. 하지만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형성이 저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03 | 이주 거버넌스 국제사례

본 장에서는 국제이주의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제이주는 공식적 다자주의를 통해 규율될 수 있다. 자발적 이주와는 좀 다르지만 유엔난민기구와 난민협약을 축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지역 수준에서 ASEAN과 같은 지역기구를 통한 협력도 있을 수 있다.

13) *Ibid*, pp.52-53.

14) *Ibid*, pp.60-63.

15) Sonja Nita, *Regional Migration Governance: A Comparative View*, (Geneva: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2013), pp.1-2.

국제이주는 국제인권규범과 같이 국제사회의 각 분야에 내재된 규칙, 규범 등에 의해 규율되기도 한다. 또한 GCIM이나 GFMD, 지역협의체(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처럼 비공식적 대화체를 통해 협력을 모색하기도 한다.¹⁶⁾

가. 글로벌 수준의 이주 거버넌스 현황

1) 글로벌 수준의 국제기구

앞서 서술하였듯이 유엔 산하에는 국제이주를 전담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이주기구, 유엔난민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이 국제이주 분야의 거버넌스 체제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1951년 설립되어 점차 글로벌 수준에서 국제이주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자리 잡았다. 국제이주기구는 ‘인도적이고 질서있는 이주가 이주민과 사회 모두에 유익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이주기구는 이주에 관한 이해증진, 이주관리, 이주를 통한 사회발전, 이주자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반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¹⁷⁾

국제이주기구는 세네갈, 케냐,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태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9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각 회원국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¹⁸⁾.

국제이주기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는 우선 이주와 개발을 들 수 있다. 국제이주가 동반하는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두뇌 유출이기 때문에 국제이주기구는 국제이주가 이민송출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주자가 이민 송출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송금 관리 프로그램,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급 이력의 귀국 및 재통합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이주기구는 점차 국제이주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 난민, 노동이주자 등 여러 유형의 이주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 자문, 언어교육, 영사지원, 이주노동자 선발 등 회원국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국제이주 과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는 밀입국, 인신매매 같은 불법 이주 문제를 해결하여 국제이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글로벌, 지역, 국가 수준에서 효과적인 이주 관리를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이주기구는 각국의 이민 정책 수립, 법제도의 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 관련 문서 체계, 정보시스템 구축, 생체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이주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16) Alexander Betts ed., *Global Migration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7) 이신화, “국제기구와 인도적 의제: 이주 및 난민 문제,” 박홍순·서창록·박재영·이신화 공저,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UN인권(현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서울: 오름, 2015), p.209.

18) 위의 글, p.209.

국제이주기구(UNHCR)는 과거에 비해 회원국의 수, 예산 등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개별 프로젝트에 기반 한 기금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이 있다. 일례로 이주자 귀환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이 국제이주기구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은 유럽 국가들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는 국제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국제이주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금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¹⁹⁾.

나)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1950년 난민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수백 명만의 직원을 가진 한시적 기구였지만 현재는 난민, 비호신청자, 실향민, 무국적자 등의 보호를 책임지는 연간 예산 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국제기구로 성장하였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협약을 중심으로 난민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협약 당사국들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며 난민 캠프 등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문제에 관한 의제 설정과 규범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포럼과 대화체를 운영하고 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프로그램은 난민캠프의 운영이다. 1980년대 이래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이곳에 식량, 의류 등을 공급하는 것이 난민 보호를 위한 주요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난민캠프는 한시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수단이 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캠프는 점차 선진국들이 자국으로 난민이 유입되지 못하게 하고 후진국들에 이들을 가두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난민캠프는 장기화되고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점에서 많은 이들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도출하고 집단행동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유엔난민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과거 냉전 시기 정치적인 대결 구도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비정치적 성격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비정치적 성격은 오히려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국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정치적 역량과 의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²⁰⁾.

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국제이주기구와 유엔난민기구에 비해 국제이주에 관한 활동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이주 분야에서 중요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이주에 관한 글로벌한 규범을 설정한 후 각 국가들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 즉 ILO의 국제조약들은 글로벌 수준 혹은 지역 수준에서 각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범들을 국내 법과 정책에 담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준거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채택된 노동이민에 관한 다자간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국제노동기구는 국가들이

19) 이신화, “국제기구와 인도적 의제: 이주 및 난민 문제,” 박홍순·서창록·박재영·이신화 공저,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UN인권(현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서울: 오름, 2015), p.213.

20) Alexander Betts and Paul Collier, *Refuge: Transforming a Broken Refugee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p.219-222.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고용, 보호 등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민자들의 사회적 보호를 향상시키고 인신매매를 방지하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2011년 6월에 통과된 ILO의 가사노동자에 관한 국제협약은 가사노동자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²¹⁾.

2) 국제이주 관련 인권규범

국제인권규범은 국제이주 분야에서 이주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모든 사람이 고문, 비인간적 대우, 노예, 강제노동, 아동 노동, 불공정한 재판 그리고 사생활의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에 관계없이, 시민과 외국인의 구분과 상관없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건강, 주거, 교육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킬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노동권에 있어 집단 교섭, 사회 보장, 공동한 노동조건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건강권의 경우 국가는 최소한 모든 사람에게 응급 치료를 제공해야 하고 소수자, 비호 신청자, 불법 이민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n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은 이민자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비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도 이주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착취, 고용과 시민권 취득 시 차별 철폐, 농촌 지역에서의 여성 차별 철폐 등은 이주 여성의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조항들이다²²⁾.

국제인권규범은 글로벌한 현상으로 대두된 국제이주의 흐름 속에서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이주에 관한 공통의 원칙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기존의 국제인권규범은 국제이주의 시대에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으로 기능하지는 못했다. 다른 목적을 가진 국제인권규범에 의존한 채 이주민의 인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인권규범은 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²³⁾.

3) 글로벌 수준의 대화체

21세기 들어 국제이주 분야에서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대화체들이 등장하고 있

21) IOM 이민정책연구원, 『동아시아 국제이주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해외동향분석: 동남아시아 내 노동이주를 중심으로』,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p.33.

22) 이병하,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이주민 인권,”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4집 1호(2014), pp.274-275.

23) Global Policy Initiative in Columbia University,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17), p.5.

다. 이와 같은 대화체들이 실질적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한 국제이주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글로벌 수준에서 다양한 대화체들이 형성되어 왔지만, 이들의 주제는 크게 비합법 이주와 같은 이민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이민수용국과 송출국에 미치는 이주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이주민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은 글로벌 수준의 대화체들의 주요 논의 사항이다²⁴⁾.

가) Berne Initiative(2001-2004): 스위스 정부의 주도로 결성되었으며 국제이주 관리를 각 정부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이주 관리를 위한 근본적 원칙 논의하고 효율적인 이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2003-2005): 스위스와 스웨덴을 공동 의장국으로 하여 30개국이 참여하였다. 국가, 지역, 글로벌 수준에서 국제이주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모색하였다.

다) UN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2006):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과 함의 논의하였고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국제이주와 개발에 관한 결의안(A/RES/61/208)을 도출하였다

라)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2007-현재): 국제이주 분야의 대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프로세스를 모색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프로세스 외에 시민사회의 참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마) UN High-level Dialogue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2013): 유엔 총회에서 이주 관리와 이민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A/RES/68/4)을 도출하였다.

바) UN High-level Meeting on Addressing Large Scale Movements of Refugees and Migrants(2016): 국제이주 분야 최초의 국가 정상간 회의로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뉴욕 선언’을 도출하였다. 뉴욕 선언은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에 기초하여 하며 국가들은 대규모 국제이주를 관리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나. 지역 수준의 이주 거버넌스 현황

1) 지역협의체

글로벌 수준의 국제이주 거버넌스의 발전이 점차 진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서 국가들은 국제이주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수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수준에서 국제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방식은 지역협의체(Regional Consultative Process: RCPs)이다. 지역협의체는 국제이주 분야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공유

24) 이와 관련해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orld Migration Report 2018*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7), pp.137-138 참조.

와 토론의 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협의체는 1984년 ‘이주, 비호처, 그리고 난민에 관한 정부간 협의(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Migration, Asylum, and Refugees)’로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이후 많은 지역협의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역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특정 국제이주 사안에 초점을 맞춘 지역 내 회의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며,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과정임을 강조한다. 둘째, 지역협의체는 비공식적이다. 이는 참가자들이 국익을 대변하여 협상을 하는 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지역협의체는 비구속적이다. 참가국들은 협상을 규율하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합의의 실행에도 의무가 없음을 강조한다. 넷째, 지역협의체는 오로지 국제이주 이슈만을 다루기 위해 개최된다. 다섯째, 지역협의체는 ‘지역’간 협의임을 강조한다. 지역은 지리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국제이주 분야에 뜻이 맞는 국가들도 지역으로 묶여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지역협의체는 지역기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역기구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²⁵⁾.

지역협의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제 설정(*agenda setting*)으로 지역 맥락에서 이주 문제를 토론할 준비가 된 국가들 사이에 공통의 기반을 조성하고 발전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협의체에서 다룰 이주 문제에 관한 공통의 용어와 개념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슈를 정의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합의 구축(*consensus building*) 단계이다. 국가들 간의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이주의 세부 분야에 관한 입장을 수렴해나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법,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각 국가 수준 혹은 지역 수준에서 이주를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에 변화를 도출하고 지역협의체의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이다²⁶⁾.

가) 의제 설정 단계: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협의체는 신뢰 구축을 위해 비공식성(*informality*)을 강조한다. 과거 지역협의체 사례를 보면 공식적인 회의 일정 이외 회의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들이 국제이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신뢰 형성에 큰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²⁷⁾. 이러한 비공식성은 국가 간의 상호 접촉을 증가시켜 지역 내 이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공식적인 일정과 토론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 내 국제이주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주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와 정보를 형성, 공유하는 작업들은 많은 경우 공식적인 일정과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지역협의체의 아젠다 세팅 단계는 비공식성과 공식성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협의체의 역동성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25)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Regional Inter-State Consultation Mechanisms on Migration: Approaches, Recent Activities and Implications for Global Governance of Migration*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3), p.16.

26)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n Assessment of Principal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 on Migration*(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0), p.15.

27) *Ibid.*, pp.19-20.

나) 합의 구축 단계: 국제이주는 국제정치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가 간 견해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유 무역이 국가들 사이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일반적 합의를 통해 세계무역기구를 출범 시킨 국제 무역 분야와 달리, 국제 이주는 이와 같은 국가 간 일반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국제이주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가를 위한 어떠한 이익이 파생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는 국가 간 협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쉽게 정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국제이주에 있어 국가 간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을 통한 합의 도출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지역협의체가 강조하는 비공식적 논의는 신뢰 구축을 통한 합의 도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협의체의 비공식성은 각 국가의 대표자로 하여금 국가 간 대화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공식적 합의와 입장을 도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해 국가 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미국은 Puebla Process에서 위와 같은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멕시코가 단순한 이민 송출국이 아니라 이민 송출국임과 동시에 이민 수용국으로서 남미로부터의 이민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바 있다. 또한 중동 국가들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잠재적 이민자들의 최종 목적지로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호 인지하고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였고 Bali process를 통해 참가자들은 공식 회의에서는 거론하기 어려웠던 로힝야(Rohingya) 문제를 토론하기도 하였다(IOM 2010).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 국가들은 국제이주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형성하기도 하고, 상호 입장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²⁸⁾.

다) 법제도 및 정책 변화 단계: 지역협의체가 국가 수준 혹은 지역 수준에서 법제도 및 정책적 변화를 낳았는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협의체들은 회의의 목적을 정보 교환으로 한정 짓기 때문에 지역협의체가 한 국가의 정책 변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의체는 최소한 법제도 및 정책 변화를 위한 국가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협의체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경우 지역협의체의 이주 관련 워크숍과 세미나는 국제이주 실무자들에게 이주 관리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많은 국가에 있어 국제이주는 새로운 행정 분야이다. 따라서 지역협의체는 새로운 행정 영역을 발전시켜야 하는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국경관리, 이주 관련 데이터 형성 및 관리, 이민 정책 수립 등 이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떤 경우 지역협의체는 새로운 정책과 법제도 정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South American Conference on Migration(SACM)은 아르헨티나 정부로 하여금 2004년 National Migration Act를 제정하도록 했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정부가 숙련 이민자 정책을 고민할 때,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Migration, Asylum and Refugees(IGC)는 이들 정부로 하여금 미국과 캐나다 정부 정책을 참고하도록 도움을 준 바 있다²⁹⁾.

2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n Assessment of Principal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 on Migration*(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0), pp.22-23.

29) *Ibid.*, pp.27-31.

랜달 한센(Randall Hansen)은 국제이주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 지역협의체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지역협의체는 국제이주 이슈에 있어 공통의 이해를 증진시켜 국가 간 신뢰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국가들 간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화시킴으로써 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협의체는 국제이주를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정책,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³⁰⁾.

〈표 1〉 전 세계 주요 지역협의체

지역협의체	회원국	주요 논의 분야
유럽과 구 소련 지역		
Budapest Process	49개국	남유럽, 동유럽, 흑해 지역 등에서 질서 있는 이민 관리 시스템 구축
아메리카, 캐러비언 지역		
Puebla Process	11개국	- 이민정책과 관리 - 이민자의 인권 - 이민과 개발
South American Conference on Migration(SACM)	12개국	- 이민과 개발 - 디아스포라 - 이민자의 권리 - 정보 교환 - 이민 통계 - 인신매매
서 지중해 지역		
5+5 Dialogue	10개국	- 이민 동향 - 비합법 이주 - 이민과 개발 - 통합 - 이민과 보건 - 이민자의 권리와 의무
Mediterranean Transit Migration Dialogue(MTM)	45개 파트너국	- 역량 형성 - 프로젝트 운영 - 프로젝트 결과 전파 - 권고안 구체화
아프리카 지역		
Migration Dialogue for West Africa(MIDWA)	15개국	- 서아프리카의 평화 증진과 이민자 권리 - 개발에 있어 이민자의 공헌 - 이민 송출국의 빈곤 감소 - 지역 내, 지역 간 협력

3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Regional Inter-State Consultation Mechanisms on Migration: Approaches, Recent Activities and Implications for Global Governance of Migration*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3), pp.15-16.

지역협의체	회원국	주요 논의 분야
Migration Dialogue for Southern Africa(MIDSA)	15개국	• 비합법 이민 • 이민과 개발 • 이민과 보건 • 이민 관리에서 역량 형성 • 강제 이주 • 노동 이민 • 이민 정책, 데이터 수집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 on Migration(IGAD-RCP)	6개국	• 이민 정책의 정합성 • 아프리카의 이민 정책 프레임워크 실행을 위한 역량 강화 • 이민 관리를 위한 협력 개선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지역		
Columbo Process(CP)	11개국	• 해외 기간제 계약 노동자 보호 • 노동 이민의 이익 최적화 • 역량 형성, 데이터 수집
Abu Dhabi Dialogue	20개국	• 계약 노동의 매 단계마다 책임성 규정 • 프로젝트 설정 • 기간제 계약 노동자를 위한 지역 내 다자적 프레임워크 구축
Intergovernmental Asia-Pacific Consultations on Refugees, Displaced Persons and Migrants(APC)	32개국	• 난민, 실향민, 이민자 등을 포함한 인구 이동과 관련된 이슈
기타		
Bali Process	44개국	• 인신매매 관련 지역 협력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on Migration, Asylum and Refugees	17개국	• 난민신청자, 난민 인정과 관리 • 이민과 통합

출처: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 on Migration(RCPs)*,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0) p.4 참조.

다. 이주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초국가적 인적 이동인 국제이주를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단계이다. 오랫동안 국제이주기구, 유엔난민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이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국제이주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이제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등장하기 시작한 글로벌 수준의 대화체들은 향후 국제이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유엔 차원의 노력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이주기구나 유엔난민기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정적 독립성과 자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적 역량의 강화를 통해 이민 수용국과 송출국 사이에 놓인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국제이주 관련 인권규범도 이주민의 인권 보호라는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주 관련 규범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1세기 들어 다양한 글로벌 수준의 대화체가 대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제도화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수준에서는 국제이주를 관리하고 규율하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여전히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부재하거나 미약한 경우 지역 수준의 기구와 공동체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곤 한다. 그러나 국제이주 분야는 유럽을 제외하면 지역 수준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신 지역협의체 방식이 그 동안 지역 차원의 국제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상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낳았다. 우선 정기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회원국 간의 상호 이해에 기반한 신뢰를 구축하였다. 또한 실무적인 수준에서 국제이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워크숍과 포럼 등에 참가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역량을 발전시켰다. 국가를 넘나드는 국제이주의 속성 상 국제이주를 위한 통계와 정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데 지역협의체는 국가들로 하여금 신뢰성 있는 자료와 정보를 생성, 공유하는 중요한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역협의체는 앞서 서술한 의제 설정과 합의 구축 단계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나 마지막 단계인 법제도 및 정책 변화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협의체의 핵심 요소인 비공식성이 앞선 두 단계에서는 신뢰 구축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지역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비공식성과 비구속성으로 인해 참가국이 협의 내용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제이주에 관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논의할 때 어떻게 비구속적인 지역협의체를 통해 구속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04 |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MIMC)의 개요

MIMC는 세계화의 시대에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이 증가하고 그 패턴과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글로벌한 법적 체계가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MIMC는 글로벌 모빌리티(global mobility) 개념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관광객, 유학생 등 이주에 대한 유엔의 정의로 파악되지 않는 인구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일군의 학자들은 글로벌 모빌리티(global mobility)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글로벌 모빌리티는 체류 기간 혹은 목적에 어떤

문턱을 설정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이 개념을 활용한다면 1년 이하로 체류하는 관광객, 사업가, 유학생 등 국제적 인구 이동의 동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이주의 글로벌 레짐에 대한 논의가 이주노동자, 난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MIMC는 글로벌 모빌리티 개념에 근거한 국제이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MIMC가 글로벌 모빌리티 개념에 근거하여 보다 확장된 형태로 국제이주에 대한 국제법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도일 교수는 난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족한 법적 보호가 MIMC 프로젝트를 출범하게 된 주요 동인임을 말하고 있다³¹⁾. 강제이주자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다양해지고, 난민과 이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과 유엔난민기구를 축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일 교수는 전 세계 이주민의 절반이 이주노동자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 분야는 여전히 악한 국제법 레짐 하에 규율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²⁾ 이러한 맥락에서 MIMC는 이주민과 난민을 규율하는 국제법적 프레임워크가 현실과의 간격을 보이고 있으며, 복잡한 국제이주의 양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MIMC의 총체적 접근법은 이주민의 범주를 방문자, 유학생, 관광객, 노동이주민, 사업가, 장기 거주자, 가족 구성원, 비호신청자, 난민 등으로 세분하고 각 범주에 맞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데서 잘 드러난다. 전체 8장에 걸쳐 213 조항으로 구성된 MIMC는 이주민의 범주를 다각화하고 이들을 하나의 단일한 프레임워크에 놓음으로써 글로벌 모빌리티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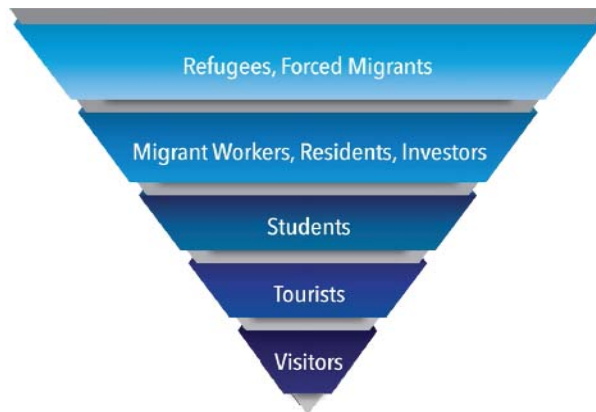
MIMC는 서문에서 기존의 조약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보충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조약 등 기존에 이주민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국제법 조항들은 MIMC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되지 않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MIMC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이주민 집단의 권리를 누적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제 1장의 방문자에 대한 규정은 모든 이주민 집단에 적용되고 이후 각 이주민 집단의 특수성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제 2장은 여행객의 권리를, 제 3장은 유학생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 4장은 이주노동자, 투자자, 거주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한 규정을 먼저 밝힌 후, 등록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한 추가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31) Michael Doyle, "Commentaries: The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56, No.2(2018), pp.219-220.

32) Michael Doyle, "Commentaries: The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56, No.2(2018), pp.219-220.

〈그림 1〉 MIMC의 누적적 권리 설계



출처: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p.8

제 8장은 MIMC의 효율적 이행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약 기구를 소개하고 있다. 제 8장은 위원회의 설립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MIMC의 검토, 적용,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위원회는 MIMC 체결국이 MIMC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러한 조약 이행 모니터링 절차는 시민사회, 이주민, 이주민 옹호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이주민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그림 2〉 MIMC의 국제협력 메카니즘



출처: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p.10

제 8장에서 주목되는 점은 국제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Mobility Visa Clearing House와 Remittance Subcommittee이다. Mobility Visa Clearing House는 조약 체결국, 기업, 비정부기구, 개인들이 접근 가능한 ‘안전하고, 질서 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이다. Mobility Visa Clearing House를 통해 조약 체결국은 다음 해 자신들이 제공할 비자에 대한 정보, 양식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공유하게 된다. Remittance Subcommittee는 IOM, World

Bank와의 협력 속에 설치되며 송금 비용을 낮추는데 필요한 조사와 권고를 하게 된다.

또한 국제난민레짐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책임분담 측면을 구체화시킨 것도 주목할 만하다. MIMC는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하에 조약 체결국이 매해 회의를 개최하여 난민 보호를 위한 책임 분담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약 체결국은 난민과 강제이주자를 위한 재정착 비자의 수를 밝히고, 다음 해 얼마만큼의 예산을 이들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05 | MIMC의 기여와 한계

MIMC는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주 분야의 국제법적 체계와 국제규범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총체적 접근법을 통해 파편화된 국제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논의 과정을 통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성, 이주민과 난민 보호의 의무 등 중요한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권리 기반 접근법을 통해 경제적 이주민, 강제 이주민, 유학생, 여행객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협력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은 보다 나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들로 하여금 주권을 일정 부분 양보하게 하는 것이다. 파편화된 국제법 체계를 총체적 접근법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의 단일한 틀에 모으는 과정을 통해 이주민과 난민 보호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진전된 국제법 체계로 나아가려는 ‘혁신적 성문화(innovative codification)’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적 성문화’ 과정은 기존 법들의 단순한 수집과 나열 수준에 그칠 수 있지만, 기존의 법들을 새로운 이주민 범주와 원칙에 따라 재배열해봄으로써 무엇이 인권 보장의 사각지대이고, 어떤 제도적 요소가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게 도와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MIMC는 이주민과 난민 보호에 관련된 국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의 행위자들에게 이주와 난민 분야를 규율하는 공통의 기반을 제공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MIMC가 본격적인 협상과정에 돌입할 때 단일한 이주 및 난민에 관한 협약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이주와 난민 분야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국가들이 보다 많이 접촉하고 교류함으로써 국가들은 이주와 난민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할 수 있고,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많아질 수 있다. 이 점에서 MIMC는 이주와 난민 분야의 국제협력을 제도화하고 국가들이 제도화된 협상 과정 속에서 국가의 평판을 고려할 동기가 늘어나게 하여 국제협력의 네트워크에 보다 연관되도록 만들 것이다.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협력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고려하면 모든 국가는 서로 경쟁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기 때문에 쉽게 협력하지 않는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가들은 협력을 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현실주의는 이러한 협력은 지속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현상이며 강력한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제협력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MIMC는 과연 어떻게 국가들의 합의와 비준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주와 난민 분야의 국제협력에 놓여 있는 정치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요 이민 수용국이 비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협약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MIMC의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클 도일은 MIMC의 비준 앞에 놓인 현실적 난관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과거 이주노동자 협약보다 이민 수용국의 이익을 더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³⁾. 예를 들어 한시 이주노동자에게 복수비자를 허용하고(104조), 순환 친화적인 비자 정책을 통해(110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난민 보호에 있어 책임 분담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국가들의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키고 투명성을 높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마이클 도일의 주장처럼 MIMC에 이민 수용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장기적으로라도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인 요인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과거 이주노동자 협약의 사례를 보면 국가들은 다양한 이유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108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위의 갱신을 보더라도 많은 국가들은 반복되는 갱신 절차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순환원칙에 기반 한 방문노동자 제도를 손상시켰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교육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규정한 85조 d항은 그것이 이주노동자와 가족에 관한 것이더라도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MIMC의 비준을 거부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복수 비자(104조), 한시 이주노동자에게 5년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109조 2항, 7년 이후 조건을 충족하는 한시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109조 4항 등은 비자에 관한 국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떤 형태의 조약이나 포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는 캐나다 같은 나라로 하여금 MIMC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공화주의적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이민자 자녀에게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저해하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는 87조 2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MIMC는 국제이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한 사례로 국가 간의 협력의 습관을 기르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선호를 바꾸어야 한다. 선호를 바꾸는 대표적인 전략은 사안 연계(issue-linkage)이다.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상에서 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다면, 사안 연계를 통해 다른 사안에서 공통의 이익을 발견할 수 있다. 상품 A에 갑국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품 B에서 양보한다면 갑국과 을국은 타협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점에서 MIMC는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모빌리티 개념에 기반 한 이슈 연계를 보다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제이주 분야의 국제레짐에 대한 논의는 크게 국제 난민 레짐과 이주 노동 레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 난민 레짐은 책임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주 노동 레짐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모빌리티 개념에 기초한 국제 여행 레짐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 여행 레짐은 1920년 Paris Conference on Passports and Customs Formalities 이래

33) Michael Doyle and Emma Borgnas, "The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Finding a Path to a Better International Mobility Regime," *Global Summitry*, Vol.4, No.1(2018), p.9.

오래된 국제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행객, 비즈니스 종사자들 등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제적인 인구 이동의 흐름을 촉진시키는데 많은 국가들이 협력해왔음을 의미한다. 특히 관광 산업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여행 레짐을 통해 국제협력의 습속이 심화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 난민 레짐과 이주 노동 레짐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가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지렛대로 삼아 교착상태에 빠지기 쉬운 이주노동과 난민보호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들은 관광객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경제적 이익을 보고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 1970년대 각종 항공기 납치 사건과 2001년 9/11 사태는 국가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관리된 여행 레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즉 국제 여행 레짐은 국제 이주의 다른 레짐과의 연계 속에 난민 레짐과 이주 노동 레짐의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국제 여행 레짐과 여타 레짐들과의 연계성을 간과한다면 질서 있는 국제이주 관리에 많은 허점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잠재적 난민신청자와 이주노동자들인 난민 레짐의 루트와 이주 노동 레짐의 루트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여행 레짐에서 갈아타고 다른 레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레짐들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MIMC는 국제이주의 복잡성과 법체제의 간극을 메우는데 실패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MIMC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 글로벌 모빌리티에 주목하여 이주노동과 난민 외에 새로운 형태의 이주를 포괄하고자 하는 점은 MIMC가 가진 장점 중 하나이다. 하지만 글로벌 모빌리티 레짐과 이주 노동 레짐, 난민 레짐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속에 국가들의 참여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면, MIMC는 기존 이주 관련 국제법 체제의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말 것이다.

06 | 결론

본 논문은 국제이주 현상의 심화와 복잡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이 저발전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주 분야 국제협력의 현황을 살펴보고, MIMC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한계를 논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은 국제이주가 국가의 주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이고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국가들은 협력에 쉽게 나서지 않는다. 협력을 위한 국가의 이익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가들 간의 힘의 불균형이 심한 분야여서 합의를 위한 견해차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다자적 거버넌스 구축은 지체되고 있다. 지역 수준의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모색되고는 있지만 법제도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은 이주 분야 국제협력의 저발전 상태에서 MIMC는 이주와 난민 분야의 파편화된 국제법과 국제규범 체제를 총체적 접근법을 통해 단일한 틀 속에서 재구축하고자 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개념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주 현실을 반영하고 각 이주민 집단 별로 특수성을 반영한 권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MIMC는 여전히 국가들의 이익을 보장하여 참여를 촉진시킬 유인이 부족하며 많은 국가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비준을 거부할 개연성이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슈 연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마이클 도일은 MIMC를 존 롤스(John Rawls)의 개념을 빌어 ‘현실적 유토피아(Realistic Utopia)’라고 부른다³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 유토피아라는 말이 암시하듯, MIMC에는 현실주의적 관점과 이상주의적인 관점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마이클 도일도 MIMC 논의 과정에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 간의 긴장이 있었음을 고백한 바 있다³⁵⁾. 난민 보호를 논의할 때, 이상주의자들은 현재 난민 협약이 난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 난민 협약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그럴 경우 국가들은 난민 보호에 소극적으로 되고 결국에는 현재 난민 레짐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MIMC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며 그럴 때마다 MIMC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교차로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MIMC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주의적인 전략이 부족하며, ‘혁신적 성문화’ 과정을 통해 기존 법체계의 조합을 넘어서 한 단계 앞으로 더 진전하는 비전이 부족하다. MIMC가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주와 난민 분야에서 국가주권의 논리를 누그러뜨리고 보다 많은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현실주의적인 전략과 제도화를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 국제법 체제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34) Michael Doyle and Emma Borgnas, “The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Finding a Path to a Better International Mobility Regime,” *Global Summitry*, Vol.4, No.1, p.7(2018).

35) *Ibid*, p.7

참고문헌

- 송영훈. 2014.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케냐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4권 1호.
- 이병하. 2017. “환대 개념과 이민정책: 이론적 모색.” 『문화와 정치』. 제4권 제2호.
- _____. 2014. “국제인권규범과 한국의 이주민 인권.”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24집 1호.
- 이선미. 2008. “국제이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민주화를 위한 차원 간 균형의 함의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1호.
- 이신화. 2015. “국제기구와 인도적 의제: 이주 및 난민 문제.” 박흥순·서창록·박재영·이신화 공저. 『국제기구와 인권·난민·이주: UN인권(헌장·협약·지역)기구·UNHCR·IOM』. 서울: 오름.
- Betts, Alexander ed., 2011. *Global Migration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etts, Alexander and Paul Collier. 2017. *Refuge: Transforming a Broken Refugee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oyle, Michael. 2018. “Commentaries: The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56, No.2.
- Doyle, Michael and Emma Borgnas. 2018. “The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Finding a Path to a Better International Mobility Regime,” *Global Summitry*, Vol.4, No.1.
- Gamlen, Alan and Katharine Marsh eds. 2011. *Migration and Global Governanc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Global Policy Initiative in Columbia University. 2017. *Model International Mobility Conven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7. *World Migration Report 2018*.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_____. 2016. *IOM in Asia and the Pacific 2017-2020*. Bangkok: IOM.
- _____. 2013. *Regional Inter-State Consultation Mechanisms on Migration: Approaches, Recent Activities and Implications for Global Governance of Migration*.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_____. 2010. *An Assessment of Principal Regional Consultative Processes on Migration*.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Martin, Susan. 2015. "International Migration and Global Governance," *Global Summitry*, Vol. 1, No. 1.
- Money, Jeannette and Sarah P. Lockhart. 2017. "The Paucity of International Protections: Global Migration Governance in the Contemporary Era," *Global Summitry*, Vol.3, No.1.
- Nita, Sonja. 2013. *Regional Migration Governance: A Comparative View*. Geneva: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Freeman, Gary P. 1995.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9, No. 4.
- Koser, Khalid. 2010. "Introducti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Glob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16.
- Newland, Katheleen. 2010.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Migration: Mechanisms, Processes, and Institutions." *Global Governance*, 16.

토론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과 MIMC”에 대한 토론문

한준성 | 한양대 평화연구소

발제문은 국제이주에 관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글로벌 수준과 지역적 수준에서 진행되어 온 이주 관련 국제협력의 시도들을 그러한 체제 형성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을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주와 다양성의 문제를 보다 넓은 사고 지평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주와 관련하여 일국적 차원의 문제가 어떻게 지역적 내지는 전-지구적 문제와 연루되어 있고 또 연관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하 내용은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다소 두서없이 적어 본 것입니다.

- 8페이지에서 설명된 ‘글로벌 수준의 대화체들’이 대체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동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완되면 그 의미가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과 같은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비유럽 출신 비호 신청자들의 대량 발생 사태와 개발(development)을 강조하는 흐름 등의 추세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역협의체의 가장 실효적인 기능들 가운데 하나는 발제문에 설명된 것처럼 “실무적인 수준에서 국제이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워크숍과 포럼 등에 참가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지역협의체 관여를 평가한다면 어떤 점들이 좀 더 고민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이를테면 다룰 의제나 참여 주체를 얼마나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혹은 ‘지역협의체+a’에서 a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등)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국제여행레짐과 여타 레짐들의 연계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다 덜 논쟁적일 수 있는 국제여행레짐을 통해 “국제협력의 습속”이 심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지기 쉬운” 국제난민레짐과 이주노동레짐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에도 대체로 수긍합니다. 다만, 그러한 연계성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여

행례짐을 보다 더 ‘권리보호체제’로 간주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여행례짐을 ‘관광 산업’과 ‘안전 관리’의 차원과 더불어 ‘권리 보호’의 측면을 보다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MIMC는 아직까지는 그 구체 목적이 불분명하고 내용 검토 시 개선될 점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제 인권 관련 담론으로 MIMC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담론을 각 국가나 사회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유용하게 활용(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병하 선생님의 발제문은 한국사회의 이주 관련 지식 장에서 관련 담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MIMC 활용법을 예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MIMC가 이주 분야의 국제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주와 난민 분야에서 국가 주권의 논리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하다는 점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논법의 조금 달리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주권의 관계를 길항적인 것으로 보기에 앞서 피할 수 없는 ‘이주의 시대’를 맞아 국가 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따른 대안적인 실천의 길들(공적 권한의 위임이나 다자 거버넌스, 내지는 지역협의체 참여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갖는 유용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 7페이지에서 ‘국제이주 관련 인권규범’을 설명할 때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난민 발생과 관련해서 인신매매나 강제노동 등 여성과 아동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4페이지에서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s)에 관한 설명에서 “경제 상황의 변화”는 세계경제 위기와 그 여파라는 측면에서 외생적이라고 쉽게 이해가 되지만 내인(內因)으로 간주될 법한 “반 이민 세력의 성장”과 “이민자 옹호 단체와 미디어”를 외생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어색하게 읽혔습니다.



사회 / 이해경 | 배재대학교

-
- 01 **가족 동반 가능 외국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시론적 고찰**
발표 김이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신지원 | 전남대학교
-
- 02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유승희 |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토론 박민정 | IOM이민정책연구원
-
- 03 **Korean Children of a Migrant Background in Korea, Chin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발표 신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 김현미 | 연세대학교

가족 동반 가능 외국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시론적 고찰

김이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족의 존재는 당사자가 결정해야 할 여러 사안에서 개인적 요구 이외에 가족원들의 상황도 중요하게 고려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민자에게 있어 목적지 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은 흔히 본국으로의 귀환 가능성은 낮추고 정착 가능성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가족생활을 통해 자녀세대가 형성, 성장하면서 세대를 이은 이민 배경자 집단이 형성됨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민 현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 각국에서 가족이주가 이주관리정책이나 이민자 통합정책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이민자의 가족생활에 대한 관심은 가족이주 가운데 결혼이주, 이민자 가족인 동시에 한국인 가족인 ‘다문화가족’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한편 미등록체류 또는 무국적 아동의 존재와 함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들 가족의 삶에도 일정 부분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에 비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지니고 있고 가족동반도 가능한 외국인의 가족형성, 가족생활에 대해서는 본격적 연구가 진척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재분석을 통해 국내체류 외국인의 전반적인 가족동거 현황과 국내체류 의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 석·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아이를 낳아 키운 적이 있는 유학생 부부, 영주권 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 사례를 통해 가족의 형성과 이동 양상을 파악하고 자녀양육, 취업 등 가족생활의 핵심적인 경험, 앞으로의 가족생활 전망 등을 살펴보고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관련된 제도와 관계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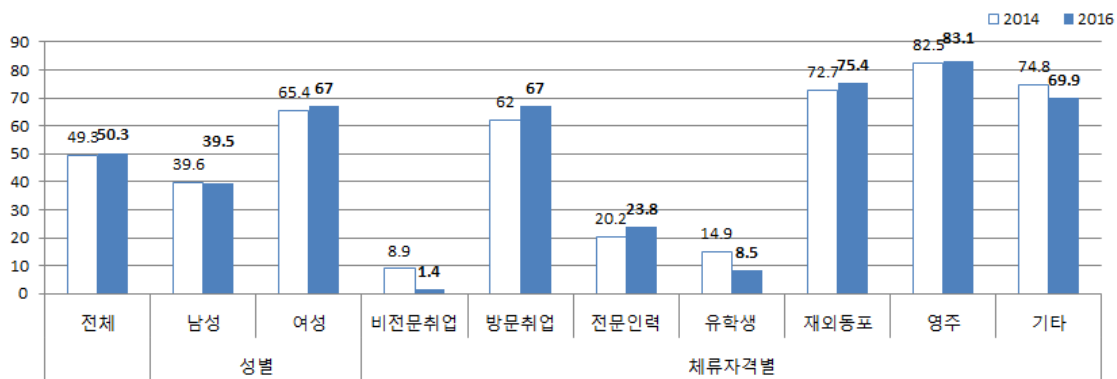
01 | 외국인의 가족동거 현황과 국내체류 의향

1) 가족동거 추이: 2014-2016

2014, 2016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 데이터(등록인구기준 가중치 적용)¹⁾ 중 현행 제도상 다문화가

1)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분석 결과는 김이선 외. 2015.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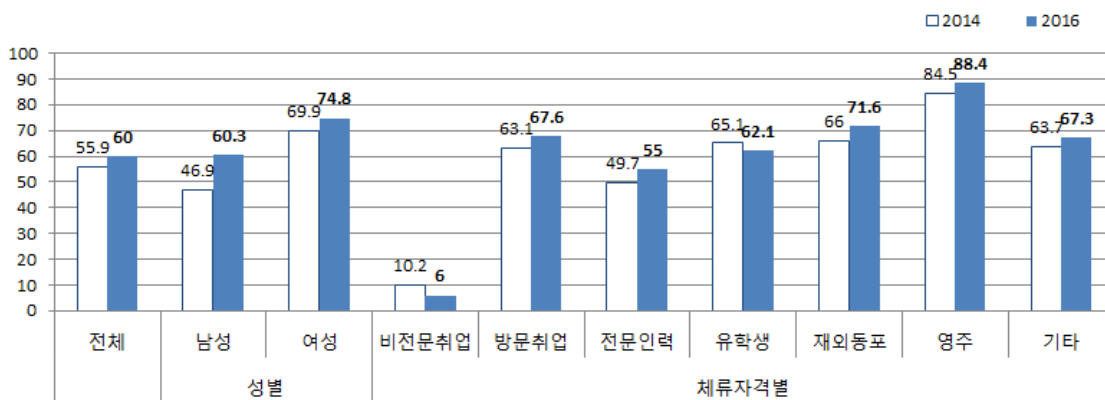
족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자²⁾를 제외한 국내체류 외국인(2014년 1,054,451명, 2016년 1,227,969명) 가운데 가족과 동거하는 이들은 2016년 50.3%로 절반 정도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2014년(49.3%)보다 가족 동거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체류자격별로는 영주, 재외동포, 기타³⁾, 방문취업의 순이다. 이에 비해, 전문인력과 유학생은 가족 동반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각각 23.8%, 8.6%만이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유학생은 2014년에 비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성별, 체류자격별 가족동거 추이(2014-2016) (%)

2014 자료: 김이선 외. 2015.

이들 중 유배우자(2014년 54.9%, 2016년 58.8%)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55.9%였던 것이 2016년에는 60.0%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비전문취업자는 가족동거 현황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국내거주 비율이 2014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유학생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여타의 체류자격 소지자들의 배우자 국내거주 비율이 증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성별, 체류자격별 배우자 국내거주 추이(2014-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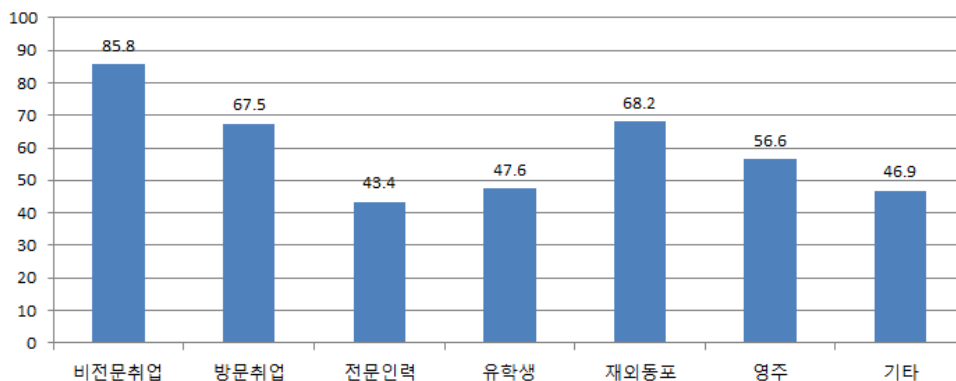
2014 자료: 김이선 외. 2015.

구보고서 참조

- 2) 체류자격이 결혼이민자인 이들과 그 외의 체류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한국인인 실질적인 결혼이민자를 통칭한다.
- 3) 가족원 자격 소지자가 포함되어 가족 동거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85.8%가 배우자도 비전문취업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 동반, 초청이 불가능한 해당 체류자격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가족원 동반, 초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경우 비전문취업보다는 배우자간 동일 체류자격 소지자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상당수가 배우자도 동일한 체류자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원 동반, 초청이 가능하더라도 그 보다는 각자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가족생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방문취업자격 소지자 중에는 배우자도 동일 자격을 소지한 경우 이외에 재외동포 자격(23.9%)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가운데에는 방문취업자(20.2%)가 많아 부부가 동일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부부 중 한쪽은 방문취업, 다른 한쪽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전문인력의 배우자 중에는 기타 자격 소지자(38.9%)가 많은 편이어서 배우자 모두 전문인력을 소지하거나 한쪽은 가족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소지자도 이와 유사하게 부부 모두 유학생이거나 한쪽은 가족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학생+미전문 취업(9.4%) 커플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인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영주자격 소지자의 경우 배우자는 영주, 결혼이민(12.5%), 기타(11.6%), 재외동포(10.4%), 방문취업(8.8%) 등 다양한 자격을 소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배우자간 동일 체류자격 소지 비율(2016) (%)

2) 가족동거 여부별 국내체류 의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류자격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중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단신이주자에 비해 가족생활을 하는 이주자들은 자신과 관련된 각종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족원들의 현실과 미래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족이 어느 나라에 거주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족원의 교육, 복지, 경제생활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족생활을 하는 이주자들에게는 거주지 이동 결정이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동거 여부에 따른 국내체류기간과 향후 국내체류 의향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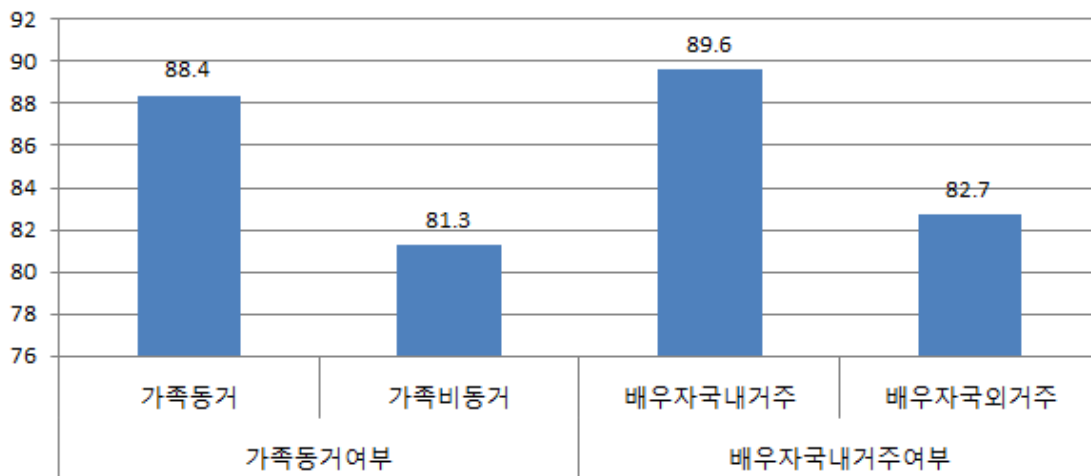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가족동거 여부별로 국내체류기간을 살펴보면,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5년 이상 체류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1-5년 미만 체류자의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국내체류 의향에 있어서도 가족과 동거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이들이 배우자가 국외에 있는 이들보다 현재의 체류자격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의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의 가족생활이 장기체류 나아가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가족동거 여부별 국내체류기간(2016)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전체
가족동거	8.9%	25.3%	18.4%	30.6%	16.8%	100.0%
가족비동거**	13.3%	38.7%	26.1%	16.3%	5.6%	100.0%
전체	11.1%	31.9%	22.2%	23.5%	1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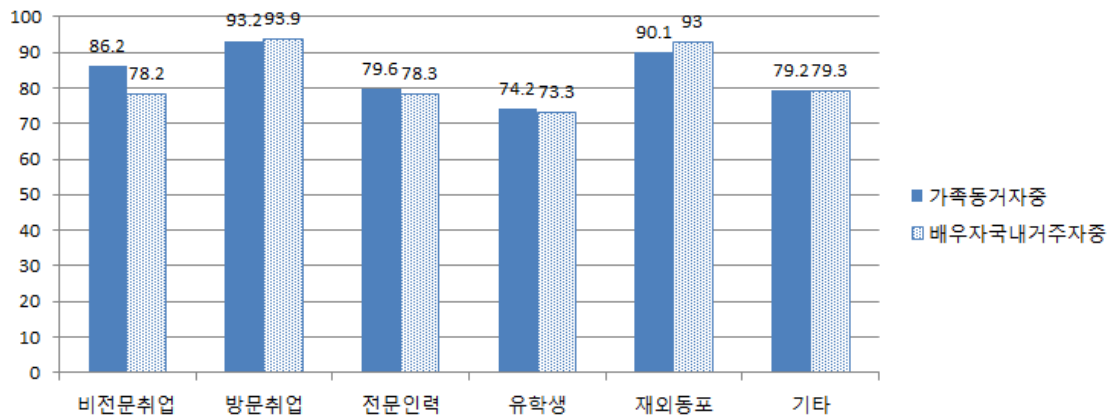
*영주자격 소지자 제외

**1인 가구 포함



〈그림〉 가족동거 여부별, 배우자국내거주 여부별 향후 국내체류 의향(2016) (%)

체류자격별로는 방문취업,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들의 국내체류 의향이 높은 반면, 전문인력이나 유학생의 국내체류 의향은 낮은 수준이다. 이들의 국내체류 의향은 지속적인 국내체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비전문취업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특히 유학생의 체류의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체류자격별 가족동거자/ 배우자국내거주자의 향후 국내체류 의향(2016) (%)

02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의 가족 형성 또는 이동⁴⁾

다양한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 가운데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는 자신의 체류자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뿐 아니라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는 가족생활에 있어 공통적 성격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재외동포, 영주권자는 대부분이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생활을 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비해, 유학생은 결혼을 한 경우에도 가족생활을 하는 이들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간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석·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아이를 낳아 키운 적이 있는 유학생 부부 4사례(5명)⁵⁾과 오랜 기간 국내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의 체류자격 변경을 거쳐 현재 영주권 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 4사례(5명)와의 인터뷰 결과는 이들 집단의 가족생활이 다소 비교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이 두 집단은 연령대나 가족주기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영주권자나 재외동포 자격을 지니고 있는 인터뷰 참가자들의 연령대는 40대말-60대에 걸쳐 있으며 20대 중반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비해, 유학생 부부는 20대말-30대로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고 있다. 한국생활을 시작한 시기도 서로 달라 영주권자나 재외동포 자격을 지니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들은 길게는 20년 정도 한국생활을 한데 비해, 유학생들의 한국생활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어머니-아들-손자가 함께 사는 〈재영-2〉, 배우자와 따로 사는 〈재영-3〉을 제외한 6사례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거나 최근까지 함께 살았다. 이들 중 〈유학-4〉만이 국내에서 유학 생활 중 만나 결혼했으며, 그 외에는 본국에서 결혼해 생활하다가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한국에 온 후에 배우자 역시 자신의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유학-1〉만이 유학생 남편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후 자신 역시

4) 이후의 내용은 김이선 외. 2015.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으로 2015년 시점으로 작성되었다.

5) 유학생 부부는 같은 국가 출신이며 베트남 출신 2사례, 나이지리아 출신 1사례, 한국계 중국 1사례이다.

유학생 자격으로 변경해 체류하고 있다.

〈유학-4〉⁶⁾ [통역] 남편분은 2007년도에 오셨고 아내분은 2008년도에 오셨어요. ... 왜냐하면 한국은 과학이 발달한 나라로서 특히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생물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 (서로) 한국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석사과정 때는 같은 과였어요. ... 베트남에 가서 결혼했죠. 2009년도에. ...(애기는) 한국 나이로 6살.

〈유학-2〉 (결혼은) 베트남에서 하고 같이 한국에 왔어요. 2012년 제가 먼저 왔고요. 남편은 한 달 후에 왔어요. 비자는 따로 따로 왔거든요. 남편은 연구비자로 오고, 저는 유학생 비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박사후 과정, 포닥 과정 했거든요. ... 같이 왔다가 (임신해서 저는) 연말에 2학기 끝나가지고 휴학해서 (베트남) 갔다가 애 출산하고 애가 7개월 되었을 때 다시 왔어요.

〈유학-1〉 [통역] 여기에 처음 온 건 남편 만나러 왔었어요. 남편이 유학생으로 왔었어요. 남편이 한국에 온 후 1년 후에 우리가(자신과 아이) 여기에 남편 만나러 왔어요. ... 방문 비자로 왔었어요. 남편에게 가족이 있었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비자는 가족초청비자였어요. ... 처음에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랑 3개월 비자로 왔었어요. ... 처음에 (남편) 방문으로 왔는데 제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추천해줬어요. .. 남편은 한국에서 더 공부하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가족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보다 같이 살기를 정했던 거죠. 저도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Q: 학생으로서요?) 네. ... (Q: 둘째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는 18개월이에요.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인터뷰에 참가한 유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유학생할 중에 아이를 낳은 경험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재외동포, 영주자격의 한국계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낳은 어린 자녀를 친정 부모나 그 외 친척에게 맡겨둔 채 10년 이상 떨어져 살다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체류자격으로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다.

〈재영-1〉 (Q: 20년 동안 엄마가 여기에서 있을 때 딸은 중국에서) 학교 다녔죠. 학교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 쪽에서 취직해도 되는데 뭐 쪽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 또 시집가게 되면 같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아직 일해야 하니까 그러면 네가 나와라. 그나마 같이 지내자. ...23살이요. 졸업하고 반년 조금 있다가 들어왔어요. ... (올해) 3월, 2월달에 왔으니까. 설 그 때. ... F-4. 대학생들은 그게 나와요.

이처럼 인터뷰참가자의 경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원 모두가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국 생활 내내 안정된 체류자격을 갖고 있었던 유학생과 달리 재외동포나 영주 자격을 지니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들은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다양한 체류자격을 거쳐 왔으며, 한국생활 초기에는 밀입국 혹은 미등록 상태에 있었던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는 체류자격이 안정되어 더 이상 단속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중국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6) 인터뷰참가자들의 개인적 경험과 기억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연장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한국으로의 이주를 통해 거둔 중요한 성취로 받아들여진다.

〈재영-1〉 20년 전(에 처음 왔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왔다 갔다 하기는 했죠. 초창기는 그때 왔어요. 처음에는 그걸로 왔죠. 연수생. (Q: 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다가?)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때는 불법체류가 많이 있었지요. 연수생으로 하다가 불법체류가 되었지요. 그리하다가 정부에서 또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하고 있죠. ... 그 전에는 불법이니까 (중국에) 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정부에서 이제 몇 년도까지 들어가면 다시 재입국하게 해준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다시 비자 발급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나왔죠. ... 두 번째는 어떤 비자라고 할까요? 그냥 재입국비자였어요. 2003년도인가? 들어가면 그해 말까지 들어가면 이제 재입국을 허용해줬어요. 그래서 갔다가 4년도인가 5년도인가 5월 달에 그렇게 나왔어요. ... 지금은 영주권이에요. ... 영주권은 몇 년 되었는가? 1년 되었는가? ... 그전에는 H-2로 해서 F-4 그 다음에 (영주권) 이렇게. ... (Q: 남편 분은 언제 오셨어요?) 초창기에 90년도에 한번 왔었어요. 90년대 그때는 정말 초창기였죠. 그때 여기 친척이 있어서 초창기에 왔었어요. (Q: 아... 남편 분을 초청해서) 네. 와서 2년인가 왔다가 (중국) 들어가서 쪽 있다가. ... 2005년인가 그때 2006년인가? ... (중국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왔어요. 남편은 동생이 초청을 했어요. (Q: 초청해서 H-2로 오셨나요?) 그렇지요. ... 그때는 그냥 뭐 초청으로 와서 있으면서 영주권 되었죠. ... 집안 친척이 있어요. 사촌이랑 있어요. 친척이랑 담보를 해서 영주권을. ... 남편 쪽으로 해가지고 한 거지요. 남편이랑 같이 했어요.

〈재영-4〉 결혼은 20살에 했어요. ... 신랑이 (아이) 12살, 내가 (아이) 13살 때 나왔는지. ... 애가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 남편이 제일 먼저 왔죠. 신랑 2001년도인가 오고. (나는 그 다음해에 왔다가 갔다가) 2005년도에 또 왔다가 불법체류자였어요. 오자마자 바로. ... 저는 밀입국, 밀수로 왔어요. 신랑 같은 경우는 그 여기 회사에 일보러 온 걸로 했다가 그것도 결국에 한국 분들이 브로커지. 회사에 그런 회사가 없는데 그런 회사의 일로 왔다가... 2006년도에 정부에서 그런 혜택이 되가지고 이제 다행히 갔다 오니깐 그 다음부터는 H-2비자가 나오더라고요. 2007년도부터는. (그때부터 나랑 신랑 각각 H-2비자였다가 나는 F-4 땀죠.) (Q: 남편 분은 아직 H-2이시고) 네. ... (체류자격이 없을 때에는) 신분증 없으니깐 어디가서 은행거래를 못하고 그냥 친척분 통장으로 해가지고 있다가 그런 직장생활을 가셔도 불법이란 말을 못하고 네.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합법이 되니깐 그게 너무 고맙고.

03 | 유학생 부부의 경제사정과 자녀양육 부담

미등록체류자의 삶과 비교하면,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재외동포 등은 본국에 있는 배우자나 아이가 한국에 와서 함께 살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다. 체류자격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으며 정부와 관련된 기관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 등 각종 제도와 관계를 맺을 때에도 떳떳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임을 실감하고 있다.

유학생 자격으로는 아르바이트 수준 이상의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에서 주로 장학금이나 연구보조수

당 등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인터뷰 참가자 중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임신 전에는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생활했던 경우도 있으며, 2015년 초 유학생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를 취하면서 건강보험 가입시 기존 소급분을 면제하는 한시적 특례조치와 건강보험료 50% 경감 조치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유학-1〉 [통역] 아이가 있고 가족을 돌봐야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직업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 지금은 (박사과정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에 있는 ○○교회에서 영어 모회를 하고 있어요. ... (저도 석사 공부하면서 지금 아르바이트로) 다문화교육 하고 있어요. ... 일하고 있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 게 가장 어렵죠. ... 저와 같은 유학생에게는 매우 특히 힘든 일이죠. ... 아르바이트라도 대부분 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일주일에 유학생은 단지 20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공장 같은 데서 일한다 하더라도 학생이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하니까 누가 일자리를 주겠어요? 안정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정규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일자리 구하러 가서 “저는 학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일자리를 안줘요. ... (Q: 둘째 아이 출산 병원비는 어떻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미등록 체류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요. ○○병원. ... 병원에 돈을 낼 수 있는 만큼 내면 되는데요. ... 출산비용을 받지 않아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 남편이 1년 후에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한국에 다시 왔을 때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요. 그전에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죠. ... 저희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좋은 병원, 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지만 건강보험에 들 수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한국에 살고 있는 유학생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 (예전에) 학교에서 들 수 있는 보험도 오직 유학생 개인에게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사보험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저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하려면 제가 돈을 지불해야 해요. 제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 아이들은 지금 어떤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의 임신과 함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부부만 생활할 때에는 아직 젊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담이 적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버티었더라도 임신하게 되면 임신부를 위해서나 앞으로 탄생할 아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진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만으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발급되는 임신부용 카드가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부 검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과 산후조리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학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이 정도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유학-2〉 (처음 왔을 때에는) 국민 (건강)보험이 아니라 아무튼 무슨 보험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애 임신했을 때 제가 제 이름으로 가입했는데 한 달에 42000원이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 외국인도,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50% 할인 돼요. ... (임신했을 때) 그런데 비용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게 고마운 카드(고운맘카드)도 있고 50만원 주는 카드가 있거든요. 고마운 카드라고 해서. 그게 모든 임신부가 발급 받거든요. ... 진료는 안 되고 진찰 그냥. ... 초음파는 안돼요. 초음파는 보험이 안돼요. 기본적인 것만. 한 번에 뭐 1만

원, 1만5천원 이런 것만. ... 제가 그때도 아... 무슨 검사였죠? 양수 검사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험이 안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70만원 나왔어요. ... 애가 22주, 23주 코가, 콧대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양수검사를 받았어요. ... 큰 부담이었죠.

〈유학-3〉 우리 둘 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료보험을 안 들었어요. ... 왜냐하면 학교 보건소로 충분했고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 그런데 애기가 생기면서 건강보험을 가입을 했죠. ... 직장에 고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그 당시에 8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애기 때문에 해야겠더라고요. 그걸 가입하니까 그때 이제 엄마사랑카드 그걸 나눠줬어요. 고운맘카드인지 엄마사랑카드인지. ... 그 고운맘카드로 맨날 진료 받으면서... 그때가 가장 고비였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사, 박사 할 때까지는 으쌰으쌰 하고 했는데 애기 낳고 이제 생활고가 굉장히, 경제적인 압박으로 왔는데요.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기 뭐 반달 전까지도 과외도, 중국어 과외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그건 괜찮은데 낳고 나서가 문제예요. ... 제가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후도우미 한 달 딱 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강의를 하거나 중국어 과외를 하거나 했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요. 45일 만에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남편도 압력이 있고 나도 부담스러워했고. 논문이 안 끝나니까 어떻게 취직이 될 수도 없고 여러가지로 그 시기가 출산 1년까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더욱 큰 문제는 아이를 낳고 나서의 일이다. 부부 모두 학업을 해야 하는 만큼, 아이를 직접 돌볼 수도 없어 가급적 이른 시기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 미등록체류자들처럼 체류자격을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거부하는 일은 없어 아이를 받아줄 보육시설을 찾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보육료이다. 부부가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없어 집 월세를 내고 나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벽찬 상황에서 보육료는 무엇보다 큰 부담이 된다. 아이 보육료 부담이 야말로 인터뷰에 참가한 유학생 부부가 한국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자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국인과 다른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유학-4〉 [통역] 상황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프로젝트 많으면 돈 많이 줄 수 있고 그런데 기본은 90만원 이상. (부부 각각이 90만원씩). ... 월급(연구보조수당 혹은 장학금) 받는 걸 거의 다 (어린이집 보내는 데) 쓰는 거죠. 애가 또 아프면 의료비 내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 유치원 55만원. ... 보통 유치원은 2시까지만 봐주는데 (부모가 학교에 있어야 하니까) 7시까지 추가로 맡기니까 추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유학-2〉 외국인이라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 애가 만약에 학교, 어린이집에 보내면 지원 못 받고 있으니까 (비용) 전부를 내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 애한테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다니면 애 어린이집에 애가 어려가지고 돈 전부 내야 하니까 한 달에 거의 40만원 냈거든요. 그게 부담이 되었어요. ... 39만 6천원이었어요. ... 경제적으로 보면 아마 보육비가 가장 부담이 되었을 것 같고요.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직장 안 다니면 둘이 생활하기만 해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월세만 해도 비싸고 생활비가 만만치 않는데. ... 제가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남편 아는 다른 (유학생) 부부집도 그런 부부집 있

거든요. 두 분 다 박사생, 연구생. 월급 얼마 안되고 또 애가 얼마 안 되어서 생기고 그러니까... 또 집은 값더니 지하인데 너무 애한테 너무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습도가, 지하니까 습도가 너무 많고 벽에 보면은. 상상도 못했어요. 집도 좁고... 지금은 다 공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한국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구프로젝트마저 끊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서 생활비, 자녀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체류자격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취업’을 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유학-3〉 (Q: 부부 둘 다 학생이시면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죠. ... 석사 다닐 때는 굉장히 행운이어서 등록금하고 생활보조금을.. 외국인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 그래도 학기 중에는 그걸로 버티고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중국어 과외를 하면서 버티고. 박사 때는 등록금만 면제되고 생활비가 없었어요. 없죠. 생활비가. 그래서 어떻게 해. 각자 알아서 해야지. 저는 생활비를 전담하고 이쪽은 별면 등록금을 더 내고. ...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중국어 과외를 좀 많이 했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고. 남편도 등록금이 절반만 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열악한 조건에서 알바를 하면서 사우나에 가서 표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졸업을 하고. ... 그런데, 중국어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때 D-2 유학생이라면. 자격이... 출입국에다 만약에 강의를 하면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그거를 또 그거를 받는 걸 저는 잘 몰라서 어느 날 경찰에 불려간 적도 있고. 중국어 가르쳤다고.

그나마 외국인 중에서도 전문인력 등 ‘근로자’라면 세금 혜택으로라도 보육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유학생들에게는 그나마의 혜택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취업을 할 수 없어 가뜰이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외국인들보다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유학-4〉 [통역] 사실 유학비자로는 장학금이, 월급이 적잖아요. 직장인보다... 더 어려운데 지금 교육비는 똑같이 내고 있어요. ..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D-2랑 그 직장인 비자는 다 똑같이 저기 교육비 내는데. 애 보육료 내는데 그런데 직장인의 경우는 연말에 나중에 세금 (돌려) 받게 돼요. 공제.. 그런 부분 신청하면 다시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이라) 아무것도 못 받고. 똑같이 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 세무서 갔는데, D-2 비자는 환급을 못 받는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직면한 부정적 경험은 졸업 이후 진로를 찾는 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터뷰에 참가한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 부담,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무관심 등을 경험하며 졸업 후 한국에 남는 것을 대안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유학-2〉 비용은 모든 결정에 영향력이 좀 있어요. 사실 졸업하고 조금 남아서 직장도 다니고 돈 좀 벌려고 그랬는데. 사실 애랑 떨어져 있는 게 고민이 되고 애를 여기에 데리고 오면 또 어린이집 보내면 40만원 정도 나가고 또 월세 나가고 둘이 생활비도 나가고 그러면 남은 게 정말 거의 없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정말 여기에 남겨도 부부 떨어져 있어도 무슨 큰 이익이 안 되니까 (졸업하고 바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 애 있으면 (일을 해도) 남은 게 차이가 없죠. ... 아무튼 여기에 이민할 생각이 없었어요.

04 | 가족생활에서 실감하는 각종 제도·서비스와의 모호한 관계

인터뷰 참가자들은 가족원 모두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 기관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이용 가능성은 제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이용자 수가 제한되어 있고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단적인 예가 많은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제도적으로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한국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문화가족이 아닌 외국인들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터뷰 참가자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학-2〉 애가 다녔던 그 어린이집 문 닫게 돼요. 그렇게 되어서 다른 어린이집 알아봐야 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너무, 그 한달 전에 알려주니까. 정말 한달 전에 신청하면 웬만한 데가 갈 자리가 없거든요. 좋은 데는. 그래서 국립 ○○어린이집이라고. 좋은... 국립이거든요? 그랬는데 포털 들어가서 신청해야 한다고 대기해야 한다고 그런데 우대 1,2,3인가 있는데요. 저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대가 없어요. 만약에 다 부부 둘이 직장 다닌다 그러면 우대1, 또 다문화가족이면 우대2, 또 애가 두 명 있는데 다 어린이집 다녀야 하면 우대3. 그런데 저희는 해당이 안돼요. 그래서 대기해봤는데 소용이 없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상당기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더라도 관련 제도와와의 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어린이집 측에서 한국인 아동 중심의 이용자 등록, 관리체계와 다소 다른 외국인 아동 등록 절차를 알지 못할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정원 외’로 받은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육료가 임의로 산정될 여지도 있고 안전문제 발생 시 보험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학-3〉 집 가까운데 유치원이 있어요. ... 다른 데는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일단은 그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거 무상보육이 안되기 때문에. 다 그걸 알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에 물어봤을 때도 그 분들은 ‘다문화가족 아니세요? (무상보육) 될 거예요.’ ... 저는 그 전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장님이 ‘될 거예요.’ 하니까... 그러더니 ‘출입국에서 안 된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 이쪽 어린이집도 우리는 ‘(무상보육) 안 된다’고 아예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돈을 냈는데 이 원장님은 현금을 원하시

더라고요. 계좌이체를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니까 현금을 원하시더라고. 40만원이었어요.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자꾸만 현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애기 아빠가 가서 달을 했나봐. 현금을 드릴 거니까 5만원을 깎아 달라고. 그래서 35만원으로. 그래서 내가 탈세하는 거 아니야? 탈세해도 상관없다. 5만원 덜 내면 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통지가 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출입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외국인등록증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그 동안 등록을 안 한 상태였죠. 원장님은 자기가 몰랐다. 그전에... 그런데 등록해야 한다. 이번 주부터 다닌 걸로 해 달라. 출입국에서 전화 오면.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기관과의 관계가 모호한 것은 보육시설만이 아니다. 지역에는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그런데,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이들로서는 해당 서비스나 기관의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알게 되더라도 ‘국민’을 기준으로 설정된 이용자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실제 이용은 쉽지 않다.

인터뷰에 참가한 유학생들은 아이의 언어 사용 환경과 가정 내에서의 언어교육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부모 역할도 벅차다고 토로한다. <유학-2>는 어린이집에서는 한국어를 쓰지만 학업을 마치고 귀국할 것을 생각하면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를 위해 가족 내에서 어떠한 언어를 쓰는 것이 좋을지 고민한 적이 있다. <유학-4>는 유치원 선생님과 의사소통이 여전히 어려울 뿐 아니라, 아이가 커가면서 교육기관에서 요구되는 부모 역할이 점점 벅차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또한 아이에게 베트남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싶지만,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은 유학생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다.

<유학-2> 어린이집 다닐 때 애가 외국인이지만 선생님들은 한국말로 수업하잖아요. 그런데도 애가 한 살 넘으면 말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에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라서, (부모) 둘이 다 베트남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집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쳐줘요. 저희가. 그러면 애가 한국말을 몰라요. 베트남어를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유학-4> [통역] 처음엔 여기에 와서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대부분 한국어를 했고, 그런데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베트남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집에서는 베트남어를 하고 밖에 나가면, 또 어린이집에 가면 한국말을 해요. ... 베트남어로 된 책이나 만화나 그런 거 있는데 그런데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가 한국어 책처럼 보고 이해하고 즐기면서 읽는 거지. ... (Q: 베트남 동화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쪽은 한국어, 다른 한쪽은 베트남어 이런 책이 온라인에 있는데, 그런 거 아세요?) 몰라요. 그런 책이 있는지를. ... 어린이집 다녔을 때는 그냥 애를 돌보는 단계였고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 단계에서는 애가 활동이 많아요. 활동하는데 부모님의 참여가 필요한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언어 그런 게 조금 장애가 되었어요.

이밖에 장난감 대여 등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만한 지역 서비스 기관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명백하게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에게는 불가능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학-2〉 한 가지 비싼 게 장난감이에요. ..일주일도 안 되고 싫어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막 그러니까. 빌려야 해요. ... 아마 ○○구(지자체)가 관리하는 데예요. **센터가 ○○동에 있어요. ○○구 사람이면 빌릴 수가 있어요. ... 책도 빌려주고 장난감도 빌려주는데. ... 그거 관련해서 좀 힘들었어요. 외국인이라서 안됐어요. 왜냐하면 등본, 그게 있어야 등록이 되거든요. 다행히 친한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빌려줬어요. 원래 그런 걸 빌려주지 않거든요. 위험하잖아요. 그런 데 그 언니 등본 복사해서 빌려줬어요. (Q: 외국인 등록증은 안 되네요?) 왜냐하면 보증해주는 누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등본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 교육과 관련된 각종 제도나 서비스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한국어 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 정보를 알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공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커버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며, 주위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과 관련된 제도는 알지 못하고 유학생들은 대부분 ‘싱글’이어서 자녀양육이나 가족생활과 관련된 사항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유학-2〉 예방접종 같은 거는 공짜로 받았어요. (Q: 그런 거 처음에 어떻게 알아요? 보건소가면 된다는 걸?) 그냥 네이버 검색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애가 7개월 되었을 때 (왔으니까) 베트남에서 조금 맞았고. 와서는 다른 것도 맞아야 하니까. 그런데,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한국말을 알아서 그렇지 한국말을 몰랐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 아마 학교 입장에서는 저와 같은 경우, 와서 애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뭐 싱글(이죠).

〈유학-4〉 [통역] (Q: 임신하고 병원가고 ... 나중에 베트남에서 애기 낳고 한국에 왔을 때도 애기 어린이집 보내거나 할 때, 학교에서 정보를 주거나 이런 도움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 도움이 없었어요. 개인 일이니까 뭐 학교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관계없죠). (Q: 어린이집 보낼 때 어려웠던 게 아까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한국말이 안 통하는 거였다고 했는데 어떤 게 어려웠어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돌아다니고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바로 보내고 그랬어요. (Q: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 언어 같은 거는 장 애가 조금 있긴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었고. ... 문화도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애를 어떻게 봐주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그러니까 의문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좀 약간 있었습니다. ... (같은 연구실에 있는 한국 학생이) 주로 도와주시는 게 뭐 만약에 진행하는데 절차 그런 걸 통역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어디에서 사면 좋을지 알려주는 것뿐이지. 어떻게 하는지는 그냥 알아서. 스스로 알아냈어요.

아이가 커서 학교를 들어갈 시점이 되어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상황은 변화하지 않는다. 공식교육

제도에 들어갈 자격이 있기는 하지만, 입학 통지서는 오지 않아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때를 놓칠 수도 있다.

〈유학-3〉 우리 집에는 입학통지서가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돼요. 외국인주민에게는 입학통지서가 안 와요. ... 국적 중심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때는 챙겨야 되고.

이처럼 체류자격이 안정되어 있고 공식적으로는 관련 제도나 시설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 시설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차별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고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힘들게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공식제도 외부에서 대안을 찾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유학-2〉 (다른 베트남 유학생 언니가 있는데) 애가 한국말을 또 잘하는 것도 괜찮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가서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아무래도 베트남어는 집에서 가르쳐줄 수 있고... 영어는 아무래도 뭐 필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제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유학-1〉 (Q: 큰 아이는 세 살 때 와서 지금 우리 나이로 9살 이면 지금 6년이 되었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나요?) ... [통역] ***인터내셔널스쿨. ... 일반 초등학교에는 다니지 않고 있어요. ... 전에 유치원 다녔을 때 ○○이가 유일한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쉽지 않았죠. 거기에서 매우 긴장했고요.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아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학교(유치원을 뜻함)를 바꿨어요. ... (지금 다니는) 학교는 도시에 있는 국제학교랑 같지 않아요. 한국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내는 비용으로 그 외에 정해진 비용은 없어요. ..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내)요. ... 한국 학위는 아니예요. ... (Q: 한국에서 학력이 인정 되려면 아마 기준 수업시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 한국 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아마도 한국 중학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서 제시하는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한국 학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나이지리아로 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어를 더 배우는 것이 나이지리아에 돌아가서도 도움이 되니까 여기에 계속 다니는 것이 ○○이에게 최적인 것 같아요.

05 | 재외동포, 영주권자의 결과적 정주와 취약한 가족생활 기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뷰에 참가한 한국계 중국인 영주권자나 재외동포는 유학생 부부와는 연령대나 가족 주기 자체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학생 부부가 학업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영주권자나 재외동포는 오랜 한국생활 중에 중년을 지나 노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재외동포로 들어와 있는 자녀는 취업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집단은 이주의 역사와 가족 이동 양상도 서로 비교되며, 이러한 점이 한국 생활 경험과 앞으로의 국내 거주에 관한 관심과 전망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뷰에 참가한 한국계 중국인들은 10년, 20년 전 일자리를 찾아 다양한 통로로 한국에 왔다. 한때 밀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왔거나 산업연수생으로 온 뒤 얼마 되지 않아 미등록 상태가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잠시 돈을 벌다가 가족들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당시로서는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랜 기간 한국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을’ 뿐 아니라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 자격, 영주 자격까지 따게 되면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한다.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재영-1〉 (Q: 한국에 오셨을 때 돈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했지요. ... 이렇게 있을지... (그때는 몰랐죠). 지금도 어쩌다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었네. 그냥 뭐 몇 년하고. 가서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길어지니. ... 지금 봐서는 뭐 무슨 결정이라는 것도 할 수도 없고 이리 하다보면 있다 보면 지금 사람들 보면 나 이 먹어서도 또 안가는 사람들은 또 안가더라고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려면 결단이 필요하지만, 일자리며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결단은 쉽지 않다. 중국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도 이제는 없다. 배우자와 자녀는 물론이고 형제자매까지 대부분 한국에 살고 있다. 마지막까지 중국에 남아있던 노인이 된 부모도 자식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족 관계망 전체가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계속 사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될 수밖에 없다.

〈재영-1〉 형제들도 여기에 있어요. ... 오빠 있고, 남동생 ... (Q: 남편분도 형제들이 한국에 계시고요?) 네. ... 중국에 여동생 있어요. (Q: 부모님이 점점 연세가 높아지시면) 걱정되지요. 그래서 자꾸 나오시라고 그래요. ... 그거 60세 이상인가 65세 이상은 비자 그냥 내주나 보더라고요. ... (Q: 부모님 연세가) 82세요. ... 여기가 기후가 많이 좋죠. 그래서 좀 나오시면 좋은데. 나오시면 우리도 좀 옆에서 자주 뵈 수도 있고.

〈재영-3〉 다 여기에 있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여기 나와 있지. 친척분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중국보다 여기 더 많아요. 중국에 없어요. ... 저도 나온 지 그동안에 뭐 별로 거기 가서 있는 시간이 없어나니깐 거기 정황을 잘 (몰라요.)

이처럼 체류자격이 안정되고 가족관계망 전체가 이동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터전으로서 한국의 위치는 커져가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안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20년 동안 부부 각자 일자리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중국에 있는 아이와 부모들에게 송금을 해가며 보다 나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중국에 남아있던

가족들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함께 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갑자기 불안으로 변화한다.

〈재영-4〉 제일 문제는 월세가 제일 문제예요. 그냥 담보대출 같은 거 해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는게 (꿈이에요). 이제 올 추석에 중국 들어가면 시어머니 모시고 와야 하니깐... 아주 오셔야 하는 상황이라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 월셋방에 사는 게 정말 허리가 쏠리는 것 같아요. 10년을 넘게 벌어도 아직까지 뭐 빌라 하나 살 형편이 안 되고 월셋방에 살아야 돼서. ... 그래서 대출이라도 가능하면 좀... 진짜.

〈재영-3〉 처음부터 식당일 한 게. 한번 식당 주방 그런 일 하니깐 그냥 식당 다니게 되지. 근데 너무 힘들어서. ... 뭐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근데 앞에 일은 앞날을 생각하면 조금... 이게 좀 걱정은 돼요. (Q: 어머니도 점점 나이 드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제까지 10년 이상 부부가 공장이나 식당, 가사도우미, 건설현장일 등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만간 그간 해왔던 ‘힘든’ 일은 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은 안 좋아질 것이고 가뜰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는 더욱 쪼들릴 것이 분명하다.

그나마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노후대비’를 해두고 있다. 한창 때에는 보험료 부담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던 이들도 질병이나 사고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점차 안 좋아지면서 우선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재영-3〉 (건강보험료) 8만 얼마 되더라고요. ... 좀 벅찬 고런 느낌이 들더라고. 몇 개월 동안에 그것도 쭉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영주권 넣었어요. 제가. ... 영주권이 있으면 어쨌든 조금 더 대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런 거 기대해서. ... 앞으로는 들어야 되죠. 올해까지 좀 지내보고 (지금 신청 중인) 영주권이 나오면 할라고 그랬죠. (영주권 있으면 건강보험료 좀 쌀 것 같아서.)⁷⁾

〈재영-1〉 (이제까지는) 건강은 뭐 어디 안 좋거나 그런 거 없이 잘해왔어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좀 아파지죠. 허리도 아프고... 조금씩 아파지죠. ...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요. 허리디스크도 있고. 그래서 일하다가 허리 아프면 쉬다가 그리 해요. ... 현장일이라는 게 공사일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한해 한해 먹어가니까 일을 해도 쭉 계속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따라줘서. 좀 힘들고. 그냥 힘든 대로 하고 있어요. (Q: 남편분은 나이가 어떻게?) 57세. ...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고. 한 5년 되었나? ... (Q: 그때 의료보험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의료보험(건강보험)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안했어요.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국해서 3개월 지나면 의료보험 돼요. 그런데 안했지요. 그런 쪽으로 생각도 안하고 안했죠. ... 돈 아까워서 그렇죠. 버는 건 그 정도인데 필수로 차비, 그 뭐 핸드폰 그런 건 기본으로 다 나가야 되지. ... 그런데 그렇게 다치고 저런 일로 병원에 들락 나락하게 되니까 (가입)하게 되더라고요. ... 뭐 3년 되었는가? ... 초창기에 할 때 8만원인가 얼마인데 조금 올라서

7) 주관적 생각일 뿐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다.

잘 모르겠어요. 지로로 자동으로 나가서 잘 모르겠어요. 9만원 정도. 8만 얼마, 9만원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 (Q: 그 전에 안 드셨다가 그러면 왜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몸이 나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도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 뭐 다른데 안 써도 해놔야지 싶더라고요.

문제는 경제적 상황이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생활기반은 불안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대안은 국적을 취득해 공공부조 대상이 되는 것 아니면 대학을 막 졸업한 자녀가 안정적 일자리를 찾는 것뿐이다.

〈재영-1〉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또 여기서 이제 이만치 살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되어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뭐 끝까지 여기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가면 뭔가 다 낯설고. ...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자리가 잡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또 이제 다 이제 낯설게 느껴져요. ... (남편도) 있는 데까지 있다 보면 이제 또 늙어서는 또 조건상 보면 그래도 여기에 있으면 괜찮겠다 싶으면 있으려고 할 거고. ... (노령연금 이런 것도 지금은) 없죠. 없어요. 국적 가진 사람들은 뭐 국적이니까 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영주권 가진) 사람들은 없죠.

〈재영-4〉 중국 들어가야 한다면 중국 가서 일년 내내 백원 한 장 수입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 가서 별 능력이 안돼요.... (남편이 하는) 노가다라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 이제 그 일을 이제 십년 뒤로 십년 어떻게 하겠나 싶고. ... (나도 식당일 계속 못할 것 같아 화장품 방문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수입이 뭐 돈 십만원 안되고 하니깐. 오죽하면 제가 밤 알바 다니고 있어요. ...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과연 안정적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갖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영주나 재외동포 등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들 중에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나 손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이외에 학업을 마친 자녀가 이주해 오는 경우도 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는 초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만큼, 이들은 가족원 자격이 아니라 스스로의 체류자격을 갖고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다. 2009년부터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재외동포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 것에 더해 2012년부터는 국내체류 동포의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도 초청이 가능해 국내에 입국한 후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스스로 재외동포 자격을 갖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재영-3〉 초청 비자를 할 수 있다 해서 25살 전으로 할 수 있으니깐 그때 빨리빨리 했지요. 시간에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저거 또 시험 봐가지고 와야 되니깐. .. 초청했으니깐 3개월에 한번씩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 그거 자주 들어갔다 나오면 그거 또 힘들잖아요. 돈도 또 들어가고. ... 그래가지고 뭐 정보처리 그거 해가지고 자격증. 그거 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어리고 하니깐 정보처리 그거 해가지고 그 F-4 땀어요.

성인기 입국 자녀들에게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도전이다. 이들이 한국에

온 데에는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함께 사는 것 이외에 한국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에 더 이상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하루 빨리 취업을 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한국인’들도 어려운 취업, 창업을 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부모세대가 오랜 기간 한국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자녀들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국에서 줄곧 식당일이나 가사도우미, 공장일, 건설 현장일 등을 해온 부모세대와 달리, 중국에서 대학을 나온 자녀들은 이러한 일자리에겐 관심이 없으며, 이들이 취득한 재외동포 자격으로는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수도 없다. 중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 지원을 했던 부모들도 이제까지 자신이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로는 자녀들이 사무직이나 통번역 등 자신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어렵다. 결국 취업의 필요성은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실업상태에 있거나 체류자격과는 무관하게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 밖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재영-3〉 (Q: 따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워낙 원칙적으로는 정보처리사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지금 일 안하고 있어요. ... (이제까지 일은) 딱 한달 했어요. 한 달 했는데. 사우나 ... 거기에 그 카운터 보는 일을 한 달 했는데. 여태까지 논 거지. 지금까지 놀았어요.

〈재영-4〉 엄마 아버지한테로 온다고 왔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 대한민국 워 대학생들도 취직하기 어려운데 우리니깐 그냥 막노동밖에 할 게 없잖아요. ... 아웃소싱이라는 데 있어요. ... 거기 이력서 갖다 놓으면 거기 언제 일거리 있으면 본인한테 전화오고 근데 요즘에 아웃소싱에 일이 없대요. ... 그래서 또 그 아웃소싱보다 약간 아랫 단계 인력사무소 있잖아요. .. 그런데도 또 가기도 하고.

〈재영-1〉 교포(F-4) 같은 데는 사무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이드 아니고 여행사 안에서 하는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하여간 사무직 쪽으로 된다고 그래요. ... 취직이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든 사람들이 오면은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했죠. 그런데 젊은 애들은 그렇게 안하려고 해요. (Q: 그렇죠. 대학까지 나오고) 그래서 애들이 취직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사람들도 취직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네들은 그런 현장일 같은 거 막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취직이 힘들고.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가고. ... 하다가 안 되면 또 왔다가 또 가서 다른 거도 해보다가. ... (F-4라도 주변에서) 일하는 거 보면 뭐가 다양해요. 다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많이 봐준다고 해야 할까. 그 분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고저 딱 몇 가지만 거기서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위법이 되잖아요. 다른 쪽에서 일하면. 그래도 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나 자녀 스스로나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방도를 찾는데 분주하며 취·창업 지원에 대한 관심도 크다. 하지만, 현재 체계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없으며 기본적 정보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취업, 창업 등 자신들의 관심사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동포사회 네트워크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듣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뿐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고 그 나머지의 제한된 정보도 정확성이 의문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해야 하는 이들로서는 취·창업 준비를 하고 싶어도 체계적인 접근은 시도하지 못한 채 혹시라도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이것저것 배우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영-4〉 (아들은) 청년들 쪽에 대출 같은 거 가능한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아직 경험이 없으니깐 무슨 물건을 갖다가 중국에 어디다 뭘 하겠는가... 한중무역협회 같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쪽으로 알아볼 수 있나. 그렇게 되면 뭘 돈이 100원짜리 하나도 없이 시작은 할 수 없는 거고, 자기 두 손으로 벌어서 할 거니깐 대출 같은 거 가능한가... (Q: 대출이나 취직하는 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로 어떻게 하세요? 어디 센터 같은데 찾아가세요?) 아직까지 어디 찾아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저 듣는 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가는 거지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깐. 은행가서 물어보거나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안 되는 줄로 알고. ... 그 떠돌아다니는 것, 뜬소문만 듣고 판단하는 거죠. ... 우리가 확실히 알아보려면 어디 가서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구청에 가서 일이 있나 물어볼 수도 없고.

〈재영-1〉 (Q: 평소에 딸은 뭘 하고 지내나요?) 지금 그냥 학원 같은데 다니라고 했어요. 와서 적응하라고. 컴퓨터 학원에 다니고. 글은 아니까. 거기에서 조선족학교에 보냈어요. ... 지도 갑갑하죠.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도 하는데 그것도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학원에도 뭐 사람이 몇이 안 되고... 여기에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 (F-4) 그거 가진 사람은 자기 조건에 따라서 되어 있어요. 애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같은 걸로 되어있어요. 대학생 조건으로 저거 되니까, 비자 나왔으니까 사무직 그런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는 뭐 이제 자격증을 내면 그 자격증에 따라서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Q: 무슨 센터 같은데 좀 가셔서 취업 상담을 받아보신 적도 있어요?) 아니요. 주변에서 아마 들었는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뭐 이제 주변에서 서로 알려주고 이제 금방 나오니까 갑갑하면 물어도 보고. 비슷한 조건의 애가 주변에 왔으면 어떻게 했는가 이야기하고. ... (사무직을 가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뭘 지 하고 싶은 거를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 (Q: 한국에 와 보니까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갑갑해하지는 않나요?) 갑갑해하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갑갑해하죠. 진짜 뭘 여기에 와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 취직을 하겠다고 하니까 컴퓨터 자격증을 따면 그래도 그걸로 해서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 그 동안 관광가이드 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메르스 때문에 안 좋아진 걸 보고 별이가 들락 달락 해서 안하게 되었고 전에는 미용일도 배워봤어요. 지금은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있죠. ... 갑갑해요. 애들 저렇게 나오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쪽에서 전공을 했다 해도 여기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돼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한 거를 써먹지를 못하고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니 공부를 다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 정말 애가 오니까 이제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부모는 한국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제도적으로도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등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세대 역시 본국에 명확한 대안이 없는 한 한국에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부모의 뒤를 따라 취업 제약이 없는 영주자격 취득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세대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직업 능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가운데 자녀 역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영주권자나 귀화자 가족의 빈곤문제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재영-3〉 영주권이 있으면 어쨌든 조금 더 대우나 뭐 이런거 있잖아요. 고런거 기대해서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Q: 한국 국적 딸 수만 있다면 따실 수 있겠다.) 네 조건만 되면 뭐. ... 내가 여기 있으니깐 (딸도) 내하고 같이 살아야지.

〈재영-4〉 저희들 중국 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잠깐 만기 되서 들어갔을 때 보면 못살겠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다보니깐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여기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F-4로 5년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F-4 땀어요.).... (Q: 주위에서 영주권자라도 대출이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국적 따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대출...에서 그것이 모르겠어요. 대출에 관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적을 많이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6 | 결론

체류자격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동반, 초청이 가능한 이들 중 유배우자만을 보면, 부부 모두 국내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가족생활이 정주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가족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동반, 초청이 가능한 외국인 사이에서도 가족동반 경향이나 가족생활에 따른 정주화 가능성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주자 가운데에서도 유학생, 특히 석·박사과정 유학생은 정부가 유치 및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핵심 집단이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이들의 현실과 요구는 관련 정책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유학생 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이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학교나 정부 모두 무관심한 가운데 자녀양육, 학교교육을 비롯해 가족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은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데, 유학생이라는 신분과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 상 그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본격적 취업을 할 수 없는 이들로서는 보육료 등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가족생활을 책임져야 했던 이들의 경험은 학위과정 졸업 이후의 계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분석결과에서도 가족동반이 가능한 여타의 체류자격에 비해 유독 유학생만이 배우자의 국내거주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국내체류의향이 비전문취업자보다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은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는 어느 유학생의 지적은

단지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든 이주자에게 가족생활이 정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조건에서 가족생활과 관련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어떠한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지에 따라 그 경향은 차별화될 수 있다. 특히, 변변한 수입 없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된 채 아이를 낳아 키워야했던 유학생에게는 가족생활 경험이 정주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10년-20년 이민자 생활을 통해 나이가 들고 가족관계망 전체가 한국으로 옮겨와 있는 이들은 한국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주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에 정주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체류자격이 여러 차례 변화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사자들의 상황이나 국가와의 관계는 변화해갈 것이며 상당수는 국적을 취득해 ‘국민’이 되고 그 가족은 ‘다문화가족’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 대부분이 앞으로 국내체류를 희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영주권 혹은 국적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는 외국인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김이선 외 2015: 41-42)와 영주자격 소지자 중 45.0%가 국적취득 계획이 있다는 정기선 외(2012: 81)의 조사 결과 등은 그러한 가능성이 실현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국민/외국인 이분법에 입각해 사회복지나 취업지원 대상이 규정되는 현재의 체계 하에서는 ‘외국인’으로 체류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정책과 무관한 상태로 있던 이들이 국민이 됨과 동시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국내에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는 생활상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국민이 됨’과 동시에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만큼,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사후 대책 이외의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정적 한계가 있다.

문제는 한국 생활을 오래할수록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해오던 ‘힘든 일’은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생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자녀세대 역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국적까지 취득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제도에서 이들은 ‘외국인’일 뿐으로 취업을 통한 자립 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원과는 무관한 위치에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 통해 취업 등에 관한 상담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⁸⁾ 실제 ‘외국인’이 접근해 도움을 받을 만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별 다른 대책이 없는 가운데 빈곤문제에 직면한 영주권자, 귀화자 가족의 증가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8) 일례로 한국계 중국인 집중 거주지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6조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의 범위로 2.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을 규정하고 있다(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2015.10.14. 검색).

참고문헌

김이선 외. 2015. 이주자의 가족형성 양상과 정책 접근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기선 외. 2012. 2012년 체류외국인실태조사 -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승희¹⁾ | 한양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에서의 모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중언어 사용이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한국인아버지와 외국인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만11, 12세의 자녀로서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외국 경험이 없는 자녀 671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매개로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이중언어 사용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언어 사용은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매개로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자아존중감,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 학교 적응

01 | 서론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 문화권 사이에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점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민족문화를 유지해 온 한국도 20세기 후반부터 외국인근로자와 여성결혼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2016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약 17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17).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후 한국 남성

1)

과 결혼하기 위해 이주하는 외국인 여성이 증가하면서 급증하게 되었다(윤형숙, 2005). 1993년에서 2016년까지 누적된 국제결혼 건수는 총 54만 9천여 건에 이르고, 이는 전체 결혼의 6.7%에 해당한다(통계청, 2017). 이와 같이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형태의 가정이 새로운 가족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교육 현장에 다문화가정 아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박현선 외, 2014). 교육부와 교육개발원(2016)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약 588만 명으로 매년 약 2-3%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초·중고 학교의 다문화학생 수는 약 99만 명으로 매년 약 20%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천지아, 황해영, 2016).

교육 현장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가정 자녀들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에서 생활하지만 가정에서 외국인부모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어와 외국인부모의 언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주양육자가 어떠한 언어로 자녀와 의사소통 하느냐에 따라 한국어만 유창할 수도 있고 한국어와 외국인부모의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능력을 갖출 수도 있게 된다. 이중언어 능력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의미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이중언어 능력은 그들의 외국인부모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천지아, 황해영, 2016).

한국에서는 가정 안팎에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모국어보다는 한국어를 사용할 것이 중용되고 있다(박현선 외, 2014).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대부분 외국인어머니와 한국인아버지로 구성되어 있다(통계청, 2017). 대부분 저개발국가에서 온 외국인어머니는 가정에서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받지 못 하고 가족들에 의해 모국어 사용이 억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깊이 관여하지 못 하고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순희, 2009; 성미영 외, 2010). 다문화가정의 많은 외국인어머니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자녀와 부족한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은, 2006).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는 자녀의 언어·인지능력 및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현선 외, 2014; 원인숙, 2012).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어 대신 부족한 한국어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이러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어머니가 한국어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습득의 기회를 놓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깊은 대화와 문화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하고 소극적인 양육 태도 및 양육 과정에서의 소외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박현선 외, 2014).

반면 모어에는 어머니의 풍부한 언어적 경험과 문화적 요소가 배어있기 때문에 자녀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주며, 자녀에게 충분한 언어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자녀의 인지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게 한다(권순희, 2009). 외국인어머니가 가장 자신 있는 모어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정서적 교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녀는 어머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강점으로 작용할 문화적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Zhang, 2005). 이중언어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은 자녀의 인지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유대 관계 및 자아상 형성, 학교 적응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채운, 임지영, 2013; 박영순, 2005; 박현선 외, 2014; 송영복, 2010; 최혜정, 2014; Ramirez et al., 2009; William & Berry, 1991).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그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들에게 한국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환경을 무시하고 그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로 양육될 것이 종용되고 있다. 가정 안팎에서 외국인어머니의 모국어가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어만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어머니 역시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언어발달을 더디게 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에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모국어 대신 부족한 한국어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러한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관점이며, 자녀가 외국인어머니의 언어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며 자신의 이중문화 환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채운, 임지영, 2013; 박영순, 2005; 박현선 외, 2014; 송영복, 2010; 최혜정, 2014; Ramirez et al., 2009; William & Berry, 1991).

이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밝힘으로써 기존의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한국어 중심의 단일언어 사용만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원 정책에서 이중언어교육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한국인아버지 및 시댁 식구들이 외국인어머니의 모국어와 문화를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외국인어머니 역시 가정 내에서 자녀를 자신의 모국어로 양육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에서의 모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이중언어 사용이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만11, 12세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매개로 학교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에서 모어의 중요성과 자녀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02 | 선행연구 고찰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그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첫 번째 관점은 주양육자인 외국인어머니가 자녀를 자신의 모어로 양육할 경우 자녀는 모어를 습득하게 되지만, 이것이 현지어인 한국어 습득이나 한국사회 적응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외국인어머니가 자녀를 한국어로 양육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외국인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강조하며, 그들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언어발달, 자아정체감, 학교 적응 등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유미, 이정윤, 2009; 박명숙, 2010; 최현욱, 황보명, 2009). 두 번째 관점은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초기에는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에 비해 전반적인 언어 발달이 늦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없어지며, 더 나아가 두 가지 언어의 습득이 인지적·언어적 기술을 촉진시켜 주며, 자녀의 자존감, 가족 관계, 사회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이다(권순희, 2009; 박현선 외, 2012; 여성가족부, 2013; 황혜신, 황혜정, 2000; Gathercole, 2002).

이중언어 환경이 자녀의 현지어 발달을 더디게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의 언어 발달 및 이주사회 적응을 위해 외국인부모가 현지어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주자가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이주사회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주자에 대한 동화주의적 정책이 이주자와 그 가족들의 이주사회 적응 및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주자 정책이 점차 이주자의 고유문화와 이주사회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며 두 문화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주의, 통합주의로 전환되고 있다(박영순, 2005; 이창덕, 2010; 천지아, 황해영, 2016). 이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도 이주자들이 주류사회에 빨리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주류사회 언어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주자의 문화와 언어를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보존적 이중언어 교육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이창덕, 2010).

미국에서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용광로 정책(melt pot policy)’이라 불리는 동화주의적 정책에 따라 이주자의 모국어에 대한 탄압이 있었으며, 이주자 자녀로 하여금 신속하게 자신의 모국어를 버리고 표준영어를 배우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영어 중심의 단일언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이주자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습 부진과 중도 탈락이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박기옥, 2010). 이에 미국에서는 1968년에 ‘이중언어교육법’을 제정하여 소수민족의 학생들이 자신의 모어와 영어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였다(이창덕, 2010). 이러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한 결과, 단일언어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 비해 이주자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였고 위축감이나 소외감도 줄어들었으며 학업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박기옥, 2010; 이창덕, 2010). 이와 더불어 언어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등에 의해 이루어진 이중언어 사용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모어교육이 이주자 자녀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사회성이나 지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권순희, 2009; 이은경, 오성숙, 2012; 성미영 외, 2010; 황혜신, 황혜정, 2000; Bialystok & Martin, 2004; Bialystok & Craik, 2010; Zhang, 2005).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교 적응에서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있다(김기덕, 박민서, 2009; 김수희, 전성희, 2012; 정현영, 2006). 그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교사나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어 대인 관계의 어려움, 학습 결손 및 무기력 등을 야기할 수 있다(김기덕, 박민서, 2009; 김수희, 전성희, 2012; 정현영, 2006). 어려서부터 이중언어 환경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정 자녀가 일반가정 자녀에 비해 초기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학교 적응을 위해 그들의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 부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 연결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머니의 언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처한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환경의 강점을 간과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학령기 초기에는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에 비해 전반적인 언어 발달이 늦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차이는 없어지거나 오히려 더 풍부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혜신, 황혜정, 2000; De Houwer, 1995; Gathercole, 2002).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으로 인한 한국어 능력 부족은 성장 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러한 현상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이중언어 사용이 장기적으로 그들의 인지·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환경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가정 내 모국 문화 및 언어 공유경험, 이중언어 프로그램,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 등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외, 2012; 박현선 외, 2014; 원인숙, 2012).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은 자녀로 하여금 가정 내 이중언어·문화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가족응집력,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 2008; 박현선 외, 2014; 성미경, 2010; 원인숙,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관계는 또한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은식, 김충희, 2002; 박계란, 이지민, 2010; 양순미, 2007; 이순비, 2010; 이지애,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과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연결하여 고려해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중언어 사용을 다루기보다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나 외국인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거나(김기덕, 박민서, 2009; 김수희, 전성희, 2012; 정현영, 2006), 이중언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이중언어·이중문화 환경이 자아존중감이나 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지만, 이를 통해 이중언어 사용이 궁극적으로 학교 적응에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영향 관계를 보여주지 못 하는 한계를 갖는다(박계란, 이지민, 2010; 박현선 외, 2012; 원인숙,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이중언어·문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모-자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학교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박현선 외(2014)의 연구는 이중언어 사용이 모-자 관계를 매개로 심리적 적응 산물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적응 산물인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을 각각의 독립된 종속변수로 다루고 있어 이중언어 사용과 모-자 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최종적으로 학교 적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 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그들이 독립변수로 사용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제공하는 이중언어·이중문화교육으로서 가정에서 자녀가 외국인어머니의 언어를 배우거나 사용하는 측면을 다루지 못 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자녀가 모어를 배우거나 모어를 사용하도록 지지받는 정도와 모어 능력을 중심으로 측정한 이중언어 사용 변수를 독립변수(외생변수)로 하여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매개로 궁극적으로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중언어의 효과를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가정 밖에서 제공되는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위주로 다룬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적응을 분석하였으며, 이중언어 사용 변수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어 중심으로 측정하였다는 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중언어 사용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보다 확장하여 이중언어 사용이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학교 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는 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03 |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 주관 하에 통계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 수행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한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서 조사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정의하는 다문화 대상자와 대상

자의 가구 및 가구원으로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귀화자,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배우자,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의 만9~24세 청소년자녀와 가구이다. 조사내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일반 특성과 가족의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한국인아버지와 외국인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만11, 12세의 자녀로서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외국 경험이 없는 자녀 671명이다.

2) 연구가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1: 이중언어 사용은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이중언어 사용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이중언어 사용은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이중언어 사용은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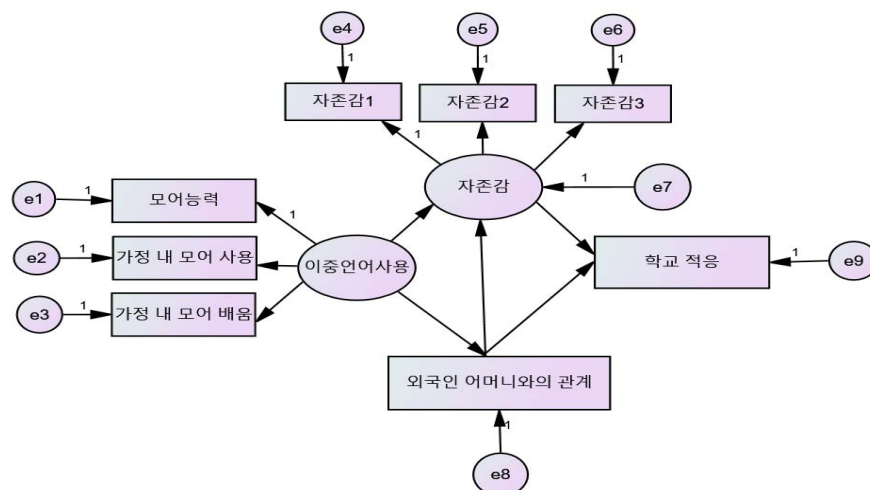
가설6: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는 학교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자아존중감은 학교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모형 및 변수의 측정

이중언어 사용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중언어 사용을 외생변수(독립변수)로, 학교 적응을 내생변수(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는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사용하였다. 가설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외생변수인 이중언어 사용은 가정 내 모어 격려, 가정 내 모어 배움, 모어 능력의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귀하는 평소에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의 세부 항목인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를 가정 내 모어 격려 문항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배운다'를 가정 내 모어 배움 문항으로 사용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5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모어 능력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전혀 못 한다'를 1로, '매우 잘 한다'를 5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중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세 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로, '매우 그렇다'를 5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또 다른 매개변수인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에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를 1로, '매우 만족한다'를 5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내생변수인 학교 적응은 '귀하는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전혀 적응하지 못 한다'를 1로, '매우 잘 적응한다'를 5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4) 분석방법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법으로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결합된 형태의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형은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신뢰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보하고, 이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에 반영된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잠재변수 간의 영향관계는 경로분석을 통해 파악되며, 이는 구조방정식의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에 반영된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은 측정과 예측(설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으며 직접효과 외에도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도 알 수 있어 변수들 간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보다 분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매개로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통계패키지는 AMOS23이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2단계 모델화 방법을 사용하는데(김수영, 2016; Kline, 2011), 1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의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AVE)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확인된 측정변수의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구조회귀모형분석을 통하여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량으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며,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중언어 사용과 학교 적응 사이에서 매개하는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표준오차값을 산출하고, 간접효과에 대하여 신뢰구간을 이용한 검정을 실시한다.

04 |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51.86%, 48.14%로 나타났다. 외국인 어머니의 출신국은 중국(한국계 포함)이 33.39%로 가장 높으며, 일본, 대만, 홍콩이 24.89%, 필리핀이 14.61%,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가 8.05%, 베트남이 5.81%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3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이 26.5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48	51.86
여자	323	48.14
외국인어머니의 출신국		
중국(한국계외)	128	19.08
중국(한국계)	96	14.31
일본, 대만, 홍콩	167	24.89
베트남	39	5.81
필리핀	98	14.61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	54	8.05
기타국가	89	13.26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24	3.5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26	18.7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25	33.5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78	26.53
400만원 이상	118	17.59
총 조사대상자(명)	671	

2) 상관관계

연구가설의 검정을 위해 모형에 포함된 관측변수들과 내생변수들의 상관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측정된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최대 0.697로 나타나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황진수 외, 2014). 각 측정 변수는 왜도의 절댓값 3.0이하, 첨도의 절댓값 10.0이하의 기준에 포함되어 일변량 정규 분포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김수영, 2016; Kline, 2011). 또한 각 항목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중언어 사용은 2.60점, 자아존중감은 3.97점, 외국인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는 4.49점, 학교 적응은 4.61점을 나타냈다.

<표 2> 측정 변수 간 상호 상관행렬

변수		이중언어 사용			자아존중감			외국인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학교 적응
		모어 능력	가정 내 모어 사용	가정 내 모어 배움	자존감1	자존감2	자존감3		
이중언어 사용	모어능력	1							
	가정 내 모어 사용	.334*	1						
	가정 내 모어 배움	.514*	.506*	1					
자아존중감	자존감1	.085*	.100*	.127**	1				
	자존감2	.045	.079*	.098*	.697**	1			
	자존감3	.060	.091*	.084*	.607**	.655**	1		
외국인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113*	.104*	.119**	.246**	.296**	.334**	1	
학교 적응		-.075	-.027	-.015	.283**	.362**	.335**	.240**	1
N		671	671	671	671	671	671	671	671
전체평균		2.60			3.97			4.49	4.61
평균		2.39	2.89	2.52	3.87	3.87	4.15	4.49	4.61
표준편차		1.22	1.25	1.26	.86	.84	.81	.77	.68
왜도		.76	.10	.37	-.27	-.25	-.54	-1.45	-1.83
첨도		2.65	2.05	2.04	2.44	2.36	2.50	4.65	5.96

주) **: $p < 0.01$, *: $p < 0.05$

3)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개념 및 그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항목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과 각 항목에 해당하는 요인적재량을 나타내었다. 요인적재량은 0.576과 0.881 사이

의 값을 나타냈으며, 모든 항목들은 유의수준 0.001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에서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는 CFI, NFI, IFI는 모두 기준치 0.90 이상의 값들로 나타났고, RMSEA는 권장수준인 0.07 이하의 값을 보여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기준치를 만족시켰다(Fornell &, Larcker. 1981).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Chronbach's α)	측정 항목	t값	표준화 모수값
이중언어 사용 (0.712)	모어 능력: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고정	0.582
	가정 내 모어 격려: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11.452***	0.576
	가정 내 모어 배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 나라의 말을 배운다.”	10.147***	0.881
자아존중감 (0.849)	“나는 내가 많은 장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고정	0.805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20.938***	0.866
	“전반적으로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19.707***	0.756

주) ***: $p<0.001$; Model Fit Statistics: $\chi^2=4.366(p=0.823, df=8)$, $\chi^2/df=0.546$, RMSEA=0.000, CFI=1.000, NFI=0.997, IFI=1.003

본 연구는 구성개념별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의 값을 도출하였고, AVE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잠재변수 이중언어 사용의 CR은 0.6, AVE는 0.4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의 CR은 0.9, AVE는 0.7로 나타나 구성개념들의 집중타당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와 판별타당도는 〈표 4〉,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집중타당도를 보여주는 AVE 값보다 상관관계 제곱값이 0.2 이상 작게 나왔으므로 잠재변수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표 4〉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이중언어 사용	자아존중감
이중언어 사용	1	
자아존중감	0.123**	1

주) **: $p<0.01$

〈표 5〉 잠재변수의 판별타당도

	이중언어 사용	자아존중감
이중언어 사용	0.4	
자아존중감	0.015	0.7

4) 구조모형의 측정 결과

본 연구는 제안된 가설 검증을 위해 공분산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1부터 7을 검정하기 위한 구조모형 측정 분석결과는 모델 적합도가 $\chi^2=32.902(p=0.012, df=17)$, $\chi^2/df=1.935$, RMSEA=0.037, CFI=0.989, NFI=0.978, IFI=0.989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 Larcker, 1981).

가설로 설정된 경로에 대한 계수를 검토해 인과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이중언어 사용은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직접효과($\hat{\beta}=0.14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이 채택되었다. 또한 이중언어 사용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직접효과($\hat{\beta}=0.088,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가 채택되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매개로 하여서도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hat{\beta}=0.05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이 채택되었다. 이중언어 사용은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hat{\beta}=0.06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가 채택되었다.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직접효과($\hat{\beta}=0.34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가 채택되었다. 또한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는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직접효과($\hat{\beta}=0.111,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6이 채택되었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서도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hat{\beta}=0.12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7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직접효과($\hat{\beta}=0.365,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8이 채택되었다.

<표 6> 구조모형 검정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설채택여부
이중언어 사용	→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	0.148***	-	0.148***	가설1 채택
	→	자아존중감	0.088**	0.051***	0.138***	가설2, 3 채택
	→	학교 적응		0.067***	0.067***	가설4 채택
외국인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	자아존중감	0.341***	-	0.341***	가설5 채택
	→	학교 적응	0.111**	0.124***	0.235***	가설6, 7 채택
자아존중감	→	학교적응	0.365***	-	0.365***	가설8 채택

주) ***: $p<0.01$, **: $p<0.05$; Model Fit Statistics: $\chi^2=32.902(p=0.012, df=17)$, $\chi^2/df=1.935$, RMSEA=0.037, CFI=0.989, NFI=0.978, IFI=0.989

05 |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자녀가 모어를 배우거나 모어를 사용하도록 지지받는 정도와 모어 능력을 중심으로 측정한 이중언어 사용 변수를 외생변수로 하여 이중언어 사용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매개로 궁극적으로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중언어 사용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환경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박현선 외, 2012; 박현선 외, 2014; 원인숙, 2012)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부모와의 애착관계, 가족응집력,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곽금주, 2008; 박현선 외, 2014; 성미경, 2010; 원인숙, 2012)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중언어 사용은 자아존중감과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를 매개로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제시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가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박현선 외, 2012; 박현선 외, 2014; 원인숙, 2012; 곽금주, 2008; 박현선 외, 2014; 성미경, 2010; 원인숙, 2012)와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문은식, 김충희, 2002; 박계란, 이지민, 2010; 양순미, 2007; 이순비, 2010; 이지애, 2008)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자아존중감,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 학교 적응 등 그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어머니가 자녀에게 모어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외국인어머니 본인이 모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을 물론, 이에 대한 한국인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이중언어인재 양성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을 각 지자체의 공동과제로 지정하여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외국인어머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인아버지와 조부모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중언어 관련 사업에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가족들을 포함시켜 이들에게 가정 내에서 외국인어머니의 모어 사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중언어 사용의 유용성을 일깨움으로써 가정 내 외국인어머니의 모어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가 외국인어머니의 모어 사용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령기에 접어들어 학교를 다니게 되면 자녀들은 점차 한국어가 더 능숙해지면서 모어를 배우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자녀들이 모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동기화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어머니의 국적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외국인어머니와 국적이 같은 자녀들끼리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비롯하여 외국인어머니의 모어를 배우기 위한 ‘외국인어머니 모어 공부모임’이나 ‘독서 토론회’, ‘외국인어머니 출신국에서 제작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고 소감 공유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외국인어머니의 모어와 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배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이중언어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이중언어를 활용한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활동,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다문화이해교육을 비롯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지도할 수 있는 다문화강사의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내생변수인 학교 적응 변수를 주관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단일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하지만 학교 적응은 개인이 느끼는 부분 외에 학교에서의 수업태도, 규칙 준수, 성적, 교우 관계, 교사들의 의견 등 보다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포함하여 측정한 학교 적응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해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분석으로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학교 적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이에 추후에는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패널 자료가 구축되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과 학교 적응의 종단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어머니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와 모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 및 그들의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볼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유미, 이정윤. (2009).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7(1): 49-63.
- 고은. (2006).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부모들이 갖는 모국어에 대한 가치기준과 경험적 의미. 언어치료연구, 15(3): 143-162.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 권순희. (2009).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34(0): 57-115.
- 김기덕, 박민서.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8(1): 97-121.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수희, 전성희. (2012). 다문화 가정 자녀의 다문화적 특성에 따른 학교 생활 적응. 아동가족치료연구, 10(0): 53-67.
- 김채윤, 임지영. (2013).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의 연령 및 이중언어 사용 정도에 따른 실행기능의 차이. 아동교육, 22(2): 87-102.
- 문은식, 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박계란, 이지민. (2010).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981-991.
- 박기욱. (2010).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정책 방안. 계명대학교 한국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명숙. (2010).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193-218.
- 박영순. (2005). 이중언어 교육의 본질과 한국어 교육의 과제. 이중언어학, 29(0): 11-33.
- 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 (2012).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이중문화적 양육 환경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양육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65-388.
- 박현선, 이채원, 박소은. (2014).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문화 교육의 효과분석-프로그램 과정산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6: 57-83.
- 성미영, 김정현, 전세경, 정현심, 권윤정.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애착 및 유아-어머니 상호작용 특성 - 애착 유형, 애착 표상, 애착 안정성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9(3): 23-39.
- 송영복. (2010). 초등 다문화 학습자 대상 이중언어 교육 사례연구. 이중언어학, 43: 247-275.
-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 여성가족부. (2013). 이중언어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13-07.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원인숙. (2012).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1): 89-105.
- 이순비.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경, 오성숙. (2012). 어머니의 언어사용 환경에 따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양상. 열린유아교육연구, 17(4): 177-205.
- 이지애. (2008).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에 관한 비교연구-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창덕. (2010). 다문화 한국 사회를 위한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교육, 1(1): 49-76.
- 전성희.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지아, 황해영. (2016). 국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연구 동향 - 이주부모나라 언어교육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10): 107-120.
- 최현옥, 황보명. (2009).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한국어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15-329.
- 최혜정. (2014).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27: 83-107.
- 통계청. (2017). 1993년~2016년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
- 황진수, 이광호, 현성협. (2014). 컨벤션센터 브랜드 경험이 브랜드 애착과 구전 의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 관여도의 조절 효과. 호텔경영학연구, 23(4): 113-127.
- 황혜신, 황혜정. (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 행정안전부. (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 Bialystok, E. & Martin, M. M. (2004). Attention and inhibition in bilingual children: evidence from the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task. *Developmental Science*, 7(3): 325-339.
- Bialystok, E. & Craik, F. I. M. (2010). Cognitive and linguistic processing in the bilingual mind. *Psychological Science*, 19(1): 19-23.
- De Houwer, A. (1995). 『Bilingual language acquisition』. In P. Fletcher & B. MacWhinney.

- (Eds.), *The handbook of child language* (pp. 219–250). Oxford, UK: Blackwell.
- Fornell, C., & D. F.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thercole, V. C. M. (2002). 『Monolingual and bilingual acquisition: Learning different treatments of that-trace phenomena in English and Spanish』. In D. K. Oller (Ed.), *Language and literacy in bilingual children*.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amirez, M., Perez, M., Vadez, G., & Hall, B. (2009). Assessing the long-term effects of an experimental bilingual-multicultural programme Implications for drop-out prevention, multicultural development and im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2(1): 47–5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liam, C. L.,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642.
- Zhang, D. (2005). Home language maintenance and acculturation among second-generation Chinese Children. Ph 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토론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외국인어머니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토론문

박민정 | IOM이민정책연구원

1990년대부터 급증한 국제결혼이주의 흐름이 2005년 정점(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 30,719건)을 찍으며 2017년 14,869건으로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도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 보다는 자녀의 한국사회의 적응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도 본 발표문에서 언급되었듯이, 한국어 습득 중심의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이중언어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상호주의적 관점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다른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수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OECD 국가 중 가장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주배경 아동에 관한 연구를 보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의 산출 방식이 각각 달라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주배경 아동 및 그들의 생활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근 연구동향이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의 주제는 매우 흥미롭다. 특히 이중언어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발달지연 및 언어장애와 연결되면서 ‘영유아기’ 연구에 치우쳐 있으며, 아동기의 이중언어 사용 및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현 시점을 고려하면 연구의 의의 및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단,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 통계분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 혹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문항 중 변수로 선정되어 활용된 문항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이중언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언어능력을 ‘한국어사용’, ‘모어사용’ 능력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집에서의 이중언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가족의 격려, 가정내의 배움, 앞으로 습득 의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 논문은 이중 세 가지를 이중언어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다.

- 자아존중감과 관련해서는 세 문항이 있는데 모두 사용했으므로 이견이 없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관계 만족도’ 한 문항만을 활용하였는데, 이 외에도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을 측정할 문항을 배제하고 있다. 실제 이중언어 사용은 대화시간과 더 연관될 수 있으며, 특히 표

본이 ‘국내에서 성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하였거나 ‘외국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어머니와의 대화시간 평균이 더 길고 이중언어 사용률이 더 높다.

- 학교생활 적응 변수에서 활용한 문항 역시 ‘학교생활 적응’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학교생활 적응은 ‘재학 중’인 학생들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본 연구모형의 표본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공부의 어려움, 친구관계 등의 다른 변수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제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아동 중 56.6%가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 결과를 참고한다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아동이 학교 적응에 문제가 있고, 학교생활 적응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중언어보다는 한국어 능력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통제변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아동의 성별, 외국인어머니의 출신국, 가구소득, 특히 한국어능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의 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인데 이들을 통제하지 않고 구조방정식을 산출하였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특히 여타 이중언어 관련 연구들을 보면 어머니의 출신국은 이중언어 사용과 매우 밀접히 관련이 있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중국 출신들은 어머니가 중국어와 한국어에 거의 능통하여 아이들이 이중언어 사용률이 높다. 러시아나 우즈벡 등은 어머니가 한국어 사용률이 낮아서 아동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남아출신의 어머니들은 서툰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아동의 이중언어 사용률이 매우 낮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수가 통제되어 있지 않다.

셋째, 구조방정식의 변수간의 관계에서 ‘이중언어사용→어머니와의 관계→자아존중감→학교생활 적응’이 합당한지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지,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한 아이들이 자아존중감이 높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고 해서 인과적 효과성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한국어능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유리하며 이중언어 사용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주로 이중언어와 학교생활 적응에의 영향력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의 직접적인 관계는 모형에서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학교생활 적응까지 연결하지 못하고 이중언어사용과 어머니와의 관계, 이중언어사용과 자아존중감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연구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에 있어서도 요인적재량 0.5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0.7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이중언어 사용에 있어서 모어 능력과 모어에 대한 가족의 지지나 배움은 약간 다른 결이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에 활용하려면 사실 이중언어 사용, 자아존중감, 이중언어사용+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 세 가지 모델 핏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개인적으로 이중언어 사용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밝혀져서 이중언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희망하는 마음을 같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단일 시점에서의 연구보다는 다문화 패널 등 한 아이의 언어발달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특히 한국어 사용과 별개로 연구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만 보면 이중언어의 사용이 어머니와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매개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 도달하는 것에는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나 우려된다. 오히려 현 학교의 프로그램이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이나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생활환경 만들기 등 가족 외의 다른 방향에서의 언어사용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Korean Children of a Migrant Background in Korea, Chin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신윤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n Children of a Migrant Background in Korea, Chin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2018년 한국이민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01호

신윤정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배경

PART 2.

- 인구 이동의 증가 및 가족 구조의 복잡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이주 배경 아동 등장
- 가족 구조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이주 배경 아동 증가
 - ✓ 국내: (과거) 이민 배경 부모의 한국 출생 자녀 → (최근)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 혈통” 이주 배경 아동 → “한국 거주” 이주 배경 아동으로서 이슈 확대
 - ✓ 국외: 해외 거주 중인 ‘한국 이주 배경 아동’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재외 동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
예) 귀환 이주 여성과 함께 이동한 아동, 해외 주재 한국인이 남겨 놓은 자녀들

연구 목적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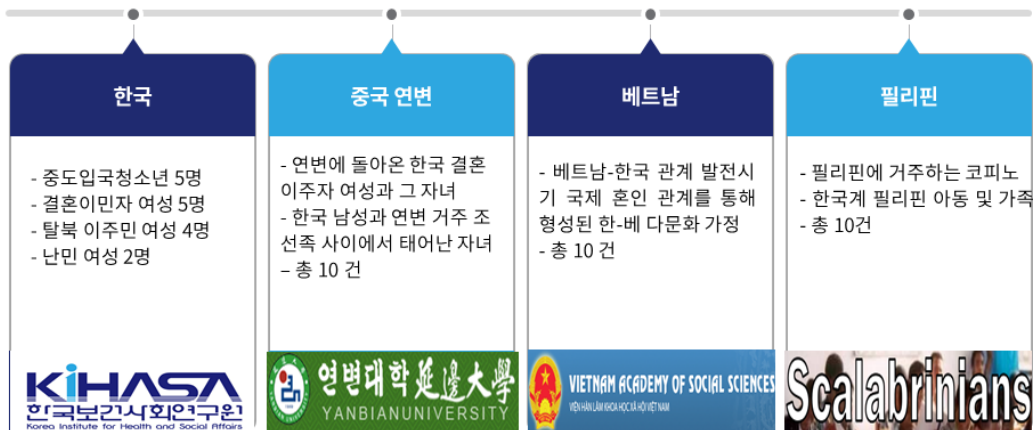
- 한국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들이 가족 생활, 학업 수행, 정체성 등 성장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업 파악
- 발생 배경, 성장 환경 그리고 국가적 특수성에 따라 한국 관련 국내외 거주 이주 배경 아동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분석
-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접근 방향성 제시

연구 방법론

PART 4.

-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 · 성장 환경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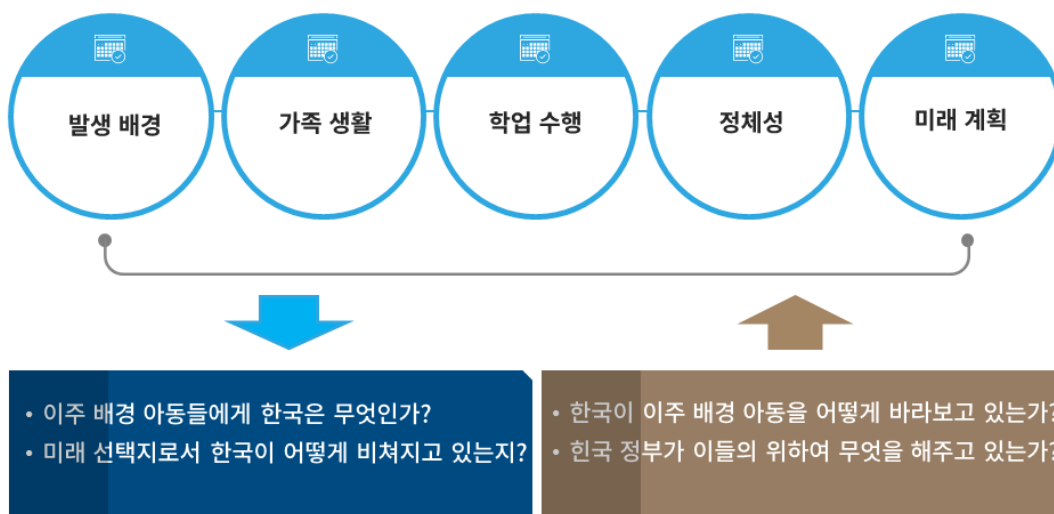
한국과 외국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 현황 및 이슈 파악을 위한 심층 면접 (2018년 6~7월 수행)



분석 방법

PART 5.

- 국가별 분석 내용을 기초로 아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는 1차 코딩 작업 수행
 - 각 다섯 가지 주제 내에서 국가별로 2차 코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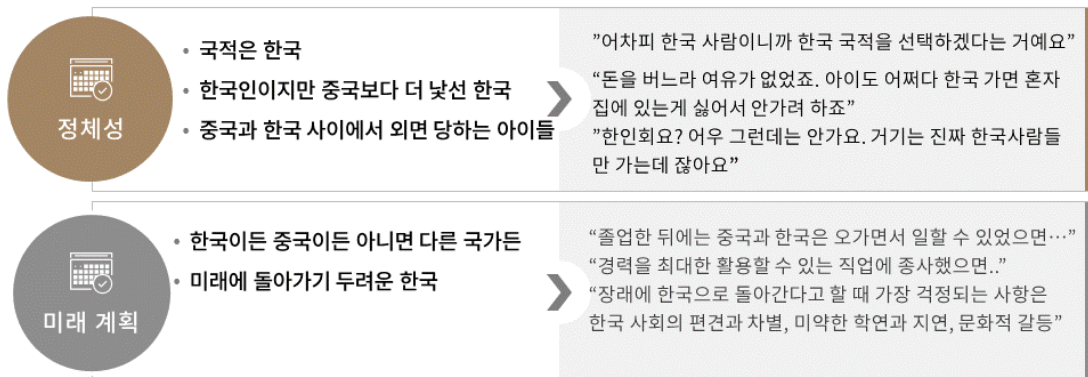
성장 발달 과정에서의 과업: 중국 연변 거주(1)

PART 6.



성장 발달 과정에서의 과업: 중국 연변 거주 (2)

PART 7.



성장 발달 과정에서의 과업: 베트남 거주(1)

PART 8.

 발생 배경	• 한국인 아버지의 직업 • 시댁과의 불편한 관계 • 한국에서의 차별 대우	”사귈 때 남편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 컴퓨터 회사에서 일했어요.” ”저희 부부가 베트남에 오기로 결정해서 겨우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고 만약 안 그랬으면 깨졌을 거예요” “한국인들이 저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것을 알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가족 생활	• 엄마보다 외가의 돌봄 • 한국 엄마와 다른 양육 방식 • 한국 가족 방문 여행	“애들 교육은 애들 아빠와 외할아버지가 도와 주세요” “저는 베트남 엄마잖아요 한국인 엄마처럼 가르칠 수도 없고요” ”매년 애들 2~3번 한국에 보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한국어 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고요” “우리 애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한국에 못 가봤어요”
 학업 수행	• 한국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 • 값비싼 한국 학교 교육비 • 이중 언어 혼동 문제	”아빠가 매일매일 몇마디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되야 오잖아요. 엄마들도 아이 가르칠 여건이 안되고 한국어도 안되고” “형편이 안되는 가족은 베트남 학교 보내야죠” “애가 힘들어 헛갈리잖아요. 베트남 말로하는 친구에서 갑자기 한국말... 다른 선생님도 한국말하고 친구들도...”

성장 발달 과정에서의 과업: 베트남 거주(2)

PART 9.

 정체성	• 국적과 체류 자격 • 한국과의 연결고리는 아빠 • 한국인으로서의 체면 지키기	”한국 국적 신청을 먼저 해서 아이가 베트남에서 출생했는데도 베트남 국적을 더 신청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 아빠가 애는 한국인이니 한국 학교에서 공부해서 나중에 한국 사회에 적응 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인이니까 베트남 가족처럼 살수는 없고”
 미래 계획	• 한국 Dream이 있을까?	“한국 국적이 있고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면 나중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월급도 더 높을 것이고”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한국 국적 유지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 보면 그냥 쉬운 방향, 우리 베트남 국적을 가져서 쉽게 살아보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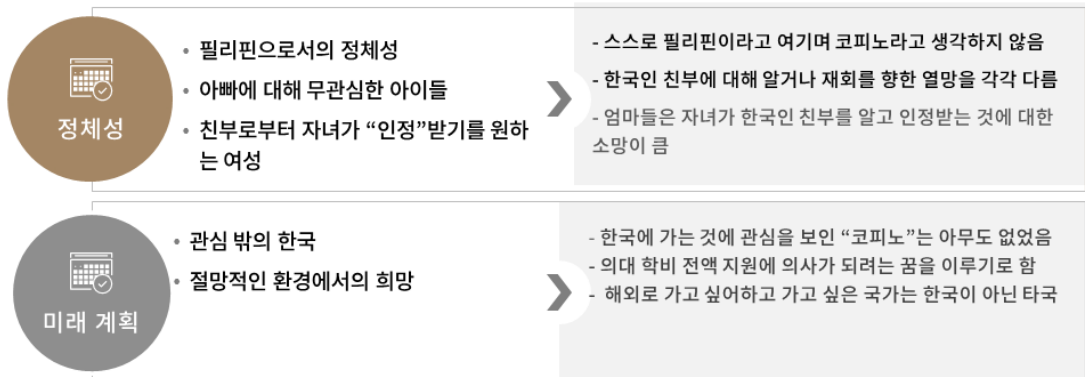
성장 발달 과정에서의 과업: 필리핀 거주(1)

PART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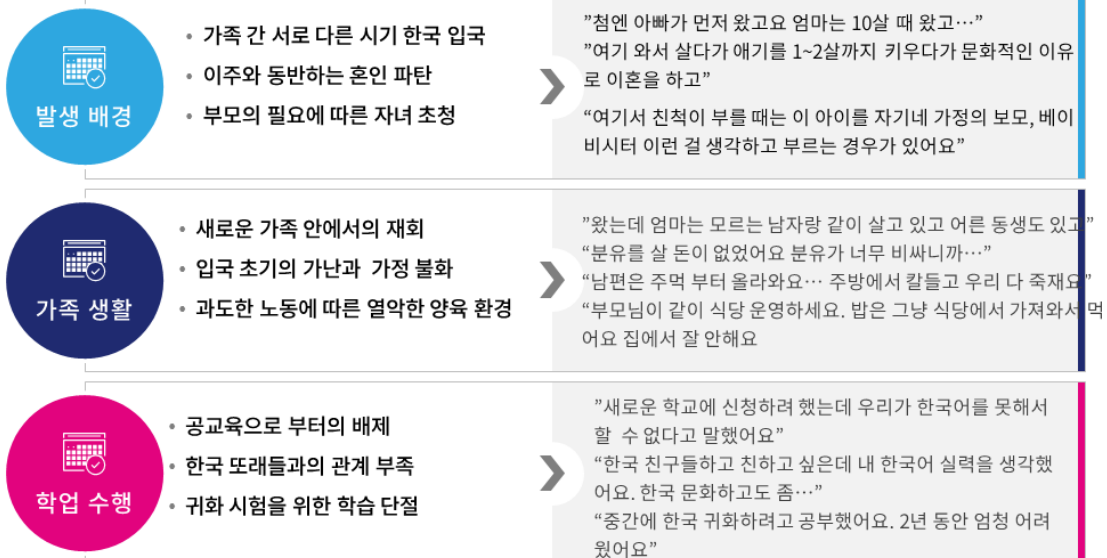
성장 발달 과정에서의 과업: 필리핀 거주(2)

PART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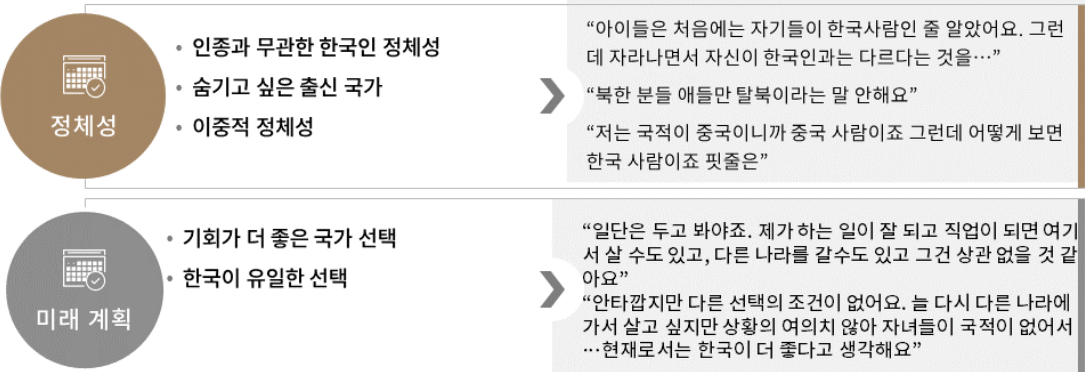
성장 발달 과정에서의 과업: 한국 거주 (1)

PART 12.



성장 발달 과정에서의 과업: 한국 거주(2)

PART 13.



이주 배경 아동이 바라보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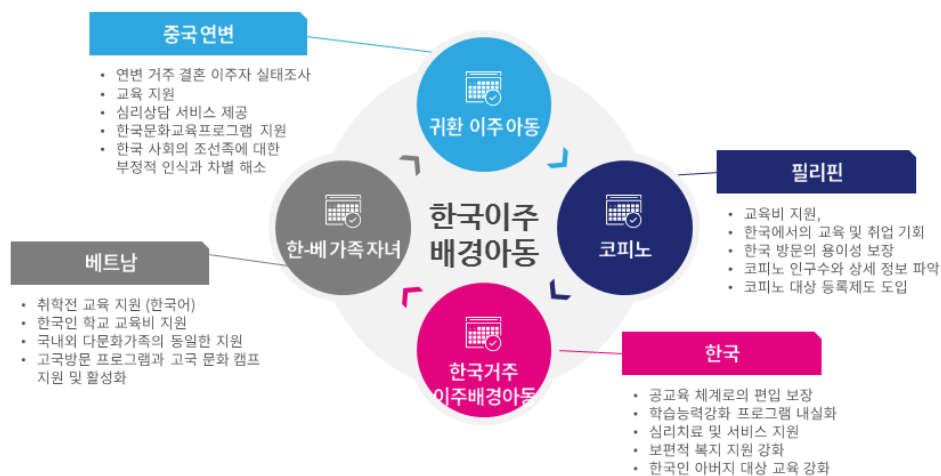
PART 14.

국가	발생 배경	성장 환경	국가적 상황	한국에 대한 인식
• 한국	- 결혼이민자여성의 자녀 - 외국인 근로자 부모 동반 - 탈북 혹은 난민을 입국	- 한국에서 출생 및 성장 - 외국에서 성장 후 입국 - 다문화 아동에 대한 차별	- 열악한 출신 국가 상황 - 중국 경제 부상	- 한국은 어쩔 수 없는 선택 - 출신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은 선택지가 될 수도
• 중국(연변)	- 한국 출생 후 귀환 - 한국 혈통으로 중국 출생 (조선족)	- 부모와 아동의 한국 잦은 왕래 - 한국과 중국 이중 문화 노출 - 한국어 보다 중국어 교육 강조	- 중국 경제 부상 - 한국에서의 조선족 차별 - 중국에서 막는 한국인 정체성 형성	- 중국이 더 나은 선택지일 수도 - 한국이 매력적이기는 하나 선택하기에는 부담
• 베트남	경제 활동으로 이주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 베트남 외가에서 베트남 문화 영향 받고 성장 - 한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부모	- 열악한 베트남 경제 상황 -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	- 한국인으로서는 살고 싶은 욕망 - 한국 국적 유지 - 그러나 한국인이 되기에 역부족한 현실 (높은교육비 등)
• 필리핀	무책임한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으로 성장 - 한국 문화 접촉 기회 없었음	필리핀의 열악한 경제 상황	- 한국이 매력은 있으나 너무 낯선 곳 - 한국보다는 다른 외국 선호

한국 정부로부터 바라는 지원 사항

PART 15.

- 외국 거주 아동: 교육 지원, 한국 문화 및 고국 방문 프로그램, 현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한국 거주 아동: 한국 국적 아동과 동등한 지원, 언어 및 학습 지원, 정체성 강화 교육 등



주요 논쟁 사항

PART 16.

-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을 한국 정부의 정책 대상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 정책 대상 기준을 “속지 주의” 혹은 “속인 주의”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 지
- 상호 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 한국 정부 직접 지원 vs 해외 거주지 NGO 혹은 한인회를 통한 지원
- 정체성 훼손 등 출신국가와의 관계 및 협의 고려 필요

감사합니다



사회 / 설동훈 | 전북대학교

-
- 01 국제이주 브로커와 한국의 이주 인프라:
노동자, 조선족 및 결혼이주자를 사례로**
- 발표 백일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고민경 | 이화여자대학교
- 토론 최서리 | 한국이민학회
-
- 02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차별인식과 우울:
차별대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 최영미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송영호 | IOM이민정책연구원
- 토론 강동우 | 한국노동연구원
-
- 03 이민에 관한 인식 상의 공통점: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 발표 신소희 |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석사졸업
- 토론 손인서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국제이주 브로커와 한국의 이주 인프라: 노동자, 조선족 및 결혼이주자를 사례로

백일순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고민경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이주 브로커와 한국의 이주 인프라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결혼이주자를 사례로

백일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선임연구원)
고민경(이화여대 사회과 교육과 강사)

발표 목적과 개요

- 브로커에 초점을 둔 ‘이주 인프라’의 구성 요소와 작동방식
- 한국에서의 이주 양상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화
- 사례 발표
 - 결혼이주자
 - 조선족
 - 외국인 근로자

이주 인프라 및 관련 개념들

- 이주 인프라
 - 이주자와 국가 및 브로커를 포함한 행위자, 제도와 법, 기술, 기관과 네트워크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형성되는 연결의 총체
 - 연결망을 통해 어떻게 이주가 지속되는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주를 촉진시키는 각 행위자와 제도 등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
 - 공식/비공식 혹은 합법/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형성되는 초국가적 이주의 제도와
- 이주 산업 혹은 중개업?
 - 이주자와 정착국을 매개하는 다양한 중개인들의 활동과 기능 부각
 - 이윤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 이주자들의 행위성에 대한 고려보다 이주의 ‘불법적’ 측면 강조

브로커의 개념과 역할

- 브로커에 대한 편견?
 - 상업적인 에이전시의 증가와 더불어 등장한 비공식적 이주의 매개자
 - 인신매매와 이주자 착취
- 미시적 수준의 이주 구조와 거시적 구조를 연결하는 연결 기제로서의 브로커
 - 합법과 불법, 공식과 비공식 영역에서 모든 서비스를 아우르는 상업적 브로커
 - 개인 연결망

이주중개시스템의(BROKERAGE) 개념화

브로커의 수요 요인?

1. 국가 그리기/육은 사회적 집단으로부터의 수요?
2. 변화의 도입, 등록, 육은 영상을 위한 수요?
3. 개인적 관심/브로커에 대한 수요에 의해 중개업이 어떻게 구성?
4. 중개업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와 다른 역동성은?

중개시스템의 위치?

1. 브로커의 권력과 권위의 원천은 무엇?
2. 브로커가 중개하는 권력의 흐름의 경계는 무엇?
3. 브로커 네트워크/조직 내에서 브로커들의 위치는?
4. 브로커의 위치성에 젠더는 어떠한 영향?



중개시스템의 공간적 역동성?

1. 중개업이 어떻게 영역의 생산을 형성?
2. 중개업이 어떻게 서로 다른 종류의 국가의 가장자리를 가로지르는가?

중개시스템을 둘러싼 긴장/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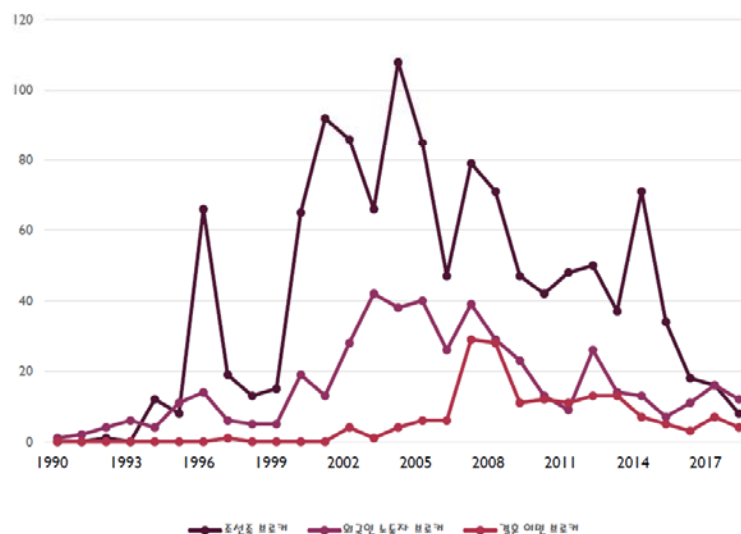
1. 중개업이 어떻게 브로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권능을 부여 혹은 박탈?
2. 중개업이 어떻게 시장과 국가를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가?
3. 중개업이 어떻게 폭력을 감소 혹은 고장시키는가?

Source: Meehan and Plonski 2017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 국내에서의 국제이주 브로커는 어떻게 이주의 인프라를 구성하는가?
 - 이주 노동자, 조선족 및 결혼이주자들의 브로커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주를 매개해 왔는가?
 - 이주 매개방식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 변화가 초래한 결과는 이주 인프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 BigKinds 빅카인즈 검색
 - 1990년 1월 1일~2018년 11월 30일
- 검색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조선족, 이주여성, 브로커, 중개업
 - 담론 변화 분석 및 정책과의 관계 파악
 - 워드 클라우드 및 시계열적 변화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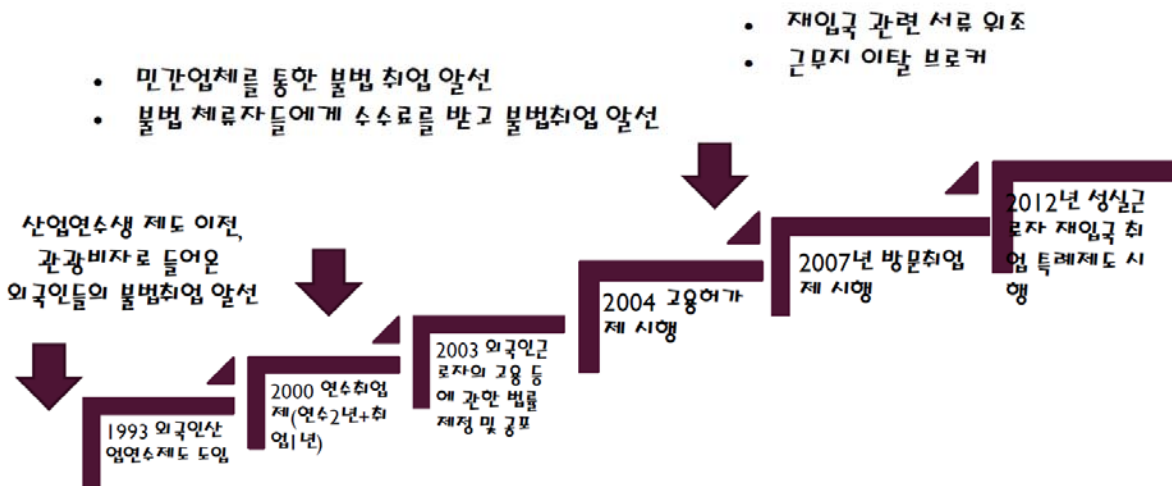
국내 체류 이주자 브로커 관련 언급 기사량 변동



이주자 브로커 워드 클라우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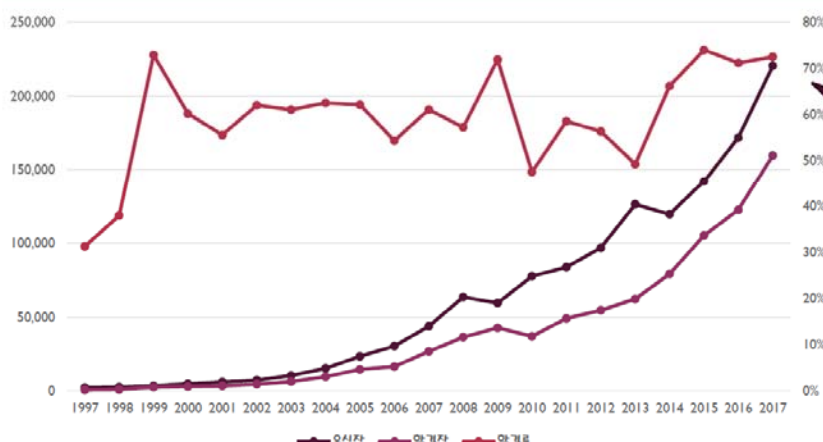
CASE 1: 외국인 노동 인력 관련 정책과 인력 중개 브로커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 과정과 브로커의 개입 형태

- 인력 송출은 구직 신청, 국내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비자발급, 사전교육 등의 과정으로 진행.
 - 입국 관련 서류 작성비,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과다 수수료를 받는 민간 브로커들 존재
-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어 능력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함. 한국어 관련 어학원 등록, 교육비, 응시의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 대리시험, 불법적인 방식의 자격 취득을 유도하는 브로커
- 한국 입국 후, 근무지 이동 및 선택 등 관련하여 불법적인 인력 풀을 구성하여 업체와 불법적 인력 거래에 동원됨.

이주자의 통제 도구로서 한국어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는 20년
사이에 약 100배
이상 증가

- 실제 한국어 능력의 향상과 작업 현장의 원활함을 오히려 하기 위해, 한국어 시험의 기능이 아닌 입국자를 거르는 필터 효과와 통제 기제로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사용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은 문제 은행식으로 브로커들의 개입이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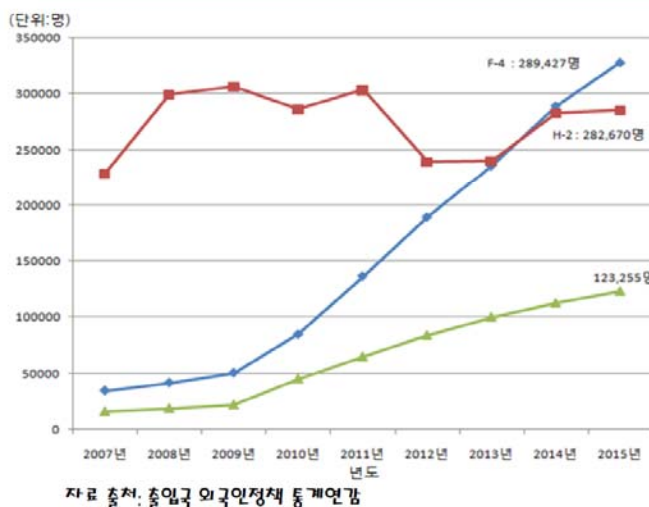
자료출처: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현황 (*국내에서 실시된 전영은 제외)

CASE 2

조선족 이주자에 대한 정책과 브로커의 개입

- 1990년대 밀입국, 여권 위조 등의 방식으로 이주 중개
- 2000년대 초반에는 이주를 위한 '외장결혼 중개' 성행
 - 정신박약, 노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약용
 - 중개 수수료를 노린 한국인들과의 불법 거래를 통해 조선족 여성들의 입국이 급증
- 2002년 취업관리제 도입을 통해 건설업 등 8개 분야에서 합법적 근로 가능
 - 무연고 조선족들의 입국을 위한 허위 문서 조작 등 위문서 조작 브로커
-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외장결혼, 밀입국의 방식 크게 감소
 - 행정사, 변호사 등과 같은 법률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브로커로 개입되기도 함
- 최근에는 제주도 무사증입국 가능해지면서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장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의 체류 형태 변화와 브로커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과는 달리, 이동이 자유로우면서 이주 브로커의 역할이 변화됨

최근에는 본국에서의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문서 위조를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브로커 기승

이주 초기 입국과 관련된 브로커가 중요했다면, 2011년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체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브로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다양한 형태의 브로커의 개입 방식

20-30대 청년층

- 어학연수, 유학을 위한 허위 증명서 조작
- 허위 출생신고, 허위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통한 사회보장서비스의 부정 이용

40-60대 중년층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취득과 불법 이용
- 범죄 이력이 있는 조선족의 불법 입국을 조선

60대 이상 고령층

- 무연고 조선족의 허위 족보, 호적부 발급 (국적세탁)
- 연금, 국민건강보험 부정 수급

- 조선족의 이주는 장기체류, 안정적 체류 등을 위해 다양한 허위 문서 조작의 브로커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최근 젊은 세대 등의 불법취업 통로로 한국의 어학당, 지방대학 유학 비자 발급 브로커가 사회문제로 급부상
- 장기체류자가 많고 한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한 브로커가 성행

CASE 3

결혼이주 브로커와 정책: 결혼중개업 정책

- 1999년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
- 2007년 ‘결혼중개업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08)
 - 결혼중개업의 등록제 도입
 - 과장광고 금지
 - 시민단체와 NGO의 참여
- 결혼중개업의 권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2010년: 맞선 전 양 당사자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
 - 2012년: 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제도 도입, 신상정보 등 혼인 관련서류 보존 의무화(5년), 결혼중개의 금지행위 신설, 중개실적 보고 의무화, 벌칙 강화
 - 2013년: 외국현지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규정 도입

결혼이주 브로커와 정책: 법무부의 이주자 및 배우자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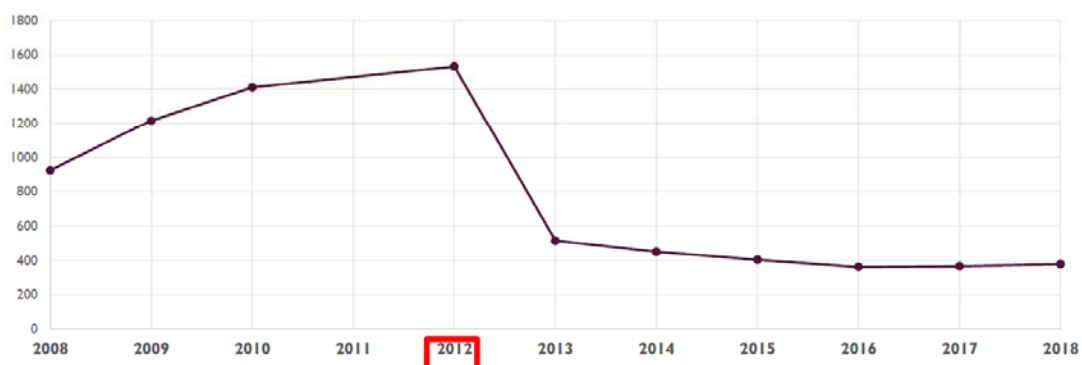
■ 2014 법무부 비자 발급 개선

- 한국어능력시험 인증
-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기준 신설

■ 중개업체들의 반발

- 법무부, “국제 결혼은 자유 그러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
- “건전한 결혼의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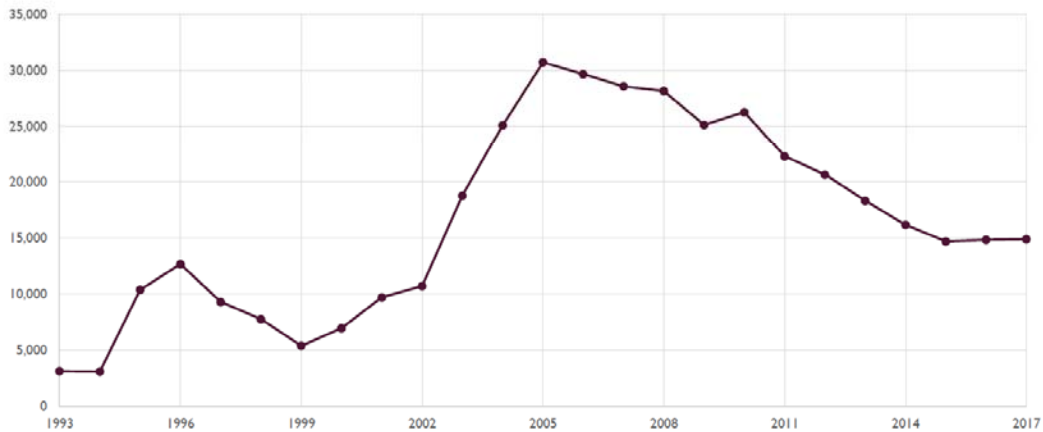
국제 결혼중개업체 수 변동 추이 2008-2018



출처: 2008-2012 <http://www.k-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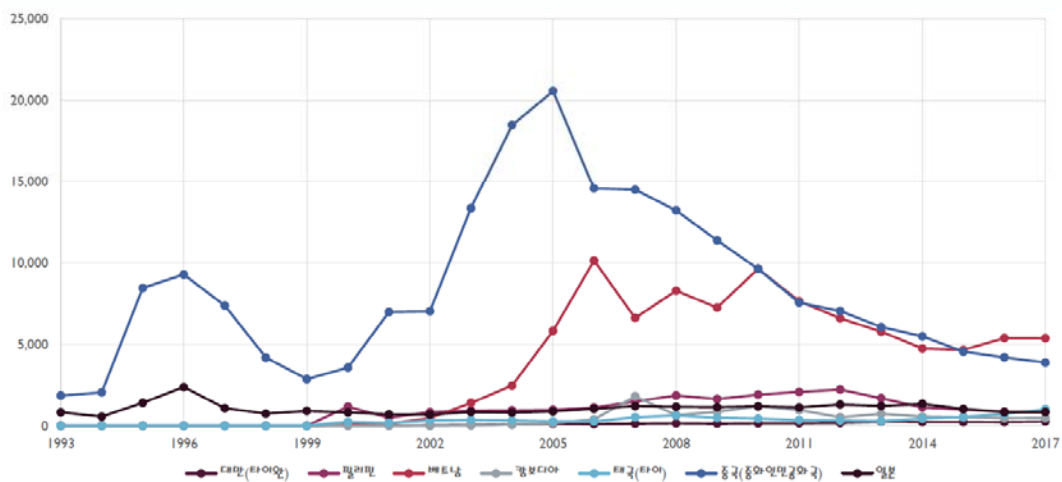
2013-2018: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 고시 현황

여성 이주자 결혼 통계 1993-2017



출처: 통계청 혼인 인구 통계 1993-2017

주요 국적별 여성 이주자 결혼 통계 1993-2007



출처: 통계청 혼인 인구 통계 1993-2017

국제 결혼에서의 브로커의 역할 및 작동 방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전 주로 송출국과의 연결 루트 개척
 - 현지에서의 단체 matching, 결혼중개 및 신혼여행 조직
 - 사기 결혼 및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
- 규제 강화(2012) 이후 브로커의 역할
 - 서류검사, 신원조회, 통역, 한국어능력 관리
- 폭력방지를 위한 규제 → 이주 과정 전체의 국가 통제
 - 브로커가 매개하는 이주 과정 자체도 변화
- 국제적 사기, 여성 인권 유린 및 폭력과 관련된 브로커 → 공정화된 브로커
 - 합법적 결혼이주 중개업 유지의 어려움
 -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 등장
 -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중개 및 현지 여성의 위장결혼 중개
 - 신용 불량자 및 사회취약층과의 위장 결혼
 - 이혼 통한 이주여성의 타 지역으로의 노동시장 앞선
 - 외국인 커플의 자녀를 한국 국적으로 위조

결론

- 이주 정책 시행과 브로커 간의 관계
- 개인의 이동과 글로벌 이주 현상, 국가 이주 관리 시스템을 매개하는 중개업
- 각 집단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관계들
- 이주 인프라: 이주자 자체나 해당 국가의 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행위자로서의 브로커의 역할 및 이주 전체 과정에 대한 개념의 확대
 - 브로커와 이주 정책을 움직이는 법의 방향성과 이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단체 및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 조명 필요
- 이주 브로커들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 악마화가 아니라 다양한 역할들 ...
- 합법과 불법, 공식과 비공식을 가로지르는 중개업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차별인식과 우울: 차별대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영미¹⁾ | 송영호²⁾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차별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별대응이 효과적으로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8년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지원방안」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77.2%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한국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일터 및 직장’(53.3%)에서 가장 심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식당, 공공장소 등 여타의 장소보다 대략 두 배가량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차별을 받았을 때 다수의 응답자는 참거나 소극적으로 대응(72.4%)을 하고 있다. 차별과 차별대응, 우울 간의 인과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주노동자가 느끼는 주관적 차별인식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부정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차별을 받았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이 회피하거나 참는 것보다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고용주와 권력 불평등 관계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차별을 당했을 때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역량과 제도적 환경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 이주민 역량 강화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이주노동자, 사회적 차별, 차별 대응, 우울, 조절효과

1)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제1저자)

2)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교신저자)

[Abstract]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of Migrant worker in Gyeonggi-do Province: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Copying response

Youngmi Choi³⁾ · Youngho Song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opying responses moderator effects of discrimination perceptions on depression among migrant workers in Gyeonggi.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data of "The Support Plans on migrant workers in Gyeonggi" The analysis that 77.2%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discrimination because they are migrant workers.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was the most in 'workplace'(53.3%). However many respondents responded in a negative or passive manner. Second, the more depressed the discrimination in daily life, the more negative the depression level. The negative effects of copying response on depression were suppressed when both negative and positive responses were made.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for policy measures that migrant workers who are in a power inequality relationship with employers can not be excluded from the society any more and can actively demand correction requests on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it was suggested that migrant workers should be provided institutional support and services to ensure social distribution and economic opportunities.

key words migrant workers, social discrimination, copying response, depression, moderator effect

01 | 서론

1980년대 말 한국사회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등이 맞물리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에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초기에는 조선족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한국은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변화하였다.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은 1,861,08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5% 증

3) Research Fellow,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First Author).

4) Research Fellow,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Corresponding Author).

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8). 이 중 이주노동자가 495,792명(33.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603,609명, 32.4%)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은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장기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대비 4.6% 증가하였다. 그리고 적극적 경제활동 연령대인 20-50대가 전체 외국인의 85.8%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국민국가의 체계 안에서 ‘한국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초청된 이주노동자는 전체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곤 하였다. 한국정부는 단기순환 원칙하에서 이주노동자를 “잠시” 머물러 있다 다시 돌아가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 권리를 제한하였다. 일반 국민들의 이들에 대한 인식도 결혼이주민에 비하여 소극적 또는 부정적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타자”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관련 정책의 변경으로 합법적인 정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손님”이나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안에 포섭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다수 사회로부터 부당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 등 불리한 생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이들의 권리는 제한적이다.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한, 임금 체불 및 폭행 등으로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관계는 극단적인 갑-을 관계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은 거리, 은행, 시장 등 사업장 밖에서도 일상화되어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부당한 차별의 누적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손상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킨다(손인서·김승섭, 2015). 즉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 구성원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겪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질환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은 이주노동자에게 사회경제적 기회의 박탈을 통해 분리와 배제를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통념을 내재화시켜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전지혜, 2010). 이러한 매커니즘은 소수민족 구성원들이 주류 사회와 접촉하면서 주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개인적·제도적 수준에서 실재적 차별을 경험하면서 잘못된 건강정보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건강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차별 가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Bennett, Ambrosini, Kudes, Metz, and Rabinovich, 2005).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 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도 정작 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사회도 내집단 내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받고 있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한부모 가족,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의 새로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집단이 출현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도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주민의 차별과 건강에 관련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마저도 연구 대상이 결혼이주민에

편중된 연구 흐름을 보여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건강에 관련된 연구는 한계가 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차별을 문화적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인식하여 건강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거나 사회적지지, 사회/경제 활동 같은 외부적 보호원의 조절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연구는 이주노동자가 주류 사회에서 소극적 존재로서 차별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회피, 또는 외부적 개입에 의해서만 차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이주민의 차별과 건강의 관계에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적응의 문제는 차별 자체가 아니라 차별을 받는 사람이 그 차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일상화된 차별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 및 대응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이주노동자가 받는 차별 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적 스트레스인 차별에 어떻게 대응(coping response)하는지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긍부정의 효과가 있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더불어 이주노동자에게 불평등 구조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역량 강화와 차별에 적극적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와 차별의 정도를 파악하고, 주관적 차별 인지 수준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차별 대응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차별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이주노동자의 차별 대응 양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차별 대응 양식에 따른 조절 효과는 어떠한가?

02 |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장(social field)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서로 힘을 겨루는 투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장에서의 구성원들은 동/이질성에 따라 피아(彼我)를 구별하며, 자기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쟁한다. 그 과정에서 높은 입지를 차지한 지배집단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집단에 대한 다양한 차별전략을 구사한다(Bourdieu, 2004: 125-126). 이러한 차별(discrimination)은 편견(prejudice)에 기반한 행동적 요인으로 개인이 속한 집단의 자격에 기반을 두어 어떤 집단 혹은 범주에 속한 구성원들을 편파적 또는 부당하게 대응하는 것을 지칭한다(Levy

and Hughes, 2009; 김희진, 2017:189). 차별 사회적 불평등에 기인한 차별은 권력을 가진 지배집단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 집단을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배제하는 대표적인 기제이다(Tilly, 1998). 크리거(Krieger, 1999)는 평등한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한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의 형태로 개인이나 집단이 그 소속이나 지위를 이유로 받게 되는 불공정한 대우(unfair treatments)를 차별과 연결하였다(손인서·김승섭, 2015). 이러한 차별이 지속될수록 개인과 그들이 속한 집단은 교육이나 취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기회로부터 배제되거나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관계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렇듯 성별, 빈곤, 계급, 인종,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들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는 박탈 경험을 가져와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Horwitz, 1999).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민족적 차이보다는 인종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인종주의는 다양한 차원의 현상이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인종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1960년대 초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을 촉발시킨 흑인용, 백인용으로 좌석이 분리되어 있는 시내버스의 경우와 같은 제도적 차원의 인종주의, 둘째, 대학 입학이나 취직, 식당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차별과 같은 관행적 차원의 인종주의, 셋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과 같은 일상적 차원의 인종주의이다(Ferreol et Jucquois, 2004). 이밖에도 인종주의는 종족적 소수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해석된다. 특정 용어의 선택은 대상 집단에 대한 특정 인식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견이 반영된 용어는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특히 제도적 인종주의(institutional racism)는 특정 조직의 일상적 실천이나 절차가 소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명백하거나 은밀한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낸다. 소수자들은 임금, 고용, 주택, 교육, 의료 및 보건, 정치 등에 스며든 인종주의적 사고 때문에 재화, 서비스, 기회 등에서 배제되고, 특정 주거지에 격리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한 지위나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다(김현미, 2018). 이주민에 대한 무시와 비하, 모욕, 혐오, 따돌림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학교, 병원, 민간 기업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종주의적 차별은 계급과 젠더와 함께 결합하여 더욱 증폭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차별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연관되어 있다. 즉 사회적 배제는 차별과 차이로 인해 소수자 및 경계 밖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이태정, 2005). 사회적 배제는 공간의 분리와 주변화를 통해 심각한 배제를 만들어낸다. 한국과 같이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특히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에 기초한 구별 짓기와 과도한 피아(彼我) 식별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개인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을 타자화시키고 자신과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차이와 가공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 차이에 ‘가치’를 정하고 그 차별화된 가치를 일반화 시킴으로서 결정적이고 바꾸기 힘든 것으로 결론짓는다. 차이의 가치매김은 ‘부정’과 ‘긍정’으로 양분되며 타인에게 발견된 ‘차이’는 흔히 부정적인 것으로 자신에게 발견된 ‘차이’는 긍정적인 것으로 한다. 한번 발견된 차이는 극단으로 벌어지는데 야만, 무지, 잔혹, 무도, 교활 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관념적, 부정적 가치가 주입되며 단순한 차이가 절대적 차별이 되기도 한다. 단순한 개인과 개인 간의 차이가 개별성으로 분리되어 전체화되고 그 집단에 속한 모든 개인에게 적

용됨으로 인해 현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부정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한다(고모리요이치, 2015).

즉 ‘우리’(our)의 경계 외부인을 의심하고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에 비추어 평가하면서 외부인을 이방인, 야만인 혹은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자민족중심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을 단결시키고 자부심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지만 지나칠 경우 배타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이민자에 대한 편견, 차별로 이어지고 혐오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단일민족의 신화가 강할수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수록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커지게 된다. 민족과 국가와 국적이 등치되는 한국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는 ‘우리’와 ‘남’의 구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민족과 이민족을 철저히 구별하며 일정한 거리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더욱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주노동자는 한정된 기간만 있다가 떠날 뜨내기이므로 새로운 연결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 사람’이 될 전망도 없는 것이다(유명기, 2004).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남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배타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언어, 생활방식, 관습, 혹은 규범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문화적 관점(cultural perspective)과 법적, 사회적 제도, 그리고 인종주의(racism)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구조적 관점(structural perspective)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우균·손인서·김승섭, 2015).

2. 인지된 차별과 우울

인지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은 차별이 실제로 있었는가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당사자가 스스로 차별을 인지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지된 차별은 개인이 속한 조직 내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스트레스 유형이다(이안나·임성문, 2015; Flores, Tschann, Dimans, Bachen, Pasch, and de Groat, 2008). 인지된 차별은 특히 우울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Portes and Rumbaut, 2006; Wei et al., 2008). 즉 차별을 경험할 때 우울, 심리적 고통, 낮은 심리적 안녕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렇듯 인지된 차별은 인종 및 소수민족의 적응, 복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중대한 삶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Poyrazli and Lopez, 2007). 그리고 인지된 차별은 긴장된 사회적 상호작용, 주요 생활 사건 등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의 반응과 동등하게 인식된다. 인지된 차별은 화(anger) 또는 스트레스의 형태로 내재화되거나 외부로 표출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개인은 차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치 자신이 차별을 경험한 것처럼 느낌으로써 심각한 분노와 우울, 불안상태에 놓이게 되고 냉소주의와 태만, 무기력 등 각종 부정적 감정들에 쉽게 사로잡힌다고 볼 수 있다(Kim and Williams, 2012).

인지된 차별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는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들, 또는 성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문제에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종차별 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Dion, Dion,

and Pak, 1992)과 아프리카계 미국인(Pieterse and Carter, 2007)이 인지하는 차별감은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라디스(Paradies, 2006)은 관련된 138개의 선행연구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정신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결과들의 72%가 인종차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윌리엄과 그의 동료들(William et., al 2003)도 아프리카계 아메리칸이 인지한 차별 경험이 감정적 곤란, 우울, 강박증, 화,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흡연, 알콜 남용, 약물 오용 등의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전지혜, 2009:54 재인용)

이러한 인지된 차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주거나 사회 경제적 기회와 자원으로부터의 배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과 같은 구조적 차별은 특정 개인의 건강을 악화시킨다. 둘째는 지속적인 차별에 노출된 다수집단의 구성원들은 부정적인 사회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알코올 섭취와 같은 건강 위험 행동이 증가하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인지된 차별은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이는 신체의 면역력과 내분비계 기능을 저하시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Ahmed, Mohammed, Williams, 2007). 특히나 이민자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인종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이민자의 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관련 논문들은 모두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이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차별과 주관적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출신지역과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서구권보다 비서구권 출신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경험하면 낮은 주관적 건강상태로 이어진다(손인서·김승섭, 2015).

3. 차별에 대한 대응 전략

차별 경험에 따른 이주민의 대응은 한국사회에 새롭게 진입한 구성원이 자신의 선택에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처(coping)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과 행동 유형을 의미한다(Sarid, Anson, Yaari and Margalith, 2004). 이러한 대처는 개인적 속성보다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Lazarus and Folkman, 1984). 즉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강요한다고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 또는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Amodeo et al., 2007; Lazarus and Folkman, 1984). 그리고 대응 반응(coping response)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인이 선택하여 실행한 구체적 행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김청아·홍상환, 2018). 민족적/인종적 소수자의 차별 대응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차별 경험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한 개인의 대응 반응(coping response)으로 이해할 수 있다(진민·진배·성만·현명호, 2011; Kwok, 1987).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대응 방식은 크게 문제 중심적 대처(problem-focused response)와 정서 중심적 대처(emotion-focused response)로 구분된다. 전자는 문제를 바꾸거나 해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문제와 관련된 감정을 바꾸는 방법을 의미한다(이동귀·박현주, 2009; Lazarus and Folkman, 1984). 엔드러와 파커(Endler and Parker 1990)는 여기에 회피 대응법(avoidance-oriented coping)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대처는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찾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동을 통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에즈 구레로(Diaz-Guerrero, 1979)는 대응 기제 방법을 소극적, 적극적 적응 형태로 유형화하였다. 적극적 적응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며 소극적 적응은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헵너, 쿡, 존슨(Heppner, Cook, Wright and Johnson, 1995)도 기존의 문제 중심적 대응을 사려형 대응으로, 정서 중심적 대응을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억제형 대응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반동형 대응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로써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이고, 소극적 대응은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므로 비기능적이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소극적 대처가 모든 상황에서 비기능적인 것은 아니며, 스트레스 요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은 스트레스를 경감의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Gohm and Clore, 2002).

일반적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인 차별에 대한 대응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대처 반응을 이끌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킨다(Egan and Todorov, 2009; Lazarus and Folkman, 1984). 마이어(Meyer, 2003)도 소수민족 스트레스 모델을 통해 차별 대응 양식은 인지된 차별감과 그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설명한다.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kinner, Edge, Altman, and Sherwood, 2003). 특히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문제중심 대응) 그것을 수용하거나 참는 것(정서중심 대응)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할 수 있다(Compas, Connor-Smith, Saltzman, Thomsen, and Wadsworth, 2001). 웨이와 그의 동료들(Wei et al., 2010)도 미국 내의 아시아계 대학생들이 차별을 경험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정서중심 대처인 반동형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 우울은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 노와 카스파(Noh and Kaspar, 2003)의 연구에서도 차별 상황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격한 감정을 타인에게 표출하는 정서 중심 대처는 그들의 우울 수준을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차별에 대한 대응방식이 정서중심일 때 더욱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Folkman and Lazarus, 1980; Lazarus, 1993). 소수자들이 차별 상황에 맞서지 않고 참고 견디는 정서중심 대처인 인내가 차별과 우울의 정적 관계를 조절하는 완충 요인이라는 것이다(Noh and Kaspar, 2003).

이러한 대응 양식에 따른 상반된 효과는 개인에게 내재된 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아시아권 문화 정체성이 강한 경우 차별을 경험할 때 정서중심 대응 양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서구권 문화 가치관을 내재화한 경우 문제중심 대응 방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시아 문화 정체성이 강한 경우 차별의 원인을 개인 내부에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참는 반면 서구적인 문화에 더욱 내재화된 경우는 스트레스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이안나·임성문, 2015). 쿠(Kuo, 1995)도 미국의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차별적 상황에서 대응이 유난히 소극적인 대응(차별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다독, 더 나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이주민이 차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별에 대응하는 행위를 위험요인으로 인식한다거나, 규범 순응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차별의 원인을 자기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

을 수 있다(Kuo, 1995). 즉 본인이 이주국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에 대응하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귀속시키거나 심리적 감정조절 전략을 통해 내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03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지원방안 연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E-9, E-7, H-2)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것이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이용, 신규 서비스 수요, 차별 경험, 건강 등을 포함한다. 조사는 경기도 내 7개 외국인복지센터(김포, 남양주, 성남, 수원, 시흥, 안산, 화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일차로 한국어로 작성하고,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영어 등 8개 국어로 번역하여 사전조사 후 수정 보완을 하였다. 표집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성별, 연령, 출신국, 체류 자격을 고려하여 할당표집하였다. 실사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한달 동안, 각 지역 외국인복지센터 활동가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1:1 대면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7개 지역 총 700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남양주 지역의 회수율이 저조하여 전체 회수 완료된 설문은 684개였다. 부정확한 정보 기재로 사용이 불가능한 설문을 제외한 총 668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 STATA 13을 사용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여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2. 척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 우울이다. 우울 연구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척도와 관련된 5개 문항의 합산값을 사용하였다. 이 5개 문항은 CES-D 척도의 문항 중 우울감(depressed mood)에 대한 두 문항(상당히 우울했음,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음)과 불편감(malaise)에 대한 세 문항(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음,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짐, 무슨 일을 하든 집중하기가 힘들었음)을 추출한 것인데 이는 우울증세와 가장 직결된 문항들이다. 각 문항은 4점척도('전혀 없었다(1)', '가끔(2)', '때때로(3)', '자주(4)')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5개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단일 요인으로 묶였으며, 5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859로 높았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5개 변수들을 합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독립변수는 차별인식과 차별대응이다. 먼저 차별인식은 거리나 동네, 상점, 음식점, 은행, 직장 및

일터, 대중교통 이용 등 응답자가 경험할 수 있는 7가지의 차별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를 4점 척도(1=전혀 심하지 않았다, 2=별로 심하지 않았다, 3=약간 심했다, 4=매우 심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7가지 상황에서 받은 차별인식을 합산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을 심하게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차별 대응은 차별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6가지의 방식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참았다, 소극적 대응(가족 및 친구에게 상의, 상담기관 에 문의), 적극적 대응(사과 요구, 차별시정기관 신고, 인터넷 및 SNS 에 글 올리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았다’의 비중이 높아서 참았음, 대응했음(소극적 대응+적극적 대응)으로 이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성별,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 혼인지위, 비자유형, 체류기간을 사용하였다. 특히 혼인지위는 기혼자를 더미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비자 유형은 동포와 이주노동자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방문취업자(H2)를 투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 및 기초통계량

항목	변수명	평균	비고
종속변수	우울 (CESD-10의 5개 문항 합산값)	8.08	20점척도
독립변수	차별인지 (7개 장소 및 상황에서 차별의 심각성 인지 정도)	10.35	28점척도
	차별대응 (참았다=0, 대응했음=1)	0.28	더미변수
통제변수	성별 (남성 =0)	0.24	더미변수
	연령 (자연연령)	35.68	
	교육수준 (무학=0, 초졸이하=6, 중등졸업=9, 고등졸업=12, 대학교 졸업=16, 대학원 졸업이상=18)	12.64	
	소득수준(가족 한 달 총 수입) (1=100만원미만, 8=700만원이상)	2.49	
	혼인지위 (기혼=1, 미혼/이혼/사별=0)	0.61	더미변수
	체류기간 (거주년수)	5.09	
	비자유형 (E9, E7=0, H2=1)	0.24	더미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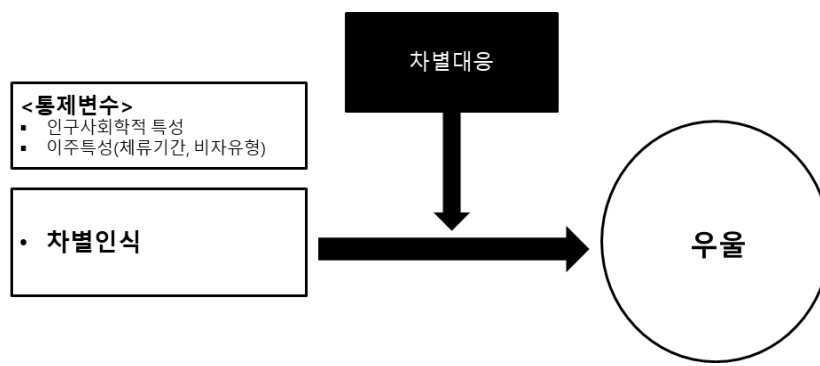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OLS 회귀분석으로 우울에 대한 차별인식의 효과를 차별대응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OLS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선형을 가정하고, 오차의 등분산성

(homoscedasticity), 독립성(independant error), 정규성(normality)을 전제하는 엄격한 제약을 가진다. 등분산성 테스트(White's general test) 결과 이분산성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분산성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ATA 프로그램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robust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왜곡이 발생하는 추정계수 표준오차를 수정하여 보다 적절한 값을 갖도록 조치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주요결과 해석은 상호작용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상호작용계수가 양의 값이면 우울이 준거집단인 소극적 대응(참는다) 집단보다 적극적 대응집단에서 우울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음의 값이면 차별 대응이 우울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연구모형



04 | 분석 결과

1. 인지된 차별과 차별 대응

응답자들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표2> 참조). 응답자의 77.2%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차별 받지 않았다(22.8%)고 응답한 경우보다 3배 넘게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 경험은 비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동포로서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71.3%)가 고용허가제(E9), 성실근로자(E7)(78.8%)보다 차별을 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김우균 외(2015)의 연구 결과와 상응한다. 한국사회가 인종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으로 사회적 차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포로서 방문취업비자 소유자는 한국사회와 언어, 생활방식, 관습, 혹은 규범이 비슷하여 여타 이주노동자들이 느끼는 차별에 둔감하게 반응하거나 차별을 받았지만 실제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여 차별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2〉 차별 경험 유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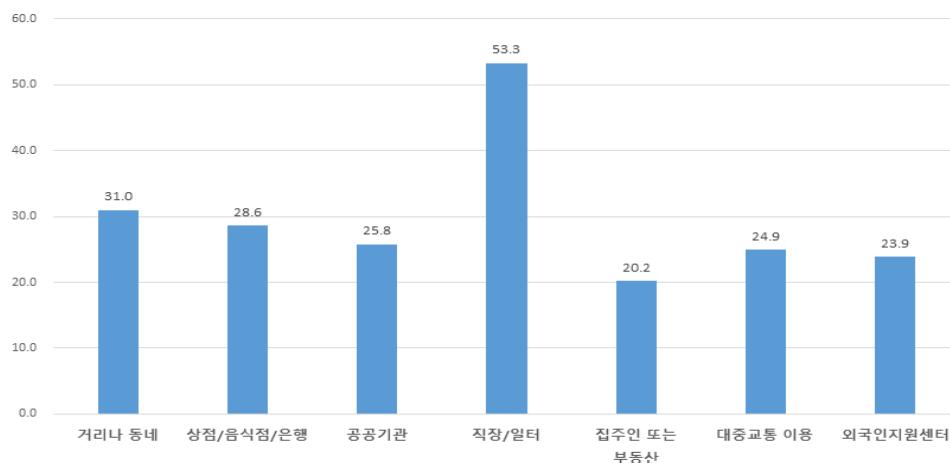
차별경험	있음	없음	x ²
전체	499(77.2)	147(22.8)	
방문취업자(H2)	112(71.3)	45(28.7)	3.736*
고용허가제(E9)	383(78.8)	103(21.2)	

* p<.05, **p<.01, *** p<.001

다음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인지된 차별 정도를 살펴보았다(〈그림 2〉 참조). 우선 차별이 심하다(매우 심하다+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직장/일터에서’가 53.3%로 가장 많고, ‘거리나 동네에서’ 31.0%, ‘상점/음식점/은행에서’ 28.6%, ‘공공기관’ 25.8%, ‘대중교통 이용시’ 24.9%,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서’ 20.2%, ‘외국인지원센터’ 23.9% 순이었다. 일터와 직장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느끼는 차별은 전반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빈도는 많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으로서 받는 차별을 집단으로서 받는 차별보다 덜 지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Crosby, 1982). 다른 한편 차별받는 사람들이 지배계층의 가치관을 내면화(internalized oppression)하여 차별 경험을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 socially acceptable response)을 하기 위해 차별 경험을 축소 보고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손인서·김승섭, 2015). 즉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실제 일어나는 차별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비중이 작고, 주류집단과 심각한 수준으로 가치가 충돌한다고 받아들이는 비중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이주노동자의 상황별 차별인지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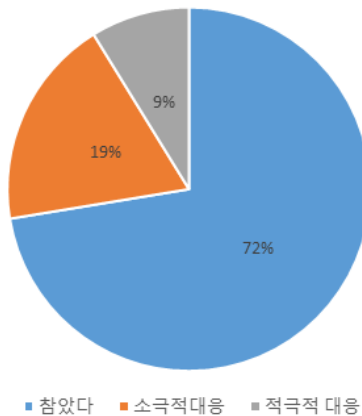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주노동자가 차별을 받았을 때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그림 3〉 참조). 분석결과 ‘참았다’ 72.4%로 가장 많았으며, 소극적 대응(가족 친척과 상의 9.4%, 상담기관 시민단체 상의 9.4%)

18.8%, 적극적 대응(사과 요구 4.4%, 차별시정기관 신고 2.9%, 인터넷 및 SNS에 글 올리기 1.5%) 8.8% 순으로 참는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차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기 보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시정 요구에 적극적이지 않고 참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소수민족들이 인지하는 차별감이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별 상황에 맞서지 않고 참고 견디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상응한다(Noh et al., 2003).

〈그림 3〉 차별 대응 방식

단위 : %



2. 차별경험과 건강의 관계에서 차별대응의 조절효과

차별과 우울 수준의 인과 관계에서 차별 대응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주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차별 인식, 차별 대응, 차별인식과 차별대응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이다. 이는 차별을 받았을 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대응을 하는지의 여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모델 2〉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이주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차별의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일상에서 받는 차별이 심각할수록 우울 수준은 부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델3〉은 차별 정도와 차별 대응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이다. 차별 정도는 유의미하였지만 차별대응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4〉는 차별인식과 차별대응 간의 상호작용 효과이다.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였으며, 회귀계수값이 음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 대응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162만큼 더 크다는 의미이다. 즉 준거집단인 차별대응을 하지 않는 집단보다 차별대응을 한 집단에서 차별인식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민족-스트레스 모델을 통해 개인의 대응양식은 인식된 차별과 심리적 어려움의 관계를 중재하는 조절변인이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사회적 차별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

든 반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차별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거나 참는 것(정서중심 대응)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긍정적 자원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순응하거나 회피하였으 때보다 적극적으로 차별 시정을 하는 유형이 더욱 우울을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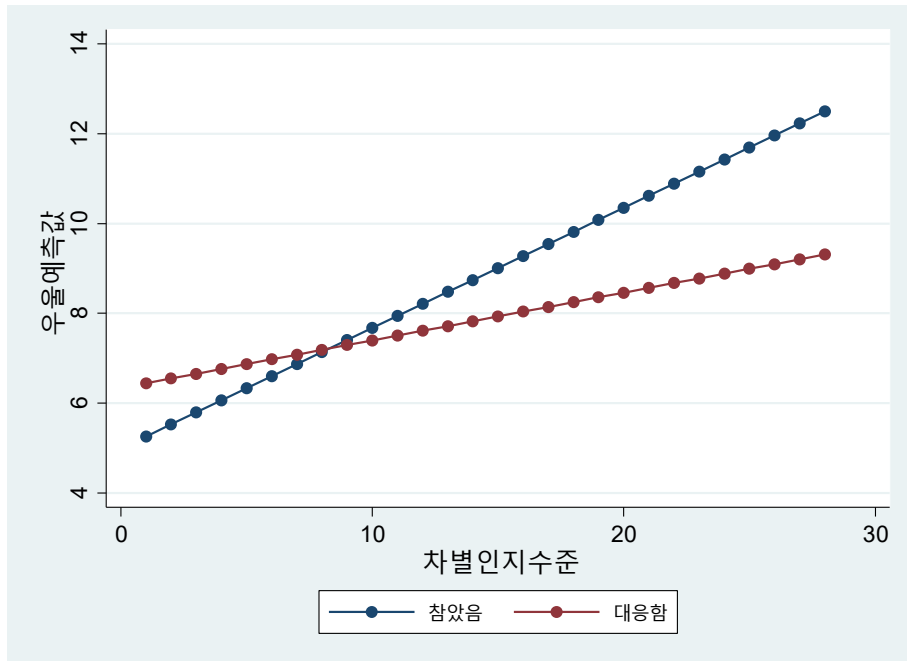
〈표 3〉 차별인지와 우울의 관계에서 차별대응의 조절효과

변 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b	β	b	β	b	β	b	β
성별(0=남성)	-.165	-.020	.216	.025	.219	.025	.176	.020
연령	-.061**	-.156	-.036	-.090	-.046 [†]	-.115	-.043	-.106
교육수준	-.070	-.055	-.04	-.031	-.051	-.040	-.043	-.034
소득수준	.001	.000	-.183	-.050	-.127	-.034	-.164	-.045
기혼(동거 포함)	-.658*	-.092	-.875*	-.118	-.805*	-.109	-.835*	-.113
체류기간	-.076 [†]	-.084	-.099*	-.105	-.096 [†]	-.101	-.085 [†]	-.089
방문 취업제(H2)	-.442	-.054	.050	.006	.116	.013	.131	.015
차별 정도			.221***	.345	.218***	.340	.268***	.419
차별 대응					-.358	-.044	1.346	.167
차별정도*차별대응							-.162*	-.247
상수	11.356***		8.544***		8.980***		8.268***	
R ²	.083		.202		.207		.220	
F	7.34***		12.37***		10.39***		10.08***	
N	576		398		367		367	

[†] <.10, * p<.05, ** p<.01, *** p<.001

이를 보다 명쾌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차별인지수준과 차별대응(대응함=1)의 변수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표 3〉의 모델4에 나와 있는 회귀 계수들을 이용해 우울수준을 예측한 것으로 X축은 차별인지 수준의 증가를 보여준다. 차별대응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의 선으로 표현된다. 차별 인지와 차별 대응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차별 인지 수준 9 정도를 기점으로 차별을 받았을 때 대응한 집단의 우울 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우울 수준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별 대응의 효과는 우울 수준을 .162만큼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수준이라 여겨진다. 즉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차별에 대응하는 것이 우울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켜 주류집단과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4〉 차별인지와 차별대응집단으로 예측된 우울 수준



05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정주형 이주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더 이상 손님으로서 잠시 한국 사회에 머물다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주민과 마찰 갈등, 분쟁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 향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가 느끼는 사회적 차별 수준을 살펴보고, 차별 인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차별 대응이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77.2%로 다수가 차별을 경험하였다. 또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직장과 일터(53.3%)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이 심하다고 받아들이는 비율은 20~30%로 차별을 경험하는 빈도에 비하여 크게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는 차별받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내면화(internalized oppression)하여 차별을 차별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차별을 받았을 경우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적 약자로서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당했을 때 참는 것으로 소극적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 노동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차별인식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차별인식이 강할수록 우울 수준이 부정적 방향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준거 집단인 차별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참는 집단에 비하여 차별에 대하여 소극적 또는 적극적으로

대처한 집단은 차별 인식에 따른 우울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는 영향을 보였다. 즉 사회적 차별에 노출된 이주노동자가 자신과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하여 부당한 차별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가 차별이 일상화된 공간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자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더불어 고용주와 한국사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주민의 인권과 권리 차원에서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늘어나는 정주형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이다. 경기도와 같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이주민이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권리로서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차별 대응이 실제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고 선주민과의 갈등 조정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공공 기관 상담, 주변 네트워크 활용, 피해 당사자를 향한 직접 발언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차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및 생활 정보, 지역의 법률상담지원기관 안내문을 배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데이터를 지역 인권복지 센터를 중심으로 편의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횡단면 조사의 한계로 차별 경험과 우울의 문항 모두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차별 경험 측정에 있어서도 각 항목별 차별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빈도수가 많을수록 차별 정도가 많다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차별의 강도와는 다른 맥락으로 차별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아·김태호(201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정체감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지각과 차별대처방식", 『다문화교육연구』, 4(1):1-17.
- 김유균·손인서·김승섭 (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출신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35 : 421-452.
- 김청아·홍상황(2018). "또래괴롭힘 피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용서와 접근적 대처반응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7(3):421-38.
- 김현미(2018). "제도와 정책에 투영된 인종차별"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년 인종차별 보고대회. 2018년 7월 20일.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소.
- 김희진(2017).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3):187-209.
- 나장함·김희주(2017).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의 조절효과",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11):485-496.
- 손인서·김승섭(2015).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5(1): 26-57.
- 유명기(2004). "국제이주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특별호, 310-337. 생각의 나무.
- 이안나·임성문(2015). "재캐나다 한국인 대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511-34.
- 이태정(2005).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 - "국경 없는 마을" 사례", 『사회연구』, 6(2): 139-178.
- 전지혜(2009). "장애인에 의해 인지된 차별의 개념화와 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99-425
- 진민·진배·성만·현명호(2011).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783-97.
- 천희란·김일호(2013). "노인차별(ageism)의 사회경제적 관련 요인과 건강 영향", 『한국노년학』 (3):601.
- 남희은(2015). "지체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대처자원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17-43.
- A. T. Ahmed, S. A. Mohammed, & D. R. Williams(2007). "Racial discrimination & Health: Pathways and evidence". *Indi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126: 318-327.
- Amodio, David M, Patricia G Devine, & Eddie Harmon-Jones(2007). "A dynamic model of guilt: Implications for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in the context of prejudice."

Psychological Science, 18(6):524-30.

- Barnes, Mendes Deleon, Wilson, Bienias, & Evans(2004). "Racial differences in perceived discrimination in a community population of older blacks and white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6(3); 315-337: 2004.
- Bennett, David S, Paul J Ambrosini, Diana Kudes, Claudia Metz, & Harris(2005).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do symptoms differ for boys and girl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Rabinovich*, 89(1-3):35-44.
- Compas, Bruce E, Jennifer K Connor-Smith, Heidi Saltzman, Alexandria Harding Thomsen, & Martha E(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Wadsworth*, 127(1):87.
- Dion, K. L(2002). "The social psychology of perceived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Canadian Psychology*, 43(1):1-10
- Egan, Luke A, Natasha(2009). "Forgiveness as a coping strategy to allow school students to deal with the effects of being bullied: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 *Journal of Social Todorov, and Clinical Psychology*, 28(2):198-222.
- Flores, E., Tschann, J. M., Dimas, J. M., Bachen, E. A., Pasch, L. A., & de Groat, C. L. (2008). "Perceived discrimination, perceived stress,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among Mexican-origin adul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30(4), 401-424
- Gohm, C. L., & Clore, G. L.(2002). "Four latent traits of emotional experience and their involvement in well-being, coping, and attributional style." *Cognition & Emotion*, 16(4): 495-518.
- Heppner, P Paul, Stephen W Cook, Deborah M Wright, & W Calvin(1995). "Progress in resolving problems: A problem-focused style of cop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3):279.
- Horwitz, E.K(1999). "Cultur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foreign language learners'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System", *A Review of BALLI Studies [Special Issue]*. , 27:557-576.
- Krieger, N(1999). Embodying inequality: a review of concepts, measures, and methods for studying health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9(2):295-352.
- Kuo & Wen H(1995). "Coping with racial discrimination:The case of Asian Americans", *Ethnic and Racial Studies*, 18(1):109-127

- Kwok B. Chan(1987).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and Response: An Analysis of Indochinese Experience in Montreal", *Canada, Canadian Ethnic Studies*, 19(3).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김정희 역. 2001. 대광문화사)
- Levy, S. R., & Hughes, J. M.(2009). "Development of racial and ethnic prejudice among children", In Todd. D. Nelson (Ed.),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New York: Psychology Press
- Noh, S., & Kaspar, V.(200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acculturation, and ethnic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2), 232-238.
- Noh, Samuel, Violet.J & Kaspar. 200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acculturation, and ethnic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2):232-38.
- Paradies Y(2006).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self-reported racism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 888-901
- Skinner, Ellen A, Kathleen Edge, Jeffrey Altman, & Hayley(2003). "Searching for the structure of coping: a review and critique of category systems for classifying ways of coping." *Psychological bulletin Sherwood*, 129(2):216.
- Stanley Sue & Harry H. L. Kitano(1973). "Stereotypes as a Measure of Success", *Journal of Social Issue*, 29(2): 83-98.
- Tilly, C.(1998). *"Durable Inequalit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i, M., Liao, K. Y. H., Heppner, P. P., Chao, R. C. L., & Ku, T. Y(2012). "Forbearance coping identification with heritage culture,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97-106.
- Williams, D.R., Neighbors, H.W., & Jackson, J.S(2003). "Racial/Ethnic Discrimination and Health: Findings from Community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2).

토론

경기도지역 이주노동자의 주관적차별인식과 우울: 차별대응의 조절효과를중심으로

강동우 | 한국노동연구원

2018. 12. 7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1/6

1. 연구내용 요약

- 연구목적

- 이주노동자가 받는 차별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차별에 대한 대응(coping response)’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함

- 분석의 핵심 아이디어

- ‘차별에 대한 대응’은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text{우울} = f(\text{차별수준}, \text{대응 여부}, \text{차별수준} \times \text{대응 여부} \mid \text{통제변인})$
- 차별에 대한 대응이 우울을 완화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발견

2/6

2. 연구의 장점 및 기여

- 자료의 장점

-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표본 수가 많은 연구임(표본 수: 668명)

- 연구범위의 확장

-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이론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이론 연구, 질적 연구에 한정되던 연구범위를 실증연구로 확장

3/6

3. 제안 1

- 차별인지의 상황을 각각의 모형으로 구분하고, 각 상황의 차별대응의 조절효과를 비교

- 차별대응의 조절효과가 어떠한 상황에서 심리적 건강에 더욱 중요한가?
- 차별인지는 '직장/일터'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장/일터'의 차별에서 차별대응의 조절효과 Vs. '거리나 동네'의 차별에서 차별대응의 조절효과
- 모형4에서 독립변인 '차별인지'를 '직장/일터'에 대해서 더미변인으로 정의하고, 이와 차별대응의 교차항을 모형화하여 차별대응의 조절효과를 분석
- '직장/일터' 이외 동네, 상점, 음식점, 은행, 대중교통 이용 등 각 상황별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

4/6

3. 제안 2

• 차별대응의 결정요인은 무엇?

- 결론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증증거가 제시되면 좋을 것 같음
- 차별대응의 조절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차별대응을 지원할 수 있을까?
- 차별대응 = $f(\text{의사소통, 동료들과의 네트워크, 지역 인권복지센터 접근성 및 지원, 기타 제도 | 통제변인})$
- 차별대응은 더미변인(로짓/프로빗 모형, 또는 간단히 선형확률모형(OLS))
- 차별대응의 결정요인 중 어떠한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 -> 정책변수로서의 중요성 검토

5/6

3. 제안 3

• 지역 간 차이는 발견되는가?

- 김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화성, (남양주 -> 회수율 저조)
- 차별대응과 우울 수준의 지역 간 차이 정도는?
- 차별대응의 지역 간 차이는?
- 지역 간 차이가 발견된다면 어떠한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 지역 산업구조의 차이? 지역 인권복지센터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접근성 차이?
- 만약 인권복지센터에 대한 접근성 차이와 우울 및 차별대응과의 상관관계가 발견된다면, 접근성 개선이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건강 및 차별대응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근거를 발견 ->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

6/6

The similarities between perceptions of immigration according to experts: a study based on expert interviews from Germany and South Korea

신소희 |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사회학 석사 졸업

01 | Introduction

United Nations (UN) stated that migration¹⁾ increases worldwid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igrants worldwide continued to grow rapidly over the past fifteen years reaching 244 million in 2015, up from 222 million in 2010 and 173 million in 2000. The number of refugees worldwide has reached the highest level since world war II (United Nations, 2015, p.1).²⁾ In the face of increasing migration worldwide, we can find global discourses, which are represented as shared understandings and policy models. As stated by Martin Geiger and Antoine Pécoud (2010), in reaction to the increasing current migration phenomen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the government of Sweden,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have supported the idea that in the post-cold war era, "migration had the potential to generate real

1) According to S. Castles (2010), "the definition of migration has a transition from permanent movement from one-nation state to another to mobility of fluidity and openness in the 21st century due to changes in transportations, technology, and culture that makes it normal for people to think beyond borders to cross borders for many reasons (ex. purpose of study, professional advancement, marriage, retirement, or lifestyle)."

2)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6).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5: Highlights* (ST/ESA/SER.A/375), pp.1-36.

crises, and that a global and holistic regime of rules and norms was needed to successfully address the phenomenon"(p.2).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IGO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the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GCIM, 2005)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 produce global policy discourse about "what migration is all about and how it should be managed by governments"(p.2). Migration is now not only a question for receiving and sending countries, but is also a global question.

Andrew Geddes (2016) also showed in his ongoing project, Prospects for International Migration Governance (MIGPROSP), that there are global similarities in terms of understanding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actors in migration governance systems in Asia-Pacific, Europe, North America and South America. When we consider the discourse from globally oriented institutions previously listed above, and the findings from Andrew Geddes (2016), there are global similarities in experts' perceptions of immigration in spite of geographical difference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at investigating similarities of experts' perception of current immigration, especially in host societies, with regard to the way migration is recognized, the possible impacts of migration, and experts' understandings of current immigration policies. This is done through conducting cross-national research in two dissimilar countries, coupled with expert qualitative interviews. Moreover, the research asks what are possible reasons for these similarities? And if there are differences, what are reasons for them?

As examples of comparative research, Germany and South Korea were selected as cases for comparison as there are decisiv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terms of history of migration and the ratio of foreign population. The method of comparison is based on a "most different systems"³⁾ design (Adam Przeworski, Henry Teune, 1970). According to Mustafa Aksakal and Kerstin Schmidt (2015), Germany has a rich immigration history since 1945, beginning with an influx of post war returnees after the world war second. After the guest workers program (*Gastarbeiterprogramm*) that was implemented in the 1960s and 1970s, there are now 4 million migrants residing in Germany. In addition, since August 2015, asylum seekers and refugees currently represent the largest share of immigrants in Germany. Bundesamt für Migration and Flüchtlinge (BAMF) showed that the asylum applications has been rising from 48,589 applications in 2010 to 256,968 applications from January to August 2015. The ratio of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Whereas, in Germany, foreign

3) Chapter 2, Research Designs in Adam Przeworski and Henry Teune(1970). Przeworski, Adam.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pp. 31-46). New York: Wiley.

nationals living in Germany takes around 12 percent (9,107,893) in 2015 (Ausländische Bevölkerung).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H. K. Lee (2015), immigration to South Korea began during the 'Seoul Olympic games 1988' and the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since 1987. The number of labour migrants who came in order to find economic opportunities increased, and mostly originated from South Asia and China. Due to supportive government policies such a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and the Working Visiting System(WVS), until 2012 the policy aims were to invite temporary migrant workers based on fixed-term rotating system. It is estimated that migrant workers who came to Korea increased, approximately to 580,000(H.-K. Lee, 2015). However,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in South Korea is around 3.7 percent (1,899,000),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of South Korea, 2015.⁴⁾ Therefore, Germany is the case of a country that has a relatively long immigration history with a high-foreign ratio, while in contrast South Korea is the case of a country that has a short immigration history with a low foreign ratio.

Finding similarities in perceptions of immigration from experts in two different countries is meaningful as it can show that immigration is a global phenomenon with shared features. What is more, investigating experts' understandings of immigration at diverse levels including the local, national and political perspective can draw a broad picture of current immigration in receiving societies. This research can therefore add to the literature of global migration discourses and also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global reactions to the current immigration phenomenon.

02 | Global migration discourse

As a global question, immigration policies are discussed and framed by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cientists, such as the United Nations(UN), the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GFMD), the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GCIM),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and various scientists(Moses, 2006, De Clercq, 2007, Sara Kalm, 2010). According to Sara Kalm (2010), there are four points that stand out in the global migration policy discourse. First, international migration is recognized now as not exceptional but as a normal phenomenon. For

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5/0200000000AKR20170515141900002.HTML?input=1195m>

instance, it is argued in the Hague Declaration that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migration as a normal fact of life for individuals, families, communities and states"(UN, 2002a, p.5).

Second, migration is described as a potentially positive phenomenon. For instance, the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FMD) stated that "promoting legal migration as an opportunity for development of both origin and destination countries, rather than as a threat"(GFMD, 2007, p. 16). The United Nations also states "we believe that migration is a normal phenomenon which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ultural richness and diversity"(UN, 2002a, p.4). Therefore, migration is beneficial not only for migrants themselves, but also for the host and origin states. The global discourse also pays attention to problematic consequences such as "brain drain and irregular migration"(ILO, 2004b, p.60; GCIM, 2005, p.34). Despite these concerns, in sum migration is overwhelmingly conceived of in positive terms and migrants as ideal neoliberal subjects, rather than threatening to the welfare and security of receiving states.⁵⁾

Third, another question pertaining to migration management is how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that migration - skilled and unskilled, temporary and permanent - can have. There are voices which support the liberalization of movements (De Clercq, 2007),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it should be left completely free (Moses, 2006). Migration needs proper management. If it is properly managed, migration can be beneficial for all states and societies, however, if left unmanaged, it can lead the exploitation of individual migrants and a source of social tension, insecurity and bad relations between nations. Therefore, the challenge in the global discourse is how to structure a migration policy that allows a positive force for economic prosperity and positive contributions.

Fourth, "the favored policy recommendation in the global policy discours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is to increase circular or temporary, as opposed to permanent movement"(ILO, 2005, p. 18). Enhancing temporary migration is adopted as a solution to the brain drain problem. Highly skilled migrants will come back home after a period abroad with improved skills and knowledge. This can lead to an improvement in human capital formation. Temporary migrants are preferred to permanent because it is thought to be more acceptable to the host countries. It is also good for sending countries in that families of temporary migrants will get remittances

5) Cited from Martin Geiger and Antoine Pécoud(2010).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Management*. (pp.21-44). New York: Palgrave Macmillan.

from the person who works abroad. This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ountries of origin (UN, 2006 a).⁶⁾

03 | Methodology

3.1 Who are experts?

This thesis views an expert as "a person who possesses institutionalized authority to construct reality"(Hitzler, Honer and Maeder, 1994, Gordon(1975) and Rammert, 2003) as well as an active participant in community affairs, such as NGOs and local politicians in such a way that they contribute in pluralistic ways to the knowledge production process(Gordon, 1975, Sprondel, 1979 and Schütz, 1964). In conclusion, five experts from diverse fields (academia,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NGO and Corporate) were selected in order to get various viewpoints from different actors (Pfadenhauser, 2003).

3.2 The focus of the interview questions

The interview questions are concerned with experts' perceptions of current immigration and current immigration policies in host societies, especially in regards to Germany and Korea, and includes questions probing experts' opinions about the way immigration is perceived (it's benefits, assets, challenges and threat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similarities in terms of perceptions of immigration between both host countries. Therefore, the same questions were asked in Bielefeld, Germany an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outh Korea to find out shared characteristics in perception of migration despite historical, cultural and geographical differences.

3.3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⁶⁾Cited from Kalm, Sara (2010). Ch.2 Liberalizing movements? The political rationality of global migration management. In Geiger, Martin (Ed.). (2010).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management. Migration, minorities and citizenship*. (pp. 21-44).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Interviewees' responses are anonymized and provided with pseudonyms. The pseudonym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ees are listed below.

In Germany:

- 1) *Michael: a professor in the field of migration studies*
- 2) *Caroline and Sarah: Civil actors who give voluntary help for immigrants, including short term as well as long term help in social aspects*
- 3) *James: a human rights attorney*
- 4) *Peter: Corporate actor and a policy maker in the federal government*
- 5) *David: a politician from a left political party*

In South Korea:

- 1) *Max: a professor in the field of migration studies*
- 2) *Eva: Civil actors who work on human right issues*
- 3) *Marie: a human rights attorney*
- 4) *Amy: a policy maker and researcher at an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 5) *Jan: a politician from a left political party*

3.4 Methods of comparison

This comparative research design is based on a "most different systems"⁷⁾ design, which centers on eliminating irrelevant systemic factors (Adam Przeworski, Henry Teune, 1970). In this research, the selected experts are considered as homogeneous for two reasons. First, as experts are defined as "a person who possess institutionalized authority to construct reality"(Hitzler, Honer and Maeder, 1994, Gordon, 1975, and Rammert, 2003) as well as active participants in community affairs (Gordon, 1975, Sprondel, 1974 and Schütz, 1964), the samples are homogenous in terms of their roles, knowledge and characteristics. Second, five experts are selected equally from different levels (civil, governmental, political and academic), and therefore samples in Germany and South Korea have homogenous characteristics including experts from different levels.⁸⁾ Therefore, finding similarities in perceptions in two countries can eliminate irrelevant systemic differences such as cultural differences, the size of countries, etc. It can furthermore show similarities in relation to dealing with immigration as a global

7) Chapter 2, Research Designs in Adam Przeworski and Henry Teune(1970). Przeworski, Adam.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pp. 31-46). New York: Wiley.

8) 3.3 The interviewing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shows characteristics of experts from different levels.

question in the host countries.

04 | Empirical findings

4.1 Differences in experts' perceptions

4.1.1 Understandings of integration

The empirical data collected in Germany showed that the majority of interviewees criticized the term 'integration' for being only one side of integration, rather than interactions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Also, *Sarah* criticized the prevailing concept of integration by saying that it is indifferent to mutual exchange, although it represents that immigrants should fit into German society. An example from the interview showed that integration is not achieved in a short time but rather needs a longitudinal approach.

In contrast to previous statements, the interviewee who had work experience in the federal government had a more practical view. According to *Peter*, integration is a first step we need in order to use valuable assets from migrants, facilitating a so called win-win effect. Likewise, the concepts of 'integration' and 'incorporation' are debatable. The qualitative data from the majority of interviewees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hat integration include communications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culture so thereby full integration can take place. In this perspective, integration needs a longitudin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from *peter's* perspective integration is a very basic step, which means learning German and having basic knowledge about the society and can be achieved in a short time. The understanding of integration is divided into two parts in Germany, which include short-term approaches as well as long-term approaches. Both approaches show that the concept of integration is varied depending on the actors or organizations (governmental, academia) they use.

However, empirical data gathered in South Korea showed that integration is considered to be assimilation. This is evident in the following statement from *Max*, "*assimilation was the goal of the immigration policy in Korea.*" Furthermore, *Amy* mentioned that the goal of the Korean migration policy is integration. She added, the policy goal aims at living in harmony rather than the antagonism between Korea and

newcomers. However, she also mentioned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of Korean culture. In conclusion, understandings of integration are different in Germany and South Korea. In Germany, the concepts include a short term and a long term process of integration, however, in Korea integration is recognized as assimilation as it is discussed by interviewees.

4.1.2 Understandings of asylum mobility

In Germany, asylum seekers and migrants are distinguish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increasing numbers. All interviewees stated that it is impossible to explain current migration patterns fully without talking about asylum seekers in Germany. Interviewees added that the integration of asylum seekers, including finding work and German language acquisition, are important issues in immigration policy.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asylum seekers, the group of asylum seekers is divided into further diverse groups. According to Aksakal & Schmidt (2015), immigrants differ depending on their length of stay (temporary or permanent), their professions and qualifications (high skill or low skill), their cultural back ground (country of origin) and official category (international students, asylum seekers, seasonal workers etc.). These differences between immigrants can be extended to refugees: Refugees are not a homogenous group, and there are a lot of internal differences in relation to being recognized by the host countries. According to the interviewees, there are existing distinctions between qualifications, the length of stay, cultural backgrounds and religion. Distinctions are mostly based on their qualification, that is, what kind of skill they have.

Next to the distinction between high and low skills, the country of origin also matters. For instance, the situation of asylum seekers from Syria or Afghanistan had to be addressed in a different way because they have been the main target group of the German government since 2015. In contrast to asylum seekers from these countries, asylum seekers from the middle-east or Eastern Europe for instance were not able to get a high level of attention from the media as well as from the German government. *Caroline* mentioned that there is an existing inequality among refugees. She said that people from Syria are favored by the German government, while people from Albania or Eastern Europe, for example, are not treated equally. This supports the idea of Coutin (2011), that how nation states respond to asylum seekers reflects geopolitical interests that reinstate ideas about which groups deserve support at which historical moments.

In contrast, asylum seekers are considered as one type of migrant in South Korea. Max stated, *asylum seekers will not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migrants*.

In addition Amy stated that asylum seekers are one kind of migrants in Korea. Though migration is caused by forcing environments, the effect of migrants in Korean society is generally similar, regardless of economic or humanitarian migration. What is more, despite different policy orientations based on various categorizations in Germany, in South Korea the policies for asylum seekers are generally deficient. Due to 'an absence of policies', there is no remarkable division of asylum seekers based on the previously mentioned characteristics (high/low skills, countries of origin). Different categories of asylum seekers are not developed, and therefore asylum seekers are interpreted as a homogeneous group such that they are vulnerable in terms of residence permit, resource distributions and legal procedures.

Germany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ces in regards to understandings of asylum seekers, divisions of asylum seekers, countries of origins of asylum seekers, numbers of asylum seekers and asylum-policies.

4.2 Similarities in experts' perceptions

4.2.1 Positive understandings of immigration "Immigration helps us"

In Germany and South Korea, immigration is considered to be positive in regards to economic, demographic and labor aspects. Interviewees in both countries agreed that immigration could strengthen the economy by creating economic activation and filling in the rural economy where there are huge outflows of the native population. Immigration can also compensate the work force in the sectors where native-born people are not willing to work. Amy said that as the quality of life improved in Korea after the Seoul Olympics in 1988, Korean people avoided doing low-wage and hard work. Many foreign labor workers are working in the sectors where Koreans do not want to work anymore, even if these Koreans remain unemployed. Similarly, immigrants engaged in low skill jobs or unskilled and low paid positions that local born Germans are not willing to take. Michael said that seasonal migration is important because native-born Germans usually don't take these positions because they want to have long or year-round employment.

In Germany, unlike the Korean experts who mentioned mainly low-skill migrants, the main target group according to the interviewees is high skill immigrants who are

engineers, doctors or nurses. They are welcome and it is easy for them to get a residence permit, housing and social contacts with local people. In Germany, all of the interviewees pointed out that the influx of asylum seekers can be assets to the German society. Germany needs immigration in order to compensate the decreasing fertility rate (Green, 2013). In this perspective, the influx of asylum seekers is recognized as very positive. All of the interviewees agreed that Germany needs migration due to its demographic changes, which are leading to the decrease of numbers in the workforce and fertility. Similarly, in South Korea Max mentioned that *Korea has a large aging population and declining birth rate, which results in the lack of reproduction of the population*. What is more, immigration strengthens the economy in that migrants produce and consume products in host countries. Amy stated that migrants not only contribute to labor force, but also buy products and use resources. In this way immigrants activate the economy.

Finally, immigration can enhance the diversity of culture in both host societies in that immigration makes the society more colorful. The German civil actors claimed that the influx of huge amounts of asylum seekers could make people in the society open-minded and broaden their perspectives. *Marie*, a civil actor, similarly said that *owing to migrants who come to South Korea, Korean culture will be diverse and the uniform Korean society will be plentiful with diversities*. Furthermore, *Amy* mentioned that this diversity is able to contribute to a more tolerant society by producing more diverse life styles within the host society.

4.2.2 Fear & threats: "Immigration helps us, but..."

While there were positive voices about immigration in both countries, negative voices indicating fear exist at the same time. In Germany, *Caroline* said that there are PEGIDA (*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 who are really against refugees. According to *James* people have fear towards immigrants, as they are frightened at unknown and uncertain aspects of new cultures and religions.

In South Korea, interviewees pointed out that there are tendencies for people to overemphasize the criminal cases of immigrants. *Max* said that some people think that the influx of migrants will make the Korean identity divided and blurred. According to *Jan*, a feeling of distance towards foreigners causes the over-estimation of migrant criminal cases. *Jan* mentioned.

Following empirical data from Germany and South Korea, we can see three reasons that produce a fear of migrants. First, unknown and uncertain aspects of new cultures

and religions cause fear. Considering statements from *James* and *Jan*, people have an emotional distance towards unknown aspects of immigrants, which in turn creates fear. Second, what is especially the case in Germany is that local people have to share their resources with asylum seekers because of the huge influx and therefore these sentiments are related to the reality. Third, fear is caused by the news reported in the media. A politician stressed that the news overemphasizes negative incidents. *David* criticized that it can strengthen the public's fear against immigrants, and added that this information can be wrong.

4.2.3 Migration should be properly managed

Interviewees in Germany and South Korea mentioned that migration should be well managed. The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acceptance and that adequate preparations should be done before and after immigrants come. Interviewees in both countries claimed that the role of the host society is important in accepting migrants. Peter mentioned that in terms of asylum seekers, it is important to discern between people who need genuine protection and those who do not. He reported that there is a big debate on how Germany can quickly decide who has the right to claim asylum and who does not, and how Germany sends back people who does not qualify for asylum status. In South Korea, *Am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planning for migration when considering the needs of the host society.

In Germany, as asylum migration is the major issue, all of the German interviewees stated that it is important for asylum seekers to have language courses, job opportunities and contacts with local people. Peter states the importance of state investments. He also said that well-managed immigration is good in that *it creates wealth, employment, business, innovation and consumption*. He claimed that *"if migration is well managed, it enhance equality in the host society because there will be more chances for people"* Sarah and Caroline also mentioned that the possibility to get an education or to get a job is able to help the asylum seekers' quality of life. *James* and *Michael* stressed the importance of social contacts with people from the native society for asylum seekers. *James* claimed that no one wants to be all the time in an asylum camp, and they need socialization as it is very important for their own personal well-being. *Michael* posited that when they are segregated in a separate house, it often leads to depression.

In South Korea, the important issue is to prevent possible conflicts and ghettoization

in advance. Max said that *people are worried that there will be more conflicts, when more people come, therefore, we need to discuss integration issues*. Amy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preemptive actions before the conflicts and antagonism against migrants comes to the surface. Eva stated that the path to acceptance is crucial in regards to asylum seeker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have adequate preparations beforehand, but also manage current foreign residential districts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considering Amy's statement. According to Amy, foreign residential districts can be an attractive and an interesting place where people can enjoy diverse culture and food, but they can also be gloomy and dark areas depending on how the government manages them. She stressed that through proper caring, foreign culture can be an asset.

From the empirical data we can find that experts in both countries from all levels believed that migration needs proper management. This is in line with the global migration discourse, namely that "if it is properly managed, migration can be beneficial for all states and societies, however, if left unmanaged, it can lead the exploitation of individual migrants, and a source of social tension, insecurity and bad relations between nations(Moses, 2006, Kalm, 2010)." This viewpoint also supports the notion that "successful settlement requires active policies from the state (Castles, 1995)", which stressed the importance of roles of states.

4.2.4 Active roles of civil actors

We can find various active roles conducted by civil actors such as local politicia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Germany and South Korea, including criticizing governmental policies, supporting migrants by filling blind areas of governmental policies, and promoting equality and human rights of migrants.

First, in Germany and South Korea, local actors criticized blind spots and the lack of actual help provided by governments. In Germany, James criticized bureaucratic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and therefore claimed that immigrants who need a guidance or information are not able to get enough help from the foreign office. Also, Caroline pointed out a blind area where the German law is not able to support asylum seekers. She mentioned that some asylum seekers are not allowed to learn German by law because people who have permission to stay in Germany are only allowed to learn German.

In South Korea, Eva criticized that the Korean asylum application process focuses on

efficiency rather than fairness. *Jan*, a local politician, also criticized that Korean asylum policies do not provide practical roles that would enable Korea to accept asylum seekers, which is especially apparent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South Korea does not have any municipal ordinances for asylum seekers. Instead, Korea tends to save fa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local actors in both countries criticized global policies for not being effective on the national level. *Caroline, Michael, Marie and Eva* all mentioned that there are disparities between the global policies adopted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ir actual implementation. *Michael* indicated the low impact of European Union policies. *Marie* and *Eva* similarly stated that global migration policies have less impact on a national level.

Second, support for migrants is mainly achieved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ivil organizations in Germany and South Korea. In Bielefeld, Germany, civil organizations help migrants work through problems they face such as institutional problems, juridical problems, and problems in the language course and education. According to *James*, who is a civil actor engaged in a juridical civil organization, the help given by NGOs are big percentage of the total assistance provided to migrants, and this help is very important due to the difficulty that migrants have dealing with bureaucracy. NGOs are therefore giving practical help such as providing assistance at job centers and help in finding places of residence.

In South Kore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elp asylum seekers in the asylum application process. *Eva* mentioned that they are helping asylum seekers to get fair treatment in the asylum-seeking process. She added that the organization also protects asylum seekers'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They also cooperate with an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OG), *save the children*, in order to support children of asylum seekers and help them to get proper medical service. *Marie*, an attorney of human rights, said that her organization helps asylum seekers to get refugee status in the asylum seeking process.

Thir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a character of advocating for social movement, in that they promote human rights and support humanitarian perspectives such as human equality and justice. We can see features of social movement from *James* saying that it is important for us to do something against the freedom of movement, a universal right.

In South Kore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ngage in campaigns for the recognition of improvements for migrants. *Eva* said that she also takes part in

reforming legislations for asylum seekers and reacts to unfair situations affecting asylum seekers. This viewpoint shows the character of social movemen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clusion, we can find tha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local actors (politicians) in both countries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in that they supports human rights, justice, equality and ethical issues. They supplement blind areas in policy that governments are not able to fill through legislations, such as providing language courses for people who do not have residence permit and helping asylum seekers in daily life through assistance in finding housing, medical services, advocating for fair treatment in the asylum seeking process, and giving legal advice for migrants in need. By criticizing the blind spots of governmental legislation and having a voice against unfair legislations for reasons of having a clear moral consciousnes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a character of supporting social movement.

4.3 Reasons fo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4.3.1 Historical and geographical differences

Understandings of integration and asylum seekers are different in Germany and South Korea. In Germany, integration includes short and long term perspectives; however, in Korea integration is perceived as assimilation. The different lengths in immigration history between these countries may be one possible reason for thes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ntegration. The relatively long history of immigration in Germany from 1945 onwards divides the concept of 'integration' into sub-concepts, and at the same time questions and criticisms regarding integration come up in South Korea only in the late 1980s, which is after it became a receiving country.

Furthermore, in relation to divisions of asylum seekers, understandings of asylum seekers, countries of origins, numbers of asylum seekers and asylum-policies differ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differences can be explained by geographical differences, which is one of factors(i.e. geography, finances, available travel routes, ex. flights, accessible land borders, visa options and the networks and routes used by people smugglers) that constrains the journey and destination (Harriet Spinks, 2012). Thus, when comparing Germany to South Korea, Germany is geographically close to Syria and Afghanistan. These are consequently the two countries sending the highest number of asylum seekers.⁹⁾ Also, the increasing number of asylum seekers in Germany

leads to the development of asylum policies and further divisions to the category of asylum seekers into various groups.

4.3.2 The possible reasons for similariti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data, four similarities between Germany and South Korea are observed: 1) immigration is a positive phenomenon 2) however, fear exists as along with the positive perceptions of immigration 3) migration should be properly managed and not left completely free 4)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a social movement character in that they criticize blind spots in policy and fill up areas which are not covered by governmental policies. Why then are there similarities in terms of experts' perceptions of immigr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despite their geographical and historical differences?

An explanation for these similarities can be found in World society theory from J. W. Meyer. According to J. W. Meyer, J. Boli, G. M. Thomas, and F. O. Ramirez(1997), a world that consists of different nation states is structurally similar in many dimensions and subsequently changes in unexpectedly similar ways. Elements of collective world society are easily found in all societies through the economy, policy, culture and social interaction, as world society is composed of rationalized systems of egalitarian justice and participatory representation. We can also observe collective elements from universalistic scientific and professional discours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express similar goals such as human rights and dignities, and isomorphic governmental policies for national development, individual citizenship and rights, environment management, and foreign relations. These universalities are reinforced by globalization, which creates a lot of pressure and chances for organizing and standardizing national and local societies. Therefore, world society theory provides a description of conformities through worldwide models (J.W. Meyer, 2007). In other words, world models influence national and local policies and forms.

World culture theory can be extended to migration policies and how migration is perceived for two reasons. Firs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he 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GCIM),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produce a global migration discourse. In this research, I found that similarities of perceptions of immigration in Germany and South Korea are

9) According to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by United Nations(2015, p.5), Syria (3.9 million) and Afghanistan(2.6 million) are countries who sent the highest number of asylum seekers in 2014. United Nations.(2015).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Highlight.

highly related to the global migration discourse, like as outlined in the section 2.1, 1) migration is a normal phenomenon, but considered positive and in the section 3) migration should be properly managed.

Since nation-states are seen within the context of relationships with other international players such as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Meyer, 1997), the national migration policies and discourses are in turn influenced by the global policies and discourses: "The world culture is diffused through nation states' embeddedness in international and global networks"(p.13). This results in "profound changes to the practices, structures and discourses of the state"(p.14).¹⁰⁾ Likewise, the global migration discourses are diffused through countrys' interplays with other international and global networks, which have an effect on national migration discourses and policies.

Also, structural similarities can be found in Germany and South, like as in the section 4.1.4, the characteristic of social movement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criticize blind spots of governmental policies, support human rights, justice, equality, ethical issues and make up blind areas that governments were not able to fill through legislation. This is related to Meyer's observations tha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similar goals in that they promote models of human rights, environmental regul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human equality and justice. What is more, "they often locate themselves as oppositional movements by criticizing gaps or failure in the implementation of world cultural principles in particular locals and requiring amendment of actions by states and other actors"(Meyer, 1997, p.165). Thus, the social movement characteristic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both countries include similarities in practices, structures and discourses caused by organizations embeddedness in international and global networks.

However, some interviewees criticized global migration policies for having less impact on national levels. There are disparities between what people said and what people actually do. This can be explained by "local decoupling" (J. W. Meyer, 1997, p.166), which means "actors adopt high forms but are unable to carry them out in practice (e.g., human rights)." According to J.W. Meyer (1997), this is because "actors adopt inconsistent structures from different global sources (e.g., educational and labour market policies) or they adopt symbolic frames without substantive meaning." It can

10) Cited from Chapter 1 Drori, Gili S. and Georg Krücken, G. World Society: A Theory and a Research Program in Context Meyer, John W. & Krücken, Georg & Drori, Gili S (2009). *World society : the writings of John W. Meyer.* (pp 3-35).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explain disparities between what people stated and what people carry out in practice. Also, it explains disparities between global policies and their actual implementation on a national level.

05 | Limit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methodology implemented in this research.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Bielefeld, Germany from 2015 August to December and in Seoul metropolitan area, South Korea from 2016 September to October. One region of each country cannot represent the perceptions of the whole countries. For instance, one region can be more progressive or conservative than other regions even though they are in the same country. Furthermore, f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each country and thus the amount of data is not enough to represent the whole country. Therefore, for future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more interviews in different cities and regions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enhance data's representativeness.

More generally, comparative researches are often criticized for "the lack of objective standards of comparability, or to contrasts in data or indicators used (Dunn, 2008:3)." This research used very similar methodologies for data collection in both countries by asking the same questions to interviewees in Germany and Korea with the same qualitative expert methodology in order to overcome this challenge. However, there was an additional challenge due to the wording of survey questions, which can be differently translated and interpreted in very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The translation of the questions was not always easy, as the two countries use words differently in describing the same phenomenon or translated words in Korean had different meanings.

Limitations were also encountered during the interview process. As all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English in Germany, which was a foreign language for both the researcher and the interviewees, the interviewees were not able to understand and fully grasp the questions in the interview process. The local actors mostly had limited English-language skills, and therefore the meaning of some sentences became vague. In South Korea,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Korean with same questions from the interviews in Germany translated to Korean by the researcher. The quotes cited in the thesis were later translated into English. However, some sentences could not be directly translated

from the original sentences due to idioms and sayings that exist only in Korean. Thus, some translations were not able to deliver the exact same meanings and feelings that Korean experts intended to show.

In addition, in both Germany and South Korea there was an over-selection/representation of progressive members in the process of finding interview partners. This can be considered a methodological challenge becaus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se people can be exaggerated to overemphasize positive viewpoints about immigration due to their progressive standpoints that are not necessarily the general opinions of people in Germany and South Korea. This limitation was caused due to two reasons. First of all, explicitly or implicitly, interviewees can be representatives of their organizations, and therefore due to the social desirability they are reluctant to show their own genuine opinions. Instead, they tend to show opinions that are socially desirable. Similarly, interviewees tend to show opinions which fits into features of their organizations.

Bibliography

- According to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by United Nations(2015, p.5), Syria (3.9 million) and Afghanistan(2.6 million) are countries who sent the highest number of asylum seekers in 2014. United Nations.(2015).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Highlight.
- Aksakal, M. & Schmidt-Verkerk, K. (2014): New Migration Trends in Germany – Characteristics, Actors and Policies Working Paper 128/2014. COMCAD – Center on Migration, Citizenship and Development. Bielefeld. p. 5–11.
- Castles, Stephen. (1995). How nation-states respond to immigration and ethnic diversity, *New community: European journal on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the journal of the European Research Centre on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21(3), pp. 293–308.
- Castles, Stephen. (2010). Understanding Global Migration: A Social Transformation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 Migration Studies*, 2010, 36, 10, 1565.
- Chapter 2, Research Designs in Adam Przeworski and Henry Teune(1970). Przeworski, Adam.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pp. 31–46). New York: Wiley.
- Chapter 2, Research Designs in Adam Przeworski and Henry Teune(1970). Przeworski, Adam.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pp. 31–46). New York: Wiley.
- Coutin, S. B. (2011). Falling Outside: Excavating the History of Central American Asylum Seekers. *Law & Social Inquiry*, 36(3), 569–596. doi:10.1111/j.1747-4469.2011.01243.x
- Dunn, Kevin M. and Kamp, Alanna. Chapter 3 The Virtues and Challenges of Comparative Analyses of Immigration, Migrant Settlement and Transnationalism. In Castles, Stephen (Ed.). (2015). *Social transformation and migration. Migration, diasporas and citizenship*. Houndmills [u.a.]: Palgrave Macmillan.
- Geiger, M. and Pécoud, A.(2010).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Management* (pp.21–44).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ordon, R. L. (1975). Interviewing: Strategy, Techniques, and Tactics(Homewood: Dorsey Press). In Michael Meuser and Ulrike Nagel(2009). The Expert interview and changes in Knowledge production, In Alexander Bogner, Beate Littig and Wolfgang Menz.(2009). Research Method series; Interviewing experts, pp. 17–23. United Kingdom: Palgrave Macmillan.
- Green, S. (2013). Germany a changing country of immigration, *German Politics*, 22(3).

- Hitzler, R., Honer, A. and Maeder, C. (1994) Expertenwissen. Die institutionalisierte Kompetenz zur Konstruktion von Wirklichkeit(Opladen: Westdeutscher Verlag). In Interviewing experts. (2009). *Research methods series*. pp 25.Basingstoke, Hampshire [u.a.]: Palgrave Macmillan.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5/02000000000AKR20170515141900002.HTML?input=1195m>
- Kalm, Sara(2010). Ch.2 Liberalizing movements? The political rationality of global migration management. In Geiger, Martin (Ed.). (2010).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management. Migration, minorities and citizenship*. (pp. 21-44).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Martin Geiger and Antoine Pécoud(2010).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Management*. (pp.21-44).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eyer, John W & Boli, John & Thomas, George M & Ramirez, Francisco O. (1997). World society and the nation-state. In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103 (n1), p144(38). pp. 144-181
- Meyer, John W. (2000). Globalization: Sources and Effects on National States and Societies, in World society and the Nation-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3, No. 1. pp.156-169
- Moses, J. W. (2006). *International Migration: Globalization's Last Frontier*, London: Zed Books.
- Pfadenhauser, M. (2002). Auf gleicher Augenhoehe reden. Das Experteninterview-ein Gesprach zwischen Experte und Quasi-Experte. In Alexander Bogner, Beate Littig and Wolfgang Menz.(2009). *Interviewing experts*, pp 25. United Kingdom: Palgrave Macmillan.
- Przeworski, Adam. (1970).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pp. 31-46). New York: Wiley.
- Schütz, A.(1964). The well-informed citizen: An essay on the social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collected papers, Vol.2, pp.120-34.
- Spinks, Harriet & Australia. Dept. of Parliamentary Services. Parliamentary Library (2013). *Destination anywhere? [electronic resource] : Factors affecting asylum seekers' choice of destination country*. Parliamentary Library, Canberra.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6).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5: Highlights* (ST/ESA/SER.A/375), pp.1-36.

토론

"The similarities between perceptions of immigration according to experts: a study based on expert interviews from Germany and South Korea" 토론문

손인서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이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이민 전문가 각 5인과의 인터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민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immigration)을 조사하였다. 신제도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이주담론이 개별국가 이민전문가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 있다. 기존 이민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로 개별 국가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연구는 국제기구 등 글로벌 요인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요청된다. 첫째, 연구가 가정하고 있는 글로벌 이주담론(global migration discourse)은 이주에 특수한 제도, 문화, 혹은 규범으로 간주하기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이로 인해 연구결과에서 각국의 전문가가 공유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인식”은 이주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현실)이나 제도/정책 일반에 대한 주장들인 경우가 많아, 글로벌 이주담론의 효과로 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연구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둘째, 연구는 개별국가 전문가의 “인식”을 통해 글로벌 이주담론의 영향을 조사하면서 방법론으로서 질적연구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화가 부족하다.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진술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일반적 서술과 태도, 그리고 의견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안에 대한 의미, 이해,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perception)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연구의 목적이 국가 수준에서 글로벌 담론의 제도/정책적 영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술의 이해나 인식 보다는 제도나 정책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보충으로 전문가 인터뷰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는 국가간 비교연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례의 선정과 분석방법에 대한 정당화와 설명이 요청된다. 필자는 이민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제도적 배경이 매우 다른 한국과 독일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면서 “most different systems”설계를 인용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사례선정에 대한 정당화를 찾기 어렵다. 또한, 연구의 주장대로 국가별 조건과 맥락이 글로벌 담론의 채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자료수집의 방법과 분석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연구는 국가별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 5인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정당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연구대상자의 선정방법 및 인터뷰 방법, 그리고 인터뷰 자료의 분석 방법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유사성에 치중하면서도 국가간 정책/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비록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연구를 수정한다면 보다 설득력있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이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에 치중하기 보다는 한정된 정책(일례로 난민)에 초점을 조사한다면 그 영향요인에 대해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